

<한일관계사학회 학술회의>

- 역사적으로 본 한일 양국의 갈등과 화해-

■ 일시 : 2019년 6월 8일(토) 오후 1시 ~ 오후 6시

■ 장소 :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610호

■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사회 : 허지은 (서강대)

■ 제1주제 : 고대 일본과 신라의 대립·갈등과 화해-‘백촌강 전투’ 후의 국교 재개 과정
발 표 : 나행주 (건국대)

■ 제2주제 : 고려와 조선의 금구(禁寇)외교와 일본의 대응
발 표 : 김보한 (단국대)

■ 제3주제 : 인조 즉위초 후금 대비책과 회담겸쇄환사(1624년) 파견
발 표 : 이훈 (한림대)

■ 제4주제 : 막말-메이지 초기 한일간의 갈등
발 표 : 현명철 (서울대)

■ 제5주제 : 문화재 반환 문제로 본 한일 간 '화해'의 가능성
발 표 : 류미나 (국민대)

<종합토론>

사회 : 연민수 (부경대)

토론자 : 송완범(고대), 장순순(전주대), 김태훈(단국대), 박한민(고려대), 최종길(동아대)

고대일본과 신라의 대립·갈등과 화해-‘백촌강 전투’ 후의 국교 재개 과정-

나행주(건국대)

- 1 서언
- 2 왜국(일본)의 한반도 정책
- 3 백촌강에의 道程
- 4 왜국(일본)과 신라의 국교재개
- 5 결어

1 서 언

국제관계에 있어 최종적인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이며 성공한 외교의 결과가 곧 우호에 기초한 상호교류이며 화해협력이다.

즉, 국가 간의 대외관계에 있어 극단적인 정치군사적인 대립·갈등의 최종결과는 종종 전쟁으로 수렴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들 수 있는 것이 고대한일관계에서 초래된 한중일 고대동아시아 3국이 서로 어우러진 최초의 국제전쟁, 다름 아닌 663년 8월의 ‘백촌강 전투’이다. 이 전투의 결과는 승자인 신라에게도 패자인 일본(왜국)에게도 많은 상처를 남겼으며, 특히 고대 일본인의 신라인식(극단적인 증오감과 신공황후의 신라정벌 신화 창출 등), 더 나아가 한반도 인식(멸시관 및 변국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남겼다. 한편, 전쟁으로 파탄을 맞은 양국의 국제관계는 이윽고 역사적 화해 즉 관계의 회복, 전쟁의 치유로 향하는데 668년 신라에서 일본으로의 ‘화해’사절 파견에 의한 일본과 신라의 국교 재개이다. 백촌강 전투 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본 발표에서는 663년 8월의 백촌강 전투에 이르는 고대 한일관계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①왜국(일본)의 한반도 대외정책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개관한 후, ②백촌강 전투와 관련된 몇 가지 기본적인 논점을 정리해 보고, 이를 기초로 ③백촌강 전투 5년 후인 668년 9월에 이루어진 신라와 왜국(일본)의 국교 재개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를 반추해 보고,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한일관계를 비추는 거울로 삼고자 한다.

2 왜국(일본)의 한반도 정책

백촌강 전투 전후 시기까지의 왜국(일본)의 한반도 정책의 전개과정을 간단히 개조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세기 이전

가야제국과의 우호관계를 중심으로 신라와는 때때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왜의 신라침공 사실이 상징하는 것처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본적으로 우호관계 유지

이를 반영하는 것이 5세기 이전의 토기제작, 조선, 제철, 직기술 등 왜국의 기술체계가 가야·신라계통이라는 사실

-5세기 이후~645년 대화개신 이전 친백제 일변도

이 시기의 왜국(일본)의 대외관계는 기본적으로 백제와의 최상의 우호친선동맹관계를 중심으로

로 전개

이러한 양국관계를 상징하고 매개하는 것이 바로 ‘왕족’외교, ‘질’외교, ‘화친’외교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백제와 왜국 간의 빈번한 교류교통이며, 각종각양의 선진문물과 인적자원의 제공·수용, 지배체제[5세기 웅락조의 府官제(부관제적 질서) 및 人제, 6세기 계체·흙명조의 部民제와 屯倉제, 7세기 추고조의 관위제와 僧綱제(불교통제기관), 각종 사상과 특수기능 및 기술(유학·불교·역법·천문 및 기악·양봉·조원 등), 7세기 후반의 역사서 및 율령의 편찬 등)의 수용과 이식 등.

*참고-<표1~2-왜국과 백제 및 신라의 견사왕래표>

-645년 개신정권(효덕정권)이후 친백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친신라·당의 양면외교

그 상징이 신라의 ‘질’체제 성립

신라의 질의 래왜: 김춘추(647)-김다수(649)-미루(655)

최초의 신라의 승과 신라의 학자(시학사)의 존재

신라식의 지배체제와 기술체계 수용[효덕조의 관위제, 관직제, 관등제(4등관제), 지방제도(評제), 불교 및 불교통제기관(十師제), 학제 및 대학, 각종 수공업생산기술자(才伎)

-651~653년 이후 제명·천지조의 친백제 노선으로의 복귀

이후, 백촌강으로의 길을 걷게 됨

<표1-백제·왜국 간에 제공·수용(혹은 요청)된 인적 및 물적 자원>

번호	시기(출전)	내용(人과 物의 왕래)
1	応神14<403>-2	衣縫工女
[1]	三国史記腆支王即位前紀	腆支帰国時 兵士100인
2	應神15<404>-8	阿直伎, 良馬 2 匹
3	同 1 6 <405>-2	博士王仁 및 製鉄技術者, 織物技術者, 釀造技術者, 論語10권, 千字文1권 등 (古事記 応神段)
4	雄略 7(463) 시세	今來才伎(新漢陶部, 鞍部, 畫部, 錦部, 譯語 등)
5	繼体即位前	銅鏡製作技術者2인(隅田八幡宮藏人物画像鏡)
6	繼体6(512)	珍物
[2]	繼体6(512)-4	馬40匹
7	繼体6-12	珍物·任那 4 県 요청
[3]	繼体6	己汶·帶沙 할양
8	繼体7(513)-6	五經博士段楊爾·己汶·帶沙 요청
[4]	繼体9(515)-2	筑紫兵士 500명<<東城王帰国護衛兵?>>
9	繼体10(516)-5	衣裳·斧鉄 등 国珍
10	繼体10-9	五經博士高安茂交代派遣
11	繼体23-3	多沙津要請
[5]	繼体23-3	백제의 多沙津 요청에 왜왕권이 賜與
12	続日本紀 天平宝字 2 - 4 条	德来<医業関連特殊技能者>
13	安閑 1 -5	不明(「調」)
14	宣化朝	仏教公伝<<만약 538년에 仏教公伝이라면 승려 및 불상, 경전 등 불교관련물이 보내졌을 가능성이 크다>>
[6]	宣化2-10	大伴의 원군(임나·백제구원군)
15	欽明4(543)-9	扶南財物、奴2軀<<南朝梁에서 직수입한 그대로 왜국으로 증여함.>>
16	欽明5(544)-3	学者汶休麻那
[7]	欽明6(545)-3	膳臣의 원군
[8]	欽明7(546)-1	良馬70匹, 船10隻

17	欽明7(546)-6	調物
18	欽明8(547)-4	學者 東城子言 교체파견
[9]	欽明9(548)-10	築城 인부 370인
[10]	欽明11(550)-3	矢30具
19	欽明11(550)-4	고구려 虜6軀、고구려 捕虜10軀
20	欽明12(551)	内外典·葉書·明堂圖 등의 각종 서적164권, 불상 1軀, 伎樂度 1 具
[11]	欽明12(551)-3	麥種1千斛
21	欽明13(552)-10	釈迦仏 金銅像1軀, 經論, 幡蓋 약간
[12]	欽明14(553)-6	良馬2匹, 船2隻, 弓50杖, 箭50具 등 각종 자원 제공요청
22	欽明15(554)-2	학자·오경박사·승려(9인)·易博士·曆博士·医博士·採葉師(2인)·樂人(4인) 등 교체파견
[13]	欽明15(554)-5	兵1千, 馬100匹, 船40隻
23	欽明15-1	珍物(好錦2匹, 斧300具 등)
[14]	欽明17(556)-1	兵仗養馬 다수 및 衛送軍 1천명
[15]	敏達6-5	大別王을 파견 인적자원제공 요청
24	敏達6(577)-11	經論 약간, 律師·禪師·比丘尼·呪禁師·造仏工·造寺工 등 6인의 인적자원 파견<<大別王을 통해서>>
[16]	敏達11(582)	鹿深臣을 파견해 요청
25	敏達13(584)-9	彌勒石像1軀, 仏像1軀 등<<鹿深臣을 통해서>>
26	崇峻1(588)-是歲	仏舍利·僧(律師外5인)·寺工2인·鑪盤博士·瓦博士4인·画工 <<飛鳥寺 건립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27	推古元年(593)	博士覺智
28	推古3(595)-是歲	僧慧聰
29	推古5(597)-4	王子阿佐
30	推古7(599)-9	酪駝, 노새, 양, 백치 등 珍物
31	推古10(602)-10	觀勒, 역본, 천문지리서, 둔갑방술서
32	推古20(612)-是歲	造園(造景)術、伎樂의 전래
33	舒明11-7, 同11월 是月条	百濟大寺 및 百濟大宮의 조영
[17]	皇極元-8	大船, 同船 3척
34	皇極元-9	百濟大寺<<造寺·造宮관련 자원 제공의 가능성이 큼>>
35	皇極2-是歲	養蜂術 전래 <<豊章>>
36	효덕·제명조(645-660)	赤漆槻木廚子, 碁盤, 碁石, 銀平脫合子, 각종 악기 등 <<의자왕이 中臣 鎌足에게 증여, 정창원문서>>
37	제명2(656)-9	앵무새 1쌍
38	제명3(657) 시세	낙타 1필, 노새 2필
[18]	제명 7(661)-9	군사 5천명
[19]	천지1(662)-1	화살 10만 척, 絲 5백근, 면 1천근, 포 1천 端 등
[20]	천지1-3	포 3백단
[21]	천지1-5	수군 170척
[22]	천지2(663)-3 동-8	병력 2만7천명 군사 1만여 명(추가 파병 중)

<표2-신라·왜국 간에 제공·수용(혹은 요청)된 人的 및 物的資源>

번 호	시기(출전)	내용(人과 物의 왕래)
[1]	允恭紀3-1	良医 요청
1	同3-8	의사 파견
2	允恭32-1	각종 樂人80인, 각종 악기
3	神功攝政5	제철 등 각종 기술자
4	応神31-8	能匠(木工・造船・建築・土木 기술자)
[2]	敏達4(575)-4	「任那의 調」제공요청
5	同4-6	「任那의 調」제공
6	同8(579)-10	불상 등
[3]	同13(584)-2	「任那의 調」제공요청
[4]	同14(585)-3	「任那의 調」제공요청 豫定(중지)
[5]	崇峻4(591)-11	「任那의 調」제공요청
[6]	推古8(600)	「任那의 調」제공요청
7	동18(610)-7・19-8	「任那의 調」제공
8	동31(622)-7・是歲・11	「任那의 調」제공 및 仏像一具・金塔・舍利・大觀頂幡一具・小幡十二條<<仏教公伝試図>>
9	舒明10(638)・是歲	「任那의 調」제공
[7]	皇極元(642)-2	「任那의 調」제공요청
[8]	孝德大化元(646)-9	「質」제공요청
10	동大化3(647)	金春秋:孔雀・鸚鵡各 1 雙(848년 삼한에 학문승 파견)
11	同大化5(649)	金多遂: 僧 1명, 才伎 10인 등 총37인
12	同白雉元年(650)	新羅侍学士
13	齊明元年(655)	彌武:才伎12인
[9]	천지7(668)-9	김유신에게 선 1척(藤原鎌足으로부터), 문무왕에게 調船 1척 증여
[10]	천지7-10	신라 문무왕에게 絹 50필, 錦 50근 선사

3 백촌강에의 도정

백촌강 전투는 한국, 일본, 중국이 동시에 참전한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로 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재편시킨 대사건으로서, 백제부흥운동의 실패 즉 백제의 최종적인 멸망으로 귀결하였고, 패전국이 된 왜국(일본)은 당·신라연합의 침공이라는 위협 아래 극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지배체제 재구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승전국인 신라는 당과의 대립을 극복하고 마침내 삼국통일의 주인공이 되었고, 간접적으로 참여한 고구려 역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어 이윽고 멸망하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한일관계사에 있어서 백촌강 전투의 역사적 의의는 대체로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된다. (가)한반도에서의 일본세력의 철수, (나)일본율령국가 성립의 중요한 기점(계기), (다)백제계도래인(백제망명세력 및 유민)의 대거 유입과 일본고대 율령국가 형성에의 기여 등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적 의의를 지닌 백촌강 전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후일을 기하고, 여기에서는 우선 궁금한 몇 가지 기본적인 쟁점-①백제구원군의 구성 및 병력문제, ②규슈지역과의 관련성, ③왜국의 백제구원군 파견 배경 및 이유 등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치기로 한다.

우선, 660년 백제멸망 이후 백촌강 전투에 이르는 왜국(일본)의 움직임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백제멸망 후 좌평 귀실복신으로 대표되는 백제의 유신들은 백제부흥운동을 전개해 왜국(大和 조정)에 대해 백제왕자 풍장의 귀환과 원군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명천황은 추고조 이래 중단되었던 한반도출병을 결의해 제명7년(661) 정월 원군을 이끌고 해로로 출진했다. 娜大津

(후쿠오카현 하카타) 岩瀬行宮에 도착하여 長津宮이라 칭했는데, 나아가 오지에 위치한 朝倉에 행궁을 옮긴 후 동년 7월 朝倉宮에서 한반도에 병을 보내지 못한 채로 사망한다.

황태자 중대형은 母帝 제명에 대신하여 칭제한 채로 ‘水表의 軍政’을 맡게 되어 다시 長津宮으로 본궁을 옮기고, 662년 5월 제1차구원군으로서 대장군 阿曇比羅夫가 이끄는 船師 170艘의 5000병사가 풍장을 호송하여 백제에 출진한다.

한편 당군은 백제부흥군의 세력이 약해지지 않아서 본국에 원군을 요청하여 663년 孫仁師가 이끄는 7000의 원군이 웅진으로 향하는 본진과 합류하여 부흥군의 거점이었던 周留城(금강하류 우안)을 공격했다. 이에 앞서 중대형은 동년(663) 3월, 전장군 上毛野稚子, 중장군 巨勢神崎臣譯語, 후장군 阿倍引田臣比羅夫가 이끄는 2만7천의 제2차구원군을 파견했는데, 동년 8월 백촌강에서 나당연합군과 조우해 해전을 치르게 된다.

<<일본서기>>천지기 2년(663)8월조는 당시의 전투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당의 軍將, 戰船 170艘를 이끌고 白村江에 진열하다. 일본의 船師 가운데 처음 도착한 자와 대당의 선사가 서로 맞아 싸우다. 일본 패하여 물러나다. ……대당은 곧 좌우에서 배를 협격하여 공격하다. 순식간에 관군이 패하다. 물에 떨어져 익사한 사람이 부지기수이다. 배의 앞뒤(舳艫)를 움직이지 못하다.

한편 <<삼국사기>> 문무왕 龍朔3년조에는

왜국의 병선이 와서 백제를 돕다. 왜선 千艘가 정박하여 白沙에 있다.

<<구당서>>에는 유인궤의 수군이 백촌강에서 왜군과 조우하여 ‘그 선 四百艘를 불태우다(焚)’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이 백촌강 전투의 모습인데 이 후 주류성도 함락되어 백제부흥운동은 마침내 종말을 고한다.

참고로, 660년 10월의 왜국에 대한 구원군의 파견 및 백제왕자 여풍장의 귀국 요청에서 663년 8월의 백촌강 전투에서의 패배까지의 과정을 일본서기 기사를 중심으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백촌강 전투 관련 연표>

연 도	일본서기 관계기사	비 고 (삼국사기·구당서 등 기사)
660(제명6)	10월, 백제의 좌평 귀실복신, 사자를 보내 당군 포로 100여인을 동반하고 來朝, 구원군의 파견과 백제왕자 여풍장의 귀국을 요청. 12월24일, 귀실복신의 요청에 응해 구원군의 파견을 결정, 난파궁에 행행하여 그곳에 軍器를 배치함.	
661(제명7)	이해, 백제구원에 사용할 배를 駿河國에 건조하게 함. 그러나 이유 없이 배의 舳艫가	

	휘어짐. 1월7일, 제명천황, 西征을 위해 難波를 出帆. 4월, 백제 귀실복신, 견사·상표하여 재일 왕자 풍장(紉解)의 송환을 요청 7월24일, 제명천황 물, 황태자 중대형 칭제 8월, 백제구원을 위해 전장군과 후장군을 임명해 파견. 무기와 식료 등을 보냄. 9월, 백제왕자 풍장에게 織冠을 수여, 多蔣藪의 妹를 처로 삼음. 이어 狹井檳榔 등에게 병사 5000여명을 주어 본국으로 衛送하게 함.	*풍장 귀국 관련, 662년5월의 기사와 중복
662(천지1)	1월27일, 鬼室福信에게 矢10만隻, 絲500근, 綿 1000근, 布1000端, 韋1000張 및 稻種 3000斛을 내림. 3월4일, 백제왕(여풍장)에게 포 300단을 줌. 5월, 대장군 阿曇比羅夫 등에게 船師 170艘를 이끌고 풍장 등을 백제로 보내도록 함. 이해, 백제구원에 대비해 兵甲을 수선하고 船舶을 준비하고 兵糧을 비축함.	*풍장 귀국 관련, 661년9월의 기사와 중복
663(천지2)	3월, 전장군·중장군·후장군으로 구성된 백제 구원군에게 2만7천인을 내려 신라를 정토하게 함. 6월, 백제구원 일본군 전장군 등 신라의 2성을 공략 8월13일, 풍장, 여러 장수에게 일본의 구원군(健兒 1만 명) 盧原某 등이 마침내 도착한다고 말하고 이를 맞이하기 위해 백촌강으로 나감. 8월27일, 백제구원 일본군의 선봉, 백촌강에 이르러 당군과 전투, 불리하여 물러남. 8월28일, 일본군 백촌강에서 다시 당군과 전투, 대패함. 익사자 다수. 백제왕 풍장, 고구려로 도망감	삼국사기 문무왕11년7월26일조 왜의 병선 1천척 백강에 정박 구당서, 유인궤의 수군이 왜병과 조우 배 400艘를 불태움

①백제구원군의 구성 및 병력문제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 구원군의 총규모는 선발대(별동대) 5천[661년9월], 제1차 파견군 170艘[662년5월], 제2차 파견군 2만7천명[663년3월], 제3차 예비군 1만의 건아[663년8월]로 기록되어 있다.

병력의 규모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하고, 왜국이 당시의 국력을 총동원해 보낸 백제파견군의 구성에 관해 鬼頭清明씨는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1)백제파견군의 중추기구인 장군 등의 지휘체계에는 아직 관료적·율령적 성격이 보이지 않고 호족연합군적인 느슨한 결합이었다는 점, (2)이들 파견군에 참가한 군대는 기내 호족군과 지방호족군이 있으며, 전자는 가내노예제군이라 말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점, (3)지방호족군은 국조제를 매개로 하여 편성된 것이라는 점 등이다. 총괄해서 말하면 파견군은 강고한 관료제를 기초로 하는 율령적 군대가 아닌 극히 원초적인 유제를 남기고 있는 筑紫에 본영을 둔 천황 및 중대형에 대한 인격적 종속제를 유대원리로 하는 군대였으며, 지방호족군이 야마토정권의 백제파견군에 참가하게 된 것은 국조제라고 하는 정치적 신분제를 매개로 하여 실현된 것이며, 이 시기에 있어서도 국조제는 군대의 차출과 인솔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고 이해되고 있다(鬼頭 1997, 170-171쪽).

②규슈지역과의 관련성

이러한 왜국의 군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백제의 구원군으로 출병해 당군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훗날 귀국하게 된 사람들의 리스트이다(板楠 1991, 239쪽의 <제11표> 참조).

<표4-백제구원군 포로 귀환자 일람>

귀국년	출신국·군	인명	출전
천지3년		土連連富杼 氷連老 弓削連元寶	지통기4-10조
천지10년	筑紫	筑紫君薩野馬	천지기10-11조
천무13년	筑前 那珂	筑前三宅連得許 猪使連子首	천무기13-12조
지통4년	筑後 上陽咩	大伴部博麻	지통기4-9조 지통기4-10조
지통10년	伊豫 風速 肥後 皮石	物部藥 壬生諸石	지통기4-10조
문무경운4년	筑後 山門 讃岐 那珂 陸奥 信太	許勢部 形見 錦部 刀良 生王 五百足	속기 경운4-5조
	伊豫 越智	大領先祖 越智直	영이기 상권 제17
	備後 三谷	大領先祖	영이기 상권 제7

우선 출신지가 명기된 경우를 보면 陸奥의 일례를 제외하고 筑紫1, 筑前1, 筑後2, 肥後1, 伊予2, 讃岐1, 備後1로 되어 있다. 우선 畿内 이서의 西國이 90%로 그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총 10사례 중 그 절반에 해당하는 5례가 九州지방의 사람들이다. 다음으로 출신계층으로는 國造 및 郡司층 4, 部姓者 6으로 되어있다. 지통기 4년11월조에 의하면 大伴部博麻는 당시 당의 왜국 정벌을 위한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 소식을 고국에 전하고자 방도를 찾고 있던 筑紫君薩夜麻, 土師連富杼, 氷連老, 弓削連元寶의 4명을 귀국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고 30년간 당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이 5인 가운데 1인만이 部姓者인데 신분적으로 낮은 大伴部博麻가 가바네(姓) 소유자 4인을 우선 귀국시키기 위해 당에 오랫동안 잔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자료에 대한 岸俊男씨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대장군 지휘 하에 실제로 출정군을 구

성한 것은 율령제하의 국군제로 이행하면서도 서국의 국조와 배하의 병사로 구성되는 ‘국조군’이 그 중심이었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구주지역의 국조군이 군사력의 중추를 이루었다고 이해되고 있다(岸俊男, 1966).

특히 九州의 국조군은 이미 지적이 있는 것처럼 大化전대부터 야마토정권의 외정군으로 자주 동원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웅락기23년(479) 4월조에 백제와 함께 고려(고구려)를 친 인물로 보이는 筑紫安置臣과 동 馬飼臣을 비롯하여 肅明기15년(554) 12월조에는 백제 왕자 여창을 구한 궁의 명수 축자국조 鞍橋君의 활약상이 특필되어 있으며, 肅明기17년(556)정월조에는 백제왕자 혜의 귀국에 즈음하여 용사 천명을 이끌고 津의 요로를 지킨 筑紫火君, 마찬가지로 肅明조에 大伴連金村을 따라 海表에 사자로 보내진 葦北國造靺鞨部 阿利斯登(민달10년 시세조)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결국, 백촌강 전투의 왜국 내 최대의 피해자·지역은 규슈지역 및 그 주민들이었다.

백촌강 전투 관련 몇 가지 기본 사항 정리

일본서기의 백제구원군 파견 관련 기사에는 중복이나 연차에 혼란이 보이고 있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일조차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면, 귀실복신이 여풍장의 귀환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 660년(제명6)10월과 다음 해 4월의 일로 중복되어 보이고 있으며, 백제에서 唐俘(당군 포로)를 보냈다는 기사도 660년 10월과 다음해 11월의 기사에도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인물로 요청된 부여풍을 백제까지 호송한 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661년 9월과 662년 5월의 일로 중복되어 나오고 있다.

661년 7월, 朝倉궁에서 제명 물. 중대형 여제의 의지를 이어 長津궁에서 ‘水表軍政’을 지휘
661년 9월, 백제왕자 풍장에게 織冠을 수여, 多蔣藪의 妹를 처로 삼음. 이어 狹井檣榔 등에게 병사 5000여명을 주어 본국으로 衛送하게 함(이하, 가)

662년 5월, 대장군 阿曇比羅夫 등에게 船師 170艘를 이끌고 풍장 등을 백제로 보내도록 함(이하, 나)

662년 8월, 阿曇比羅夫連·阿倍引田比羅夫臣 등 5명을 전후의 장군에 임명, 구원군 제1진을 파견

위의 기사 중 (가)와 (나)를 비교해보면, 풍장의 귀국 시기는 물론 풍장을 호송한 장군명이나 병력면에도 상호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풍장의 귀국시기에 대해서는 백제고지의 백제부흥군에게 있어 부흥운동의 구심점으로 새로운 백제왕으로 삼기 위해 요청한 풍장의 귀국은 매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 662년 5월보다는 (가)의 661년 9월의 시기가 보다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풍장을 귀국시킨 호송군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대장군 阿曇比羅夫 일행보다는 역시 (가)의 狹井檣榔 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阿曇比羅夫는 풍장 귀국 후 1년 남짓의 대규모 백제구원군 파견 준비를 거쳐 662년 8월에 건너간 2만7천명의 구원군 본대를 이끄는 5명의 장군 가운데 필두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풍장 호송군의 규모 문제로 (가)의 5000명과 (나)의 船師 170艘의 관련성이다. 양자를 동일한 실체(하나의 병력)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별개(두개의 병력)로 볼 것인가에 따라 병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라면 5000명=170艘의 船師가 되고, 후자라면 5000+170艘의 선사가 된다.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약 1만 명 가까운 병사가 풍장의 호위를

목적으로 파견된 것이 된다.

결론적으로, 661년 9월 왜국이 파견한 실질적인 백제구원군의 제1진이라 할 수 있는 병력은 5000명으로 이들이 170척의 배에 분승하여 풍장을 호송해 백제에 도착한 것으로 이해된다. 당시의 조선술이나 다른 사례를 감안하면, 배 1척에 30~50명 규모의 병사들이 승선한 것으로 추정되어 170척에 각 30명의 병사가 승선했다고 하면 바로 5000명 전후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이다.

③왜국의 백제구원군 파견 배경 및 이유

왜국의 백촌강전투 참전 즉 백제구원군 파견 이유 및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해가 제시되어 있다.

귀소전쟁=조국해방전쟁

일본열도위기관(山尾)=방어전쟁=예방전쟁(김현구, 송완범)

제국주의전쟁-소중화적 이해(석모전, 귀두, 최근의 구마가이 기미오 등)

선진문물도입설(鈴木)

무대책 무정견의 원군파병(모리 기미아키) 등

백촌강 전투에 대한 이해는 한중일 삼국이 함께 참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당시의 사정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러한 점에서 각국의 내부사정을 검토하여 수당교체기의 중국의 고구려에 대한 민감한 의식, 대화개신 이후의 왜국의 외교노선 혼란이라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 교두보를 유지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중국과 일본이 파병을 했다고 보는 이해(김현구, 2006)는 향후의 연구에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백촌강 파병의 원인과 관련해 일본열도의 국방상의 위기관 및 장기간에 걸친 선진문물 공급처로서의 백제의 상실이라는 국내적 요인과 함께 백제가 장기간에 걸쳐 왕족외교에 기초해 구축한 친연관계를 바탕으로 한 구원요청이라는 외적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견해(연민수, 2003)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건-372년의 칠지도의 증여로 성립된 국교개시 이래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왕족(질)외교의 결과 형성된 백제와 왜국의 우호결호에 기초한 친연관계, 양국의 특수한 관계사를 전제로 하면 왜국 조정이 선택한 백촌강으로의 길은 당연한 귀결로 이해된다.

645년6월의 개신정권의 성립 이후 왜왕권의 외교노선에 약간의 궤도수정이 가해져 종래의 백제일변도에서 백제와의 우호(친백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신라-당과의 친선도 중시하는 소위 양면외교가 10여 년간 지속되었으나, 651년의 당 고종의 신라 원조 천명, 이에 따른 반동으로서의 653년8월의 의자왕과 왜국의 ‘結好’(삼국사기 의자왕13년8월조)는 효덕정권이 추진한 대외노선을 다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었다. 그 긴박함을 반영하여 파견된 견당사가 바로 654년의 제3차 견당사이다. 이는 전년에 파견된 제2차 견당사가 귀국하기 전에 급히 파견된 점, 당에 건너가기 전에 신라에 상당 기간 체류하면서 신라와 교섭한 점, 견당사의 최고 책임자로 이전 신라 김춘추와의 교섭을 직접 담당했던 고향현리가 압사로 임명된 점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왜국에게 있어서는 결코 백제와 신라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背に腹は代えられない).

여기에 60을 넘긴 노구의 제명여제가 적극적으로 직접 친정에 나선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기

로 한다. 한마디로 백제지향!!

우선, 백제대궁과 백제대사의 조영에 보이는 것처럼 황극=제명여제에게는 백제와의 깊은 관련성·친연성이 확인된다. 또한 황극여제 시절의 이루카와의 아픈(?)추억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즉 을사의 변으로 주살되기 전까지 함께 친백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결과로 맞은 소가노 이루카의 죽음, 특히 백제멸망의 보를 접한 여제에게는 5년 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을사의 변 현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한 이루카의 마지막 항변 “신에게 과연 무슨 죄가 있습니까?”라는 유언도 망령처럼 되살아나지 않았을까?

나아가, 제명천황 즉위 후에 일으킨 도성건설 등 각종 토목사업과 북방의 에미시 정복 사업이라는 ‘興事’도 일정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서기가 ‘狂心渠’라 표현한 직선 거리 약 12킬로미터에 이르는 香山(香久山)과 石上山에 걸친 渠(운하) 굴착을 비롯해 제명여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각종 왜경 건설사업 즉 소위 ‘石의 왕도’ 사업[酒船石유적, 길이 3미터의 용도불명의 이상한 형태의 석조물인 酒船石과 龜形の 석조물 발견됨(용도는 정원의 도수 시설, 신체를 정결하게 하는 미소기 시설, 도교의 신선사상과 관련한 시설 등의 이해)]과 3차례에 걸친 阿倍比羅夫의 에미시 정토[658년 4월, 阿倍比羅夫가 군선 180艘를 이끌고 에미시 정토, 659년 3월, 제2차원정, 660년 3월, 제3차원정]의 성공도 여제에게는 외정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백제멸망 이전에 추진된 도성건설과 관련한 각종 부역과 동북지방의 에미시 정토에 동원된 군역은 백촌강 전투에 직접 참전하게 된 병사들에게는 사기 저하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실제로 백촌강 전투에 파견된 백제구원군 가운데에는 동북지방에 해당하는 陸奥지역의 백성이 참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왜국(일본)과 신라의 국교재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의 일치에 의해 성립되는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런데 고대의 국제관계, 특히 고대한일관계사를 되돌아보면, 이 명제는 일면에서는 지극히 타당하나 다른 일면에서는 타당하지 못하다. 국제관계상에 영원한 우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통일신라와 왜국(일본)의 관계가 이를 증명하고, 후자는 백제와 왜국의 관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는 전자의 사례를 통해,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전이라 칭해지는 백촌강 전투 이후의 두 나라의 극단적 대립·긴장관계에서 국교재개라는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668년 9월에 이루어진 신라와 일본의 국교재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그 배경으로서 우선 당의 움직임, 즉 ①동맹국 신라와 당의 관계 변화(악화) 및 당(본국 및 백제진장)의 왜국(일본)에 대한 접근(회유)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②왜국(일본)과 신라 양국의 국교재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신라와 당의 관계변화 및 당의 왜국접근

663년 8월의 백촌강 전투 후 신라가 적대국 왜국(일본)에 대한 외교를 개시하게 된 시기는 668년 9월로 나당연합군에 의한 고구려멸망을 눈앞에 둔 절묘한 시점이었다. 신라의 대왜외교 개시, 즉 신라가 왜국에 접근한 배경에 동맹국 당과의 관계악화가 존재하고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즉 백제멸망 이후의 당에 대한 불신감과 장래의 당의 공격 위협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자는 당의 점령지 구백제령에 대한 지배정책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이 648년

에 김춘추와 당태종 사이에 나누었던 약속(백제멸망 후 백제고지에 대한 지배권 인정, 신라본기 문무왕11년조)위반에 기인하며, 후자는 고구려멸망 후의 당의 신라공격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백촌강 전투 직후부터 백제 진장을 통한 왜국과의 화해교섭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는 점도 신라로서는 결코 왜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움직임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신라가 먼저 대일외교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존재했던 것이다.

당의 왜국에 대한 적극적인 회유

백촌강 전투 이후 당은 곧바로 왜국에 대한 회유에 들어간다. 당은 패전국 왜국(일본)에 대한 조치로 왜국이 백제유민과 함께 고구려를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 그 과정을 시대순으로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664년 10월, 당의 백제진장 유인원이 광무종 등 사인 30인과 백제 좌평 禰軍 등 100여 명을 파견[천지3년 5월조]. 광무종이 대마에 도착하자 천지조에서는 采女 通信과 승 智弁을 보내 유인원이 보낸 첩을 받아옴[선린국보기 소인 해외국기]

664년 9월, 천지조정은 진수련길상을 파견하여 첩에 대한 칙지를 전달하는데, 축자대재의 명의로 된 칙의 내용은 광무종이 당의 천가자 보낸 공식사절이 아니라는 점, 국서도 당의 천가자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에 보낼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칙지는 12월에 백제고지로 귀국하는 광무종에게 전달되었고, 앞으로도 公使가 아니면 입경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왜국이 당에 실질적인 국교재개의 거부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왜국의 선택은 백촌강 패전으로 나당연합군의 일본침공이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된 상황에서의 당연한 선택이라 할 수 있으며, 더욱이 최고의 우방이었던 백제 멸망과 동맹국 고구려에 대한 당의 침공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 하에서는 지극 당연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

665년 7월, 고종의 명으로 유덕고를 비롯한 254인의 사절이 래일(7월 대마도 도착, 9월 축자 도착, 12월 귀국)[천지4년 9월조]. 유덕고는 9월 축자에 이르러 고종의 국서 전달. 이전(1년 전)에 래일한 광무종에게 전한 일본 측의 의사가 당 본국에 전달되어 당 고종이 공식의 대왜 외교사절을 파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절에는 광무종과 백제 예군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654년 견당사와 함께 당에 파견된 中臣鎌足の 아들 승 정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당이 왜국과의 관계개선 즉 고구려의 배후세력인 왜국을 회유하기 위해 천지조의 중심인물인 가마타리의 아들을 정략적으로 귀국시킨 것으로 이해되어 주목된다.

천지조의 대응은 국서의 접수를 미루면서 11월에 이르러 당사 유덕고를 입경시키고 향응을 베풀었다. 이들은 12월에 귀국길에 오르는데, 이때 왜국 측은 답사 겸 송사로서 小錦 守君大石 등을 함께 당에 파견[천지4년 시세조].

667년 11월, 백제진장 유인원이 당사 司馬法聰을 파견하였으나 곧바로 귀국. 이때에도 왜국 측은 송사로 소산하 伊吉連博德과 대을하 笠臣諸石을 파견[천지6-11조]

671년 6월에는 당사 이수진이 파견됨.

동년 11월, 광무종이 다시 20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원을 이끌고 일본에 도착(동 10-11조). 이 가운데 1400명이 백촌강의 포로. 광무종은 우선 포로 가운데 筑紫君 薩野馬 등 4명을 선발대로 대마에 파견하여 이번 사절단 일행의 수, 배의 수, 견사 목적 등을 사전에 통보함[천지 10-11조]

이 2000명의 성격에 대해서는 백제난민수송설(鈴木靖民), 위압회유설(森克己), 모략부대설(鈴木治), 대우황자를 지지하는 당이 大海人황자에 압력을 가하는 지원부대설(大和岩雄), 포로송

환설(松田好弘), 신라와의 전쟁에 필요한 전국적 군대징발설(구라모토 一宏)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음. 이 시기의 당사의 파견목적은 668년 고구려멸망 이후 나당전쟁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고조되던 시기로 일본과의 관계회복과 군수물자의 보급을 포함한 구원군의 요청을 위한 것이라는 수긍할만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直木).

이에 대해 왜국의 상황은 668년의 신라사 파견 이후 신라와의 우호관계 유지와 천지천황의 죽음에 의한 혼란, 이어지는 임신의 난의 긴장상황 하에서 한반도정세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무리였다. 따라서 672년 3월, 당사에게 천지천황의 상을 알리고, 5월에는 갑주공시와 시 1637필, 포 2852단, 면 666근을 지급하여 귀국시킴[천무 원년 3월 및 5월조]

이후, 30여 년간 당과의 교류는 단절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의 양국관계는 대보령 반포 후에 재개되어 일본의 견당사 파견은 701년부터 778년까지 이루어지게 됨[701년, 716년, 732년, 746년, 750년, 759년, 761년, 762년, 775년, 778년 모두 10회 견당사가 임명됨. 이 가운데 746년, 761년, 762년의 3회는 중지].

②왜국(일본)과 신라의 국교재개

신라가 백촌강 전투 이후 단절된 대일외교의 개선을 위해 왜국(일본)에 견사한 것은 668년 9월의 일로 고구려가 멸망한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하고 있다. 이는 신라가 고구려 멸망 후에 전개될 대당관계를 전제로 한 대일관계 개선을 의도한 것임을 시사한다. 즉 신라는 다가올 당과의 일전을 불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적대세력이자 동시에 언제라도 당의 후방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배후의 위험요소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신라로서는 당의 힘을 빌려 일차적으로 숙원인 백제를 멸망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고구려 멸망에 즈음하여 당의 정복지에 대한 지배전략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웠다(연민수, 2010). 즉 671년에 설인귀가 문무왕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답신에 신라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삼국사기 문무왕11년조), 백제점령지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해 직접지배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당의 조치가 648년에 입당한 김춘추와 당태종이 행한 백제의 고지를 신라에게 주겠다고 하는 신라와의 당초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깬 것이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멸망한 후 신라와 당의 대립, 신라의 대당 불신감에 기초한 당과의 항쟁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대당관계의 전망이 바로 신라가 대일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현실적인 이유였던 것이다.

한편, 일본으로서는 백촌강 패전 후에 일련의 백제식산성의 축성 등 방어체제 구축에 분주하고 있다. 백촌강 패전에 의해 왜는 당·신라 연합군이 더 나아가 본국까지 공격해 올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실제, 664년 4월에는 백제 진장 유인원의 사자가 축자에 래일하고 있다. 이때 왜국의 조정은 대응을 위해 축자에 사자를 파견하고 ‘將軍牒書’를 받았는데 9월이 되어 당의 황제가 파견한 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경을 거부하고, 12월에는 그 취지를 기록한 축자대재의 반서를 부여하고 이 사자를 한반도로 돌려보냈다(선린국보기<1470년에 저술된 외교사서> 소인 ‘해외국기’).

이 경우는 상대가 백제진장이라는 당의 변경의 관리라고 하는 발랜스 상 축자대재가 대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장군첩서’의 내용이 불명하여 유인원이 어떤 목적으로 왜국에 사자를 파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왜국 조정은 문서의 내용을 보고 입경을 거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당의 사자를 축자에서 되돌려 보낸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이 고구려원정을 재개하는 것이 666년인데, 이 무렵은 마침내 진정된 구백제령을 통치하는

데 분주했던 것으로 간주되어 왜국에 대한 침공은 무리였다. 따라서 당측으로서는 왜국의 상태를 정탐 파악하기 위한 사자를 파견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아무튼 왜국의 당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있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 증거로서 이 해에 곧바로 대마·일기·촉자에 防人·烽火를 설치하여 변경 방위와 당군 침공 시의 정보전달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촉자 방어의 요충인 대재부를 방어하기 위한 대제를 축조하고 물을 담아둔 방어시설 水城을 건설하고 있다. 현재 水城跡은 철도와 도로로 분단되고 말았지만 대수성, 소수성이라 칭해지는 것이 지상에 남아 있으며, 1480년 이 지역을 방문한 連歌師 飯尾宗祇는 감상을 남기고 있다.

수성은 전장 1.2킬로미터, 높이 13미터의 인공 성토로 단면으로 보면 방어 정면인 하카타 측은 약 70도의 급경사, 내측은 대재부 측은 약 50도로 동서 양단에서 구릉으로 연결된 부분은 각각 성문이 있었다. 이 수성은 방어의 성벽(토루)임과 동시에 그 전면의 폭 60미터, 깊이 4미터의 거대한 호리(堀)에 물을 담아두면 비록 당·신라군이 상륙했다고 해도 용이하게 대재부까지 진격해 공략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과 성벽에 의한 방어시설이라는 점에서 ‘수성’이라 명명된 것이다. 아울러 이때에 당·신라군의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수성이 그 기능을 다하는 장면은 없었으나 1274, 1281년의 文永·弘安의 역 즉 원구 때에는 수성이 방어 시설로 이용된 기록이 남아있다(八幡愚童訓). 600년의 세월이 지나 상당히 붕괴되어 있던 단계에서도 충분히 기능하는 상당히 견고한 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664년의 백제진장이 보내온 사자는 일단 되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665년 9월 이번에는 당 본국으로부터의 사자가 왜국에 파견되었다. 이번에는 황제의 사자였기에 조정도 입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당사는 10-11월에 채경하고 연말에는 왜국이 팔려 보낸 송사에 의해 당에 귀국했다. 이 당사의 파견목적은 이해 8월에 구백제령의 웅진성에서 웅진도독 부여융과 신라의 문무왕이 盟誓를 행하고 있는 점(이 웅진의 맹서는 사실상 당을 중개로 한 구백제 세력과 신라가 행한 평화선언이라는 점), 다음해 정월 그들은 유인원을 따라 태산에서 거행된 고종의 봉선의식에 참가하기 위해 당으로 향하고 있는 점, 나아가 중국 측의 사서에 의하면 태산의 봉선에는 왜국의 사자도 참가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면 왜국을 봉선의식에 참가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래일했다고 여겨진다.

한반도식(백제식) 산성의 축조

왜국에서는 당사를 환대하고 송사를 보내 귀국시키는 한편으로, 그에 앞선 665년 8월에 答本春初를 長門國, 憶禮福留·四比福夫를 筑紫國에 보내어 大野·基肆 2성의 축조에 착수하고 있어 방어태세의 준비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10월에는 우지에서 열병을 실시하고 있어 입경 중의 당사에게 왜국의 무력의 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나아가 666년 11월에는 백제진장 유인원의 사자가 래일하자 동월에는 倭國의 高安성, 讚岐國의 屋島성, 對馬國 金田성을 축조했다고 한다. 665년 8월에 촉자에 파견된 3명은 망명백제인으로 모두 ‘병법에 뛰어나다’고 평가된 인물이었다. 축성된 성은 모두 백제의 축성기술을 이용한 백제식 산성이다.

이 외에도 북부구주~세토나이카이를 중심으로 이 시기에 많은 백제식산성이 조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神籠石도 백제식산성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처럼 당시의 왜국은 백제부흥운동의 실패로 야기될 수 있는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대한 위기의식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라의 유화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이 긴장완화의 최선책(연민수, 2010)이었던 것이다. 사실 668년 9월에 파견된 신라사 김동염이 왜국 측에 당시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당의 왜국 및 신라침공 가능성이라는 신라가 입수한 최신의 정보를 더욱 과장해서 전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의 왜국은 관계개선을 위해 파견된 신라사를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즉 당시 신라사 일행에 대한 왜국 측의 대응을 보면, 왜국 조정의 중심에 있던 中臣鎌足이 신라사를 파견한 문무왕과 김유신에게 배 1척을 각각 선물하고 있고, 나아가 문무왕에게는 별도로 비단, 솜, 가죽 등을 보내고 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신라사의 귀국과 함께 그 답사로서 道守麻呂를 대사로 하는 건신라사를 파견하고 있는 것이다(천지기 7년9월조 및 동 11월조). 이러한 왜국 측의 대응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우호적인 것(연민수, 2010)이었다.

이처럼, 663년 8월의 백촌강 전투 후 적대관계로 전환된 후 5년간 지속된 물교섭의 신라와 왜국 간의 긴장·대립관계는 당과 신라의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의해 상호 화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 시점에서 왜국의 대외정책 목표는 일차적으로는 신라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당·신라연합군의 침공이라고 하는 긴장관계를 해소시키는 데 있었고, 신라 또한 당과의 전면적인 대립항쟁을 위해서는 대일관계 개선을 통해 후방의 우려를 제거하는 데 최대의 목표가 있었다. 실제로 고구려 멸망을 전후한 시기에 있어서는 일본(왜국)과 신라 모두 공통적으로 백제, 고구려에 이은 제3의 당의 공격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하고 있었다(신라는 당이 왜국을 정토한다는 명분으로 군사파견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실은 신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삼국사기 문무왕 11년조), 일본(왜국) 역시 백촌강 전투의 당군의 포로가 되어 당에서 생활하고 있던 왜인들이 당의 왜국 침공 풍문을 듣고 고국에 전하려는 하카마의 에피소드가 말해주는 것처럼(일본서기 지통기 4년11월조) 당의 군사적 움직임에 일정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당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처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상호간의 이해의 일치가 양국의 적대관계 해소, 우호관계 재개를 이끌었다.

이후에 전개된 양국의 빈번한 사절의 왕래는 그 결과이다.

*참고 천지조·천무조·지통조의 국제관계표

〈표5-천지조 국제관계연표〉

연차	당	고구려·백제	신라
662 (天智1)		(정월, 백제구원군 도해) 3월, 고, 왜에 구원요청 5월, 왜, 풍장귀국(170척) 6월, 백, 건사(달술(2))	
663		2월, 백, 진조(달술(2)) (3월, 백제구원 제2군 도해 (2만7천명)) (8월, 백촌강 전투) (5월, 왜, 고구려에 건사 백 제구원군 파견 소식 전함) (8월, 건아 1만여 추가 파견)	
664 (天智3)	5월, 백제진장 劉仁願의 사자 郭務悰 래왜 12월, 광무종 귀국		
665	8월, 倭使, 백제 웅진성 에서 열린 신라와 부여 웅의 찰맹에 참여 9월, 당사 劉德高·郭務 悰 등 래왜 시세, 건사(守君大石)		

666 (천지5)	정월, 倭使, 고종의 封禪 에 참여	정월, 고, 래조진조 10월, 고, 래조진조	
667	11월, 백제진장 劉仁願 이 법총을 견사, 遣唐副 使를 송환해 줌, 왜, 송사를 파견		
668 (天智7)		4월, 백, 진조 7월, 고, 진조 (9월, 고구려 멸망)	9월, 진조 김동엄(급찬 (9)), 왜, 선2척을 내림 11월, 신라왕에 絹등 을 사여 11월, 견사
669	시세, 견사 (시세, 郭務棕 등 2000인 래왜)		9월, 진조 독유(사찬 (8))
670			9월, 견사(阿曇連)
671 (천지10)	정월, 백제진장 이수진, 래왜상표 11월, 郭務棕 대마에 이 름	정월, 고, 진조 2월, 백(당), 진조 6월, 백(당), 진조	6월, 진조 10월, 김만물(사찬(8)) 래조진조 11월, 신라왕에 絹등 을 증여

*주 (1)고는 고구려, 백은 백제, 신은 신라의 약칭 (2)강조는 왜(일본)의 견사를 나타냄.

〈표6-천무·지통조 국제관계연표〉

연차	신라	고구려·탐라	왜(일본)
천무1 (672)	(671년 10월, 김만물(사찬(8)) 래일)		1월, 신라사 김압실 등 축 자에서 항응 12월, 신라사 귀국
천무2 (673)	6월, 김승원(한아찬(5)) 賀 騰極使, 김살유(일길찬(7)) 弔喪使, 송사(귀간(외4)) 파견 8월, 송사 파견 김이익(한나말(10))	8월, 고구려사 래일 (신라의 송사)	
천무4 (675)	3월, 박근수(급찬(9)) 파견 진조 4월, 김충원(왕자*)	3월, 고구려사 래일 8월, 탐라 調使 왕자 래일 9월, 탐라왕 難波 도 착	7월, 신라에 견사
천무5 (676)	11월, 김청평(사찬(8)) 국정 [請政] 보고, 김호유(급찬 (9)) 진조, 김청평 일행의 송사 파진나(나말(11))	7월, 탐라사 일행 귀 국 11월, 고구려사 래일 (신라 송사 김양원 {대나말(10)} 파견)	10월, 신라에 견사
천무7 (678)	시세, 신라사(나말(11)) 축 자에 도착, 도중 사신일행 이 풍랑에 행방불명임을 알림		
천무8 (679)	10월, 김항나(아찬(6)) 파견 해 조공	2월, 고구려사 래일	9월, 전신라·고구려·탐라 사 귀국
천무10 (681)	10월, 김충평(일길찬(7)), 김 일세(대나말(10)) 파견해 進調		9월, 전고구려·신라사 귀국 12월, 축자에 사신을 보내 신라사를 항응
천무11	2월, 신라사 김충평 귀국	6월, 고구려사 래일	정월, 신라사 김충평에게

(682)	6월, 송사 김석기(고구려사의 송사)		축사에서 향응 6월, 고구려사 래일
천무13 (684)	12월, 신라 송사 김물유(대나말(10)) 축자 도착		12월, 견당 유학생 土師宿禰等 신라 경유 귀국
천무14 (685)			3월, 김물유 축사에서 향응 5월, 高向朝臣麻呂 등 신라에서 귀국
지통1 (687)			1월, 신라에 천무천황의 告喪使 파견
지통3 (689)	4월, 김도나(급찬(9)) 弔使 파견		5월, 신라 弔使 관등 및 방물이 전례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방환
지통9 (695)	3월, 김양림(왕자*) 등 래일, 國政奏請		9월, 小野朝臣毛野 등 견사

이상과 같은 양국 간의 외교사절의 왕래 가운데 특히 양국의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상대국의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하등극사의 파견과 왕의 상을 알리고 조문하는 고상사 및 조상사의 파견이다. 신라는 672년 즉위하는 천무를 위해 하등극사와 함께 천지천황의 상을 조문하는 조문사를 파견하고 있고(천무기2년윤6월조), 아울러 신라는 703년에 효소왕의 죽음을 알리는 고상사를 일본에 파견하고 있다(속일본기 대보2년정월조). 왜국 측도 신라에 천지와 천무의 상을 알리는 고상사를 파견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사절의 왕래는 상대국에 대한 최대의 우호 표시이며, 국가적 대사인 조문, 경축 행사는 인호국 간에 지켜야 할 국가적 의례(연민수, 2010)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왜국이 신라와의 통교를 재개하고 관계유지에 노력한 데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선진문물의 수입처로서의 한반도의 문화적 위치이다. 왜국에는 657,8년에 신라를 매개로하여 당에 유학생을 보내는 등 신라를 이용하여 당 문화를 수입하고자 도모한 경위가 있지만 그 후는 백촌강으로의 길을 걷는 가운데 신라와의 통교도 도중에 끊어져 버린다. 그러나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여 한반도와의 접점을 완전히 잃어버린 왜국은 선진문물을 수입할 루트를 잃고, 670년 무렵에는 당의 외국정벌 풍문이 있었던 점에서 더욱 당에 대한 경계심을 품고 있어 결국 종래의 백제를 대신해 신라를 발판으로 당을 위시한 대륙의 선진 문화를 수입할 수밖에 달리 길이 없었던 것이다. 이후 30년 간 일본에게 있어서 신라와의 교통, 특히 신라에의 유학생, 유학생 파견을 통한 적극적인 교류는 불가결한 사항이었다. 율령국가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일본에게는 자신들에 한발 앞서 독자의 율령체제를 구축한 신라야말로 당풍화의 모범으로서, 왜국의 이후 국가기구의 모범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5 결어

-양국의 대당관계상의 긴장관계 해소 이후의 신라와 일본의 외교관계 추이

당과 신라의 긴장대립-신라의 왜국(일본)에의 화해 접근

왜국(일본) 당·신라연합의 침공위협으로부터의 회피, 신라의 제의를 받아들여 적대관계 해소, 약 30년 간 잠재적 우호친선관계 유지,

이윽고 신라와 당 사이의 화해 성립, 이후 점차 신라와 왜국(일본)의 관계가 우호협력관계에서 대립긴장의 관계로 추이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냉엄한 현실-실리에서 이념·명분으로 전환

@참고문헌

고려·조선의 금구(禁寇)외교와 일본의 대응

김보한(단국대)

〈목 차〉

- I. 머리말
- II. ‘가마쿠라 왜구’의 출현과 금구 외교
- III. ‘무로마치 왜구’와 고려의 금구 외교
 - 1. ‘무로마치 왜구’의 약탈과 고려의 대왜인 정책
 - 2. 고려의 금구 외교와 일본의 대응
- IV. 조선 초기의 ‘무로마치 왜구’와 조선의 금구 외교
- V. 맺음말

I. 머 리 말

역사적으로 한 나라의 문제가 그 경계를 뛰어넘어 주변의 국가에 정치적·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한일 관계에서도 그 한 가지 사례가 바로 왜구의 침탈인데, 왜구는 무려 2세기 이상 고려와 조선의 대왜인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3세기 초중반 막부와 천황의 권력 다툼에서 촉발한 죠큐(承久)의 난이라는 정치적 혼란으로 일본의 경계를 이탈한 왜구가 고려에 출몰하기 시작하면서, 고려와 일본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마찬가지로 14세기 무로마치 막부 초기부터 천황과 막부의 대립, 막부의 내홍 등으로 일본열도가 대혼란에 빠지면서 고려에 왜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증가한 왜구의 출몰은 고려에게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범국가적인 과제로 급부상하였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왜구의 침탈을 금지시킬 목적으로 일본에 끊임없이 금구(禁寇) 사신을 파견하였다.

또한 고려와 조선은 선제적 방어 수단으로서 모두 세 차례의 대마도정벌을 단행하였는데, 이는 군사적인 강경 대응책이었다. 그렇다고 고려와 조선은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 정벌이라는 강경책으로만 대응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고려가 왜인의 거주를 허용하였고, 조선에서는 삼포를 개항하여 왜인의 집단 거주를 허락하는 회유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강온의 이중적인 대왜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13세기 이후부터 왜구에 의한 잦은 약탈의 악몽을 기억하는 고려와 조선은 왜구의 침탈을 막아내기 위해 일본의 막부에 수십 차례에 걸쳐 금구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고려의 금구 외교는 기대만큼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조선에 접어들어서도 금구 사신의 파견은 지루하게 계속되어 갔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1950년대 이후 왜구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왜구 침탈과 그에 대한 고려와 조선의 대응이라는 시각에서 전개되었다.¹⁾ 이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려와 조선의 대일본 관계는 외교와 대외정책의 관점으로 시야가 확대되었다.²⁾ 다시 말해 왜구와 침탈에 관한 갈등의 사실적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의 연구에서 고려와 조선의 대외 관계를 외교와 대외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에 대한 연구로 진화시켜 갔다.

이러한 방향성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차기 단계의 연구방법론으로서 한일 양국의 화해라는 시각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와 조선을 통시대적으로 엮어 금구 외교와 사신의 왕래, 일본의 외교적 대응을 화해의 측면에서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이처럼 금구 외교라는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두 시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구 사신에 관한 연구가 통시적으로 고려와 조선을 하나로 엮어서 연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그 성과를 기대하고 싶다. 아울러 고려와 조선이라는 각기 다른 두 시기의 국가를 대상으로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비교 연구라는 점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가마쿠라 왜구’의 출현과 금구 외교

고려는 초기부터 투항해 오는 일본인을 수용하고 이들을 정착시키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한 가지 예로써 999년(목종 2)년에 도요미도(道要彌刀) 등이 고려에 투항해 오자 이천군(利川郡)에 정착시키면서 일본인의 고려 정착이 시작되고 있다.³⁾ 또 1012년(현종 2)에 일본인 반다(潘多) 등 35인이 고려에 투항해 왔고,⁴⁾ 1035년(정종 5)에는 일본인 남녀 26인이 투항해 왔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전한다.⁵⁾ 이처럼 고려는 초기부터 갈등의 요소보다는 포용의 측면에서 투항해 오는 일본인의 고려내 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한편, 일본열도에서는 헤이안 시대부터 세토내해에서 항해하는 선박을 약탈하던 일본 해적의 약탈이 1185년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막부는 해적들을 제어할 목적으로 새로운 법적 장치로서 ‘어성패식목’과 ‘추가법’

1) 신기석, 「高麗末期의 對日關係-麗末倭寇에 關한 研究」 『社會科學』1, 1957; 신석호, 「여말선초의 왜구와 그 대책」 『國史上의 諸問題』3, 1959; 이은규, 「15世紀初 韓日交涉史 研究-對馬島征伐을 中心으로」 『湖西史學』3, 1974; 손흥렬, 「高麗末期의 倭寇」 『사학지』9, 1975; 이현중, 「高麗와 日本과의 關係」 『동양학』7, 1977; 한용근, 1980 「高麗 末 倭寇에 關한 小考」 『慶熙史學』6.7.8, 1980.

2) 나종우,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나종우, 「朝鮮前期 韓·日關係의 性格研究」 『동양학』24, 1994; 이현중, 「朝鮮前期의 日本關係」 『동양학』4, 1984; 한문중, 「朝鮮初期의 倭寇對策과 對馬島征伐」 『전북사학』19·20, 1997; 한문중, 「조선전기 對馬 早田氏의 對朝鮮通交」 『한일관계사연구』12, 2000; 한문중,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 위반자의 처리」 『왜구.위사 문제와 한일 관계』(한일관계사연구논집4), 경인문화사, 2005; 줄고, 「고려·조선의 대일본 외교와 왜구」 『일본역사연구』47, 2014.

3) 『고려사』 권3 세가3 목종 2년(999) 7월조. “日本國人道要彌刀等 二十戶來投 處之利川郡爲編戶.”

4)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 2년(1012) 8월조. “日本國潘多等三十五人來投.”

5) 『고려사』 권5 세가5 정종 5년(1039) 5월조. “日本民男女二十六人來投.”

에서 해적 행위의 금지 조항을 만들고 살인이나 모반처럼 엄하게 규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본열도의 연안과 세토내해에서 해적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한편 일본 해적에 의한 고려 침탈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표 1>의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 최초의 왜구 침탈은 1223년 금주(金州)에서 시작되었다.⁶⁾ 그 다음 두 번째의 왜구 침탈은 1225년 경상도 연해의 주현에 침입한 왜선 두 척이었고,⁷⁾ 세 번째는 1226년에 경상도 연해의 주군을 침입한 왜구의 침탈이었다.⁸⁾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명월기(明月記)』에 1226년 규슈 친제이(鎮西의) 마쓰우라당(松浦黨)이 수십 척의 병선으로 고려의 별도(別島)에서 민가를 습격하고 재물을 약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⁹⁾

그런데 『백련초』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226년에 규슈 다자이쇼니가 고려와의 관계 개선과 왜구 금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려 사신의 면전에서 대마도 악당 90인을 참수하고 있다.¹⁰⁾ 이처럼 다자이쇼니 측에서 고려 사신의 금구 요구에 적극 호응하여 고려 침탈 사건에 연루된 악당 세력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자이쇼니가 고려의 금구 요구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¹¹⁾ 그런데 1227년 『고려사』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금주와 웅신현에 왜구가 거둬 출몰하고 있다.¹²⁾ 또 같은 해 『오처경』에서는 야밤에 대마도인이 경상도 김해부(金海府)에서 약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³⁾

<표 1> 사료별 왜구 빈도수, 사신 파견

연도	왜구 빈도수	사신 파견	침입 지역
1223(고종 10)	『고려사』 1건		금주(金州)
1225(고종 12)	『고려사』 1건		경상도 연해 주현
1226(고종 13) 1226(嘉祿 2)	『고려사』 2건 『明月記』 1건	고려의 사신 파견	경상도 연해 주현 別島
1227(고종 14) 1227(安貞 1)	『고려사』 2건, 『吾妻鏡』 1건, 『百鍊抄』 1건		금주와 웅신현, 경상도 김해
1232(貞永 1)	『吾妻鏡』 1건		고려
1263(원종 4)	『고려사』 1건	홍저, 광왕부 파견	(금주관내) 웅신현 물도(勿島)
1264(弘長 4) 추정	『靑方文書』 1건		고려
1265(원종 6)	『고려사』 1건		남도 연해의 주군

6) 『고려사』 세가 권22, 고종 10년(1223) 5월조.

7) 『고려사』 세가 권22, 고종 12년(1225) 4월조.

8) 『고려사』 세가 권22, 고종 13년(1226) 정월조.

9) 『明月記』 嘉祿 2년(1226) 10월 17일조, “高麗合戰一定云々 鎮西凶黨等(號松浦黨) 構數十艘兵船 行彼國之別嶋合戰 滅亡民家 掠取資財…”.

10) 『百鍊抄』 安貞 원년(1227) 7월 21일조, “去年大馬國惡徒等向高麗國全羅州 侵取入物. 侵陵住民事. 可報由緒之由牒送. 大宰少貳資賴不經上奏. 於高麗國使前浦惡徒九十人斬首. 偷送返牒云々. 我朝之恥也. 牒狀無禮云々”.

11) 졸고, 「중세 왜구의 경계침탈로 본 한·일 관계」 『한일관계사연구』42, 2012, 12쪽.

12) 『고려사』 세가 권22, 고종 14년(1227) 4·5월조.

13) 『吾妻鏡』 安貞 원년(1227) 5월 14일조, “彼告金海府 對馬人等舊所住依之處 奈何 於丙戌六月 乘其夜寐 入自城窺奪掠正屋訖 比之已甚”

1280(충렬왕 6)	『고려사』 1건		고성 칠포, 합포
1290(충렬왕 16)	『고려사』 1건		고려 변경
1323(충숙왕 10)	『고려사』 2건		군산도, 추자도, 전라도

이처럼 일본 사료인 『명월기』, 『백련초』, 『오치경』 기록과 고려 사료인 『고려사』의 왜구 침탈 기록이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즉 초창기 가마쿠라 왜구의 고려 침탈 기록이 일본과 고려의 기록에서 거의 동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초창기 왜구는 일본 정국의 혼란을 야기한 1221년의 ‘조큐(承久)의 난’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199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가 낙마 사고로 죽게 되고, 혼란한 정국 속에서 천황 친정을 꿈꾸던 공가(公家)권력의 수장 고토바상황(後鳥羽上皇)이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결국 1221년 고토바상황은 전국의 무사에게 막부 토벌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것이 일본열도를 정치혼란의 소용돌이로 빠트리는 ‘조큐(承久)의 난’이다. 이 난은 불과 한 달 만에 무가권력을 대표하는 호조씨(北條氏)의 승리로 막이 내렸다. 이 난에서 서국의 무사들은 상황을 지지하였는데, 이들은 정치적·경제적 기득권을 포기당한 채 자신의 소령을 몰수당해야만 했다. 어쩔 수없이 새로운 생존 방법을 찾아가야 했던 서국의 무사들은 ‘해상 무사단’을 이끌고 일본열도를 벗어나 바다 건너 고려로 해적의 길을 나서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고려는 이 일본 해적의 침탈 때문에 새로운 시련을 경험하게 되었다. 일본열도의 모든 해적이 고려 약탈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일부 지역의 일본 해적이 고려 약탈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초창기 가마쿠라 왜구는 규모가 크지도 않았고, 침입 빈도가 잦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왜구의 침탈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려 사회에 충격을 주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구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고려는 지속적으로 금구사신의 파견을 통해 출몰하는 왜구를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런데 1226년 고려가 처음으로 왜구 금지를 위한 금구(禁寇) 사신을 파견하였고, 다자이쇼니가 대마도 악당 90명을 참수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이후에, 일본 기록과 『고려사』에서는 왜구에 의한 침탈 기록이 40여 년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랜 소강상태를 깨고 1263년 가마쿠라 왜구의 침탈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고려 조정에서 가마쿠라 막부에 왜구금지 사신을 파견하기에 이른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63년 2월 왜구가 금주 관내 웅신현(熊神縣) 물도(勿島)에서 공선(貢船)을 침탈해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¹⁴⁾ 이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같은 해 4월 고려는 홍저(洪沍)와 곽왕부(郭王府)를 가마쿠라 막부에 파견하였다. 고려 사신이 가지고 간 국서에는 “두 나라가 교통한 이래 ... (중략) ... 우리 연해 지방의 촌락과 동리를 소란케 할 때에는 엄격히 처벌하며 금지하기로 약정하였다.

14) 『高麗史』 권25 세가 제25, 원종 4년(1263) 2월, ‘癸酉, 倭, 寇金州管内熊神縣勿島, 掠諸州縣貢船’.

그런데 금년 2월 일본의 배 1척이 고려의 경계를 넘어와서 웅신현 물도에 정박 중인 고려 공선에 실려 있는 쌀 120석과 주포(紬布) 43필을 약탈해 갔다. 또 연도(椽島)에 들어와서 주민들의 의복, 식량 등 생활 필수 물자들을 모조리 빼앗아 갔으니 이러한 사실들은 원래 약정하였던 호상 통교의 본래 뜻에 크게 위반되는 것이다”라는 단호한 내용의 항의문을 전달하였다.¹⁵⁾ 아울러 다자이쇼니에게 그 약탈자를 끝까지 찾아내고 모두 징벌함으로써 두 나라 간의 화친을 공고히 하라는 요구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8월에 다자이쇼니로부터 쌀 20석, 마맥(馬麥) 30석, 우피(牛皮) 70장을 변상받는 선에서 고려는 이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¹⁶⁾

그런데 왜 고려는 40여 년 만에 발생한 단 한 차례의 왜구 약탈에 대해 사신과 항의의 첩장을 보낸 것일까? 이것은 고려 공선에 실려있던 쌀 120석과 주포 43필의 실제 가치가 상당히 컸다는 점에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 당시 약탈한 주포 43필의 가치는 쌀 1,290여 석 이상의 상당히 높은 가치를 가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무토 스케요리(武藤資賴)로부터 받아온 변상 품목은 약탈당한 품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형식적인 답례품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무토 스케요리가 보내온 변상 품은 40여 년 전에 고려의 사신 앞에서 대마도 악당 90여명의 참수했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려에게 보여준 화해의 제스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고려가 이 형식적인 답례품만으로 사건을 무마시킨 것은 사건 해결과 직접적인 변상보다는 무토 스케요리로부터 왜구 침탈의 인정과 해결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정도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이처럼 왜구의 약탈에 대해 고려와 막부는 금구사신의 파견을 통해서 왜구 침탈을 순리대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다.

한편 고려에 왜구의 침입 기록은 1274년과 1281년 여몽연합군에 의한 일본 침입을 전후한 시기부터 거의 사라졌다. 몽골의 두 차례 일본 침입 이후에 한 동안 『고려사』에는 일본인의 투항이나 고려 정착, 왜구의 침입 등과 관련된 기록이 거의 전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 시기에 고려와 몽골의 사신이 막부로 파견되었지만, 이들은 금구의 사신이 아니고 모두가 일본 초유의 사신이었다.

다시 여몽연합군의 일본 침입 시기와 그 이후 3~40년 동안에 <표 1>에서처럼 1280년, 1290년, 1323년에도 왜구 침탈이 있었지만, 고려가 금구 사신을 파견했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1323년 두 차례의 왜구의 침입 기사가 다시 『고려사』에 나타나는데, 이때 고려의 전라도에서 송기(宋愼)가 왜구 백여 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전한다.¹⁸⁾ 이것

15) 『高麗史』 권25 세가 제25, 원종 4년(1263) 4월, ‘遣大官署丞洪沔·詹事府錄事郭王府等, 如日本國, 請禁賊, 牒曰, 自兩國交通以來 歲常進奉一度船不過二艘設有他船枉憑他事濫擾我沿海村里嚴加徵禁以爲定約 越今年二月二十二日, 貴國船一艘, 無故來入我境內熊神縣界勿島, 略其島所泊, 我國貢船所載, 多般穀米并一百二十石·紬布并四十三匹, …(하략).’

16) 『高麗史』 권25 세가 제25, 원종 4년(1263) 8월, ‘戊申朔, 洪沔·郭王府等, 自日本還, 奏曰, 窮推海賊, 乃對馬島倭也, 徵米二十石·馬麥三十石·牛皮七十領而來.’

17) 졸고, 『해적과 약탈경제』, 『동북아문화연구』20, 2009, 543쪽 참조(당시 주포의 가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주포 1필 = 백승포 1필의 가치로 놓고, 쌀 약 30여석으로 환산해 계산했을 때, 1263년 공선의 주포 43필의 가치는 쌀 1,290여 석으로 환산된다).

18) 『高麗史』 권35 세가 제35, 충숙왕 10년(1323) 7월.

은 이전의 『고려사』의 왜구 기록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는 큰 전과였다. 바꾸어서 말하면, 이것은 왜구의 인적 규모가 매우 커졌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료이다. 일본 내부에서 재지의 상황이 열악해지고, 이를 통제해야 할 막부의 정치력이 점차 쇠퇴해가고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증거일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점차 왜구의 규모가 커져가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가마쿠라 막부의 붕괴와 남북조내란의 정치적 대혼란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III. ‘무로마치 왜구’와 고려의 금구 외교

1. ‘무로마치 왜구’의 약탈품과 고려의 대왜인 정책

아시카가 다카우지(足利尊氏)는 고다이고천황(後醍醐天皇)의 명을 받들어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다카우지는 고다이고천황의 겐무정권(建武政權)에 반기를 들고 거병하여, 겐무정권을 무너뜨리고 교토에서 고묘(光明)천황을 세운 다음, 겐무식목(建武式目)을 제정하여 새로운 무가정권인 무로마치 막부를 세웠다. 이때부터 고다이고천황의 남조와 교토의 북조가 대결하는 남북조내란기가 지루하게 계속되었다. 그리고 남북조내란기에 무로마치 막부의 내홍이 일어나면서 복잡한 삼파전(남조, 다카우지, 다다요시)이 전개되었다. 이것이 1350년에 발발한 막부의 내홍인 간노조란(觀應擾亂)이다.

간노조란의 여파로 일본열도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졌지만, 특히 규슈가 더욱더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1350년부터 고려에 왜구 침입이 갑자기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고려와 조선에서는 ‘경인년(1350년) 이후 왜구’라고 불려졌다. <표 2>에서처럼 왜구에 의한 대규모 곡물 약탈은 13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서 수차례 발생하면서 이전의 가마쿠라 왜구와는 규모와 성격이 매우 다른 무로마치 왜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표 2> 고려 침탈 왜구 빈도수와 대규모 곡물 약탈¹⁹⁾

연도	빈도수	대규모 약탈 / 대마도에 쌀 하사
1350(충정왕 2)	7	
1351(충정왕 3)	4	
1352(공민왕 1)	8	
1353(공민왕 2)		
1354(공민왕 3)	1	4월, 전라도 조운선(漕船) 40여척 약탈
1355(공민왕 4)	2	4월, 전라도 조운선 200여척 약탈
1356(공민왕 5)		
1357(공민왕 6)	4	
1358(공민왕 7)	10	
1359(공민왕 8)	4	
1360(공민왕 9)	8	윤5월, 강화도에서 쌀 4만여 석 약탈
1361(공민왕 10)	10	
1362(공민왕 11)	1	
1363(공민왕 12)	2	
1364(공민왕 13)	11	
1365(공민왕 14)	5	
1366(공민왕 15)	3	
1367(공민왕 16)	1	
1368(공민왕 17)		11월, 대마도 崇宗慶에게 쌀 1천석 하사
1369(공민왕 18)	2	
1370(공민왕 19)	2	

처음 왜구가 출현했던 1223년 이후에 조운선의 대규모 약탈이라는 기록이 전해지는 것은 ‘경인년 이후의 왜구’부터 이다. 왜구 침탈에서 대규모의 약탈이 자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매우 특이한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1354년 4월에 왜구가 전라도 조운선 40여척을 약탈해 간 다음에 약 1년간의 침탈이 『고려사』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또 1355년 4월 전라도 조운선 200척을 약탈한 다음에 1년 이상 왜구 침탈의 기록이 전혀 없다. 이어서 1360년 윤 5월 강화도에서 4만석을 약탈한 이후에 약 9개월간 고려에 왜구 침탈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1368년 11월에 고려 조정에서 대마도 도주인 송종경(崇宗慶)에게 쌀 1천석 하사한 이후에도 약 1년간 왜구가 고려를 침탈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상 4건의 기록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왜구의 목적은 주로 곡물의 약탈이며, 대규모의 약탈품과 대규모 하사품이 있는 다음에 약탈이 상당기간 소강 상태였다는 게 공통점이다. 즉 대량의 약탈품과 하사품 기록이 있는 다음에 9개월에서 1년 이상 조운선의 약탈이나 민가의 약탈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의 약탈품이 왜구 손에 들어간 다음, 이것들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왜구 침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왜구의 침입 목적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곡물이었다는 사

19) 연도별 왜구 빈도수는 나종우의 통계이다(羅鍾宇, 『韓國中世對日交涉史研究』,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126쪽 참조).

실을 입증해 준다.

또한 고려는 초기의 일본인의 적극적인 수용과 마찬가지로, 14세기에도 고려가 일본인의 고려 거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의 고려 거주가 다시 등장하는 기록은 1369년 7월 거제 남해현에 살고 있던 왜인들이 배반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건 기록에서 찾을 수가 있다.²⁰⁾ 또 왜구의 출몰 기록과 함께 나타나는 사례인데, 같은 해 11월 일본인이 거제에 살면서 화친하기를 원하였기에 고려가 그것을 허락하였는데, 그 은혜를 잊고 영주(寧州)·온수(溫水)·예산(禮山)·면주(沔州)에서 조운선을 약탈하는 사건을 일으켰다고 『고려사』가 기록하고 있다.²¹⁾

또 『고려사』의 「김선치전」에서도 앞의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전해지고 있다. 1375년 7월 왜인 등경광(藤經光)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상륙해서 약탈할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그 대신에 양식을 요구하며 위협하는 어이없는 사건을 일으킨다. 이에 고려는 그 대안으로 이들에게 순천(順天), 연기(燕岐) 등지에 분산 배치시키고 양곡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태도를 수상히 여긴 고려는 이들을 유인해서 살해하려고 시도하였고, 이것이 실패하자 왜인들이 도망친 것으로 기록이 전하고 있다.²²⁾ 앞에서 예시한 몇 차례의 사례들은 일본인이 화친을 목적으로 고려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약탈을 전제로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되는 사건들이었다.

따라서 왜구가 극성을 부리던 1360년대 이후에 왜인이 고려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힘들었고, 또 고려 조정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경인년 이후 왜구’의 등장과 약탈의 성행은 고려 조정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유화적인 대일본인 정책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려의 일본인 수용의 사례와 그 정책에 관한 기록이 매우 적기 때문에, 고려의 일본인 수용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단지 투항해 오는 일본인에 대한 고려의 대응은 이들을 각지에 분산 배치시키고 임시로 거주를 허가하여 주는 정도의 배려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따름이다.

특히 왜구 창궐기에 왜인은 왜구이고 통제가 난감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들에 대한 고려 조정의 경계심이 작용하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이것이 대일본인 정책에 반영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면 고려가 적극적으로 어떤 대일본 외교정책을 추진했는지, 이에 대해 막부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고려와 일본의 상호 사신 파견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0) 『고려사』 권41 세가 제41 공민왕 18년(1369) 7월조, ‘辛丑 巨濟南海縣投化倭叛歸其國.’

21) 『동국통감』 공민왕 18년(1369) 11월조,

22) 『고려사』 권114 열전 제27 김선치전, ‘辛禡初倭藤經光率其徒來聲言將入寇恐愒之因索糧 朝議分處順天燕岐等處官給資糧尋遣密直副使金世祐諭先致誘殺 先致大具酒食欲因餉殺之’

2. 고려의 금구 외교와 일본의 대응

‘경인년(1350년) 이후의 왜구’가 출몰하면서, 고려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왜구의 침탈은 경인년(1350)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370년대에 접어들면서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²³⁾ 그러면 먼저 고려가 왜구 금지를 위해서 외교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과 같이 1360~80년대 고려와 무로마치 막부의 사신이 왕래하는 횟수를 통해 고려가 얼마나 왜구금지에 고심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 1360년대 고려는 왜구금지를 목적으로 무로마치 막부에 금구 사신을 파견하였다. 우선 1366년 금구 사신으로 김용(金龍)이 파견되었다.²⁴⁾ 『선린국보기』 1367년 2월조 기사를 통해 김용이 막부에 전달한 첩장의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본 해적이 합포(合浦) 등의 관청을 불사르고 백성을 살해하여 10여 년 동안 선박이 왕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²⁵⁾ 이와 함께 『선린국보기』에서는 막부의 쇼군이 고려에 회답사를 보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쇼군의 답신 내용은 그 전문이 전하지 않는다. 다만 『고려사』에서 김용이 정이대장군(=쇼군)으로부터 왜구금지의 약속을 받고 귀국하였다고 간략하게 전하고 있을 따름이다.²⁶⁾

거의 같은 시기에 왜구의 침탈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1366년 11월 고려는 김일(金逸)을 막부에 다시 파견하여 왜구금지를 요구하였다.²⁷⁾ 막부에 전달된 첩장의 내용은 고려와 일본의 사료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첩장의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할 수가 없다. 다만 『선린국보기』와 『사수기』에서 김일이 막부로부터 성대하게 대접받았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²⁸⁾ 그리고 『고려사』의 기사를 통해 1368년 1월 막부에서 승려 범탕(梵盪)과 범유(梵繆)를 회답사로 보내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이처럼 고려의 금구 사신에 대해서 무로마치 막부가 즉각적으로 화해의 제스처로 사신을 보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고려는 막부뿐만이 아니라 대마도와의 관계에서도 금구를 목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관리를 파견하고 있었다. 1368년 7월 왜구 금지의 의지 표현으로 대마도에서 이름 미상의 관리를 보내왔을 때, 고려는 그 답례로 이하생(李夏生)을 대마도에 파견하였다.³⁰⁾ 또 같은 해 11월에 대마도의 송종경(崇宗慶)이 이름 미상의 관리를

23) 졸고, 「一揆와 倭寇」 『일본역사연구』10, 1999, 73-4쪽 참조.

24)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3년(1377) 6월조.

25) 『善隣國寶記』 貞治 6년(1367) 丁未條: “(上略) … 通書 其略曰 海賊多數 出自貴國地 來侵本省合浦等 燒官廨 擾百姓 甚至於殺害 于今十有餘歲 海舶不通 辺民不得寧處云 … (中略) … 六月廿六日 將軍家 以高麗回書 授使者”.

26)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3년(1377) 6월조. “丙午年間 差萬戶金龍等 報事意 即蒙征夷大將軍 禁約 稍得寧息 … (後略)”.

27) 『고려사』 권41 세가 제41, 恭愍王 15년(1366) 11월조 “壬辰 遣檢校中郎將金逸如日本 請禁海賊”; 『善隣國寶記』 貞治 6년(1367) 정미조, “同廿七日 重申請 大夫前典義 令相金一來朝”.

28) 『善隣國寶記』 貞治 6년(1367) 4월 18일조; 『師守記』 貞治 6년(1367) 4월 18일조; 5월 19일조.

29) 『고려사』 권41 세가 제41, 恭愍王 17년(1368) 1월조, “戊子 日本國 遣僧梵盪梵繆 偕金逸來 報聘”.

고려에 보내 왔다.³¹⁾ 이처럼 고려와 막부, 고려와 대마도가 금구를 목적으로 상호 호의적인 입장에서 외교사신이나 관리를 파견하고 있었다.

<표 3> 1360~80년대 고려와 무로마치 막부의 왜구금지 사신

시기	고려 사신	일본 사신	사료 출전
1366년(공민왕 15) ?월	金龍		고려사
1367년(貞治 6) 2월	(金龍)		선린국보기
1366년(공민왕 15) 11월	金逸		고려사
1367년(貞治 6) 2월	金一(=金逸)		선린국보기
1367년(貞治 6) 6월		미상	선린국보기, (사수기)
1368년(공민왕 17) 1월		僧 梵湍, 梵繆	고려사
1368년(공민왕 17) 7월		미상	고려사
1368년(공민왕 17) 윤7월	李夏生		고려사
1368년(공민왕 17) 11월		미상	고려사
1375년(우왕 원년) 2월	羅興儒		고려사
1376년(우왕 2) 10월	羅興儒 재 귀국		고려사
1376년(우왕 2) 10월		僧 良柔	고려사
1377년(우왕 3) 6월	安吉祥		고려사
1377년(우왕 3) 8월		僧 信弘	고려사
1377년(우왕 3) 9월	鄭夢周		고려사
1378년(우왕 4) 6월		僧 信弘	고려사
1378년(우왕 4) 7월	鄭夢周 귀국	周孟仁	고려사
1378년(우왕 4) 10월	李子庸, 韓國柱		고려사
1378년(우왕 4) 11월		霸家臺 倭使	고려사
1379년(우왕 5) 2월		僧 法印	고려사
1379년(우왕 5) 5월		朴居士 (大內氏)	고려사
1379년(우왕 5) 윤5월	尹思忠		고려사
1380년(우왕 6) 11월	房之用 귀국	探題將軍五郎兵衛	고려사

만약에 막부와 대마도가 고려에서 제기한 왜구 침탈의 문제를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고려의 금구 사신에 대해 냉담했을 것이다. 그러나 <표 3>의 사신 왕래처럼, 일본의 막부와 대마도는 회답사를 보내주며 고려 금구 사신에 대해 매우 호의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려의 금구 사신에 대한 막부와 대마도의 우호적 태도는 ‘무로마치 왜구’가 왜인 혹은 일본 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 막부의 정치권력 내부에서 왜구금지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

30) 『고려사』 권41 세가 제41,恭愍王 17년(1368) 7월조, "秋七月 乙亥 日本遣使來聘 己卯 對馬島萬戶遣使 來獻土物 …(中略)… 閏月 以早放影殿役徒 遣講究使李夏生于對馬島".

31) 『고려사』 권41 세가 제41,恭愍王 17년(1368) 11월조, "十一月 丙午 對馬島萬戶崇宗慶 遣使來朝 賜宗慶米一千石".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1360년대에 왜구 침입 횟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1370년대에 접어들면서 규슈의 정세가 다시 큰 혼돈에 빠져들었고 왜구의 침입 빈도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급변하고 있었다.³²⁾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은 1371년 12월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을 규슈탐제로 임명하여 1360년대부터 규슈에서 황금기를 구가하던 남조의 가네요시친왕(懷良親王) 세력에게 타격을 안겨 줄 계획을 세웠다. 막부의 이러한 판단과 결정은 맞아떨어져서 료순은 자신의 일족과 무사들을 거느리고 규슈로 내려갔다. 규슈에서 무사세력을 규합한 료순은 1372년 8월 다자이후를 함락시키고 남조세력을 고라산(高良山)으로 패퇴시켰다. 이 과정에서 규슈는 한 차례 더 심각한 혼란을 치루어야 만 했다.

그리고 1375년 7월 료순은 남조의 가네요시친왕(懷良親王)과 기쿠치씨(菊池氏)의 본거지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남조의 반격은 의외로 강하였으므로, 료순은 규슈 3대 세력인 오토모 치카요(大友親世)·시마쓰 우지히사(島津氏久)·쇼니 후유스케(少貳冬資) 등에게 군사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다자이후가 위치한 치쿠젠(筑前)의 슈고(守護) 후유스케(冬資)만이 이 전투에 출전하지 않았다. 1375년 8월 료순은 우지히사(氏久)에게 후유스케가 전투에 출전하도록 종용하였다. 그리고 미즈시마(水島) 진영에 도착한 후유스케를 제거해 버렸다.³³⁾ 이렇게 료순에 의한 후유스케 제거는 남규슈를 장악하고 있던 시마쓰 우지히사의 거센 저항을 촉발시켜 일순간에 규슈에서 료순의 입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 기회를 이용해 남조 측의 반격이 더욱 거세졌으므로, 결국 료순은 자신의 많은 부장들을 잃은 채 미즈시마 진영에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마가와 료순의 규슈 등장과 활동은 오히려 규슈의 정세를 두 차례에 걸쳐 대혼란에 빠지게 만들었고, ‘무로마치 왜구’의 고려 침탈을 더욱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1375년부터 79년까지 고려의 금구 사신이 매년 일본에 파견되었다. 1375년(우왕 원년) 2월부터 나홍유가 두 차례 막부에 파견되었고,³⁴⁾ 다음해 10월 귀국하는 길에 일본 승려 양유(良柔)와 함께 돌아왔다.³⁵⁾ 이때 막부의 외교 서신을 담당하던 승려 주좌(周左)의 서신이 고려에 전달되었다. 그 내용은 남조의 가네요시친왕이 규슈에 난립하여 혼란스런 상황인데, 그 틈을 이용해서 ‘서해도(=규슈)의 어리석은 백성(頑民)’이 왜구로 고려를 침탈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북조가 규슈를 장악하게 된다면 왜구가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도 빠뜨리지 않았다.³⁶⁾ 이렇게 왜구의 잦은 침탈에 대해 무로마치 막부가 무게감 있는 회답사를 파

32) 참고, 『一揆와 倭寇』, 73쪽(<표 3> 왜구의 출몰 빈도수 참조).

33) 『薩藩舊記』 前篇 권28 永和 원년(1375) 8월조, “八月十一日 了俊會 公於水島 少貳冬資不來會 了俊使 公徵之 冬資乃來 二十六日 了俊令賊殺冬資於水島”.

34)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원년(1375) 2월조 “判典客寺事羅興儒 聘日本”; 『東寺文書』 永和 원년(1375) 11월 19; 永和 원년(1375) 12월 9일;

35)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2년(1376) 10월조 “十月 羅興儒 還自日本 日本遣僧良柔 來報聘 …(下略)”.

36)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2년(1376) 10월조 “惟我西海一路 九州亂臣割據 不納貢賦 且二十餘年矣 西邊海道頑民 觀釁出寇 非我所爲 …(中略)… 庶幾克復九州 則誓天指日禁約海寇”.

견한 것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우호적인 접근이었다.

그러나 고려와 막부의 외교적 금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구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고려는 1377년(우왕 3) 6월 안길상을 막부에 보내 왜구금지 약속의 불이행을 강력히 항의하였다.³⁷⁾ 그리고 이전에 나홍유가 받아온 반첩 내용에서 규슈가 평정될 때까지는 왜구금지가 어렵다는 답신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일본의 조치에 상호 통교와 바닷길의 안정이 달려 있음을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을 삽입하였다. 이에 대해 1377년(우왕 3) 8월 막부는 안길상의 교토 순직에 대한 해명과 고려 첩장에 대한 회답사로 승려 신흥(信弘)을 보내왔다. 승려 신흥이 들고 온 규슈 단다이 이마가와 료순의 답서는 왜구가 ‘포도배(逋逃輩)’로서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아 금지시키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³⁸⁾ 일본의 답변에서는 왜구가 ‘포도배’, 즉 ‘도망친 무리’이고 이를 억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으므로 금구의 실질적인 성과를 외교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아직도 왜구 출몰이 계속되었으므로, 다시 1377년 9월 정몽주(鄭夢周)가 파견되어 왜구금지를 거듭 요구하였다.³⁹⁾ 그 답례로 1378년 6월 료순이 고려에서 왜구를 직접 토벌하도록 승려 신흥에게 69명의 군사를 보내왔다.⁴⁰⁾ 또 같은 해 10월 고려는 이자용(李子庸)과 한국주(韓國柱)를 보냈다. 또 11월에 패가대(霸家臺)의 사절이 울주(蔚州)에 정박하였는데, 승려 신흥이 쫓아가서 체포할 거라고 겁을 주어 되돌려 보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⁴¹⁾ 1379년 2월 승려 법인(法印)이 고려에 왔고, 같은 해 5월에는 한국주가 귀국하는 길에 오우치 요시히코(大內義弘)가 보낸 박거사(朴居士)가 군사 180명을 인솔하고 고려에 오기도 하였다.⁴²⁾ 같은 해 윤 5월 윤사충(尹思忠)에 이르기까지 매년 금구 사신을 쉬지 않고 파견하였다.⁴³⁾ 이처럼 군사까지 보내 왜구 토벌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막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이전의 외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친근한 대응이었음이 분명하다.

막부나 규슈단다이가 고려의 금구 외교를 거부하거나 일본인에 의한 왜구 침탈을 부정했던 사례가 없었다. 이 때문에 고려는 외교적으로 마찰없이 막부와 규슈에 금

37)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3년(1377) 6월조, “遣判典客寺事安吉祥于日本 請禁賊 書曰 …(中略) … 後據羅興儒實來貴國回文言稱 此寇 因我西海一路 九州亂臣割據 西島頑(民)然作寇 實非我所爲 未敢即許禁約 得此參詳 治民禁盜 國之常典 前項海寇 但肯禁約 理無不從 兩國通好 海道安靜 在於貴國處之如何耳”.

38)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3년(1377) 8월조 “日本國遣僧信弘 來報聘 書云 草竊之賊 是逋逃輩 不遵我令 未易禁焉”.

39)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3년(1377) 9월조 “遣前大司成鄭夢周 報聘于日本 且請禁賊 …(下略)”.

40)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4년(1378) 6월조, “日本九州節度使源了俊 使僧信弘 率其軍六十九人 來捕倭賊”.

41) 『고려사』 권133 열전 권46, 신우 4년(1378) 11월조, “霸家臺倭使 來泊蔚州 信弘言 彼若見我 必歸告其國 遂給曰 高麗將拘汝 使懼逃歸”; 그해 11월에 信弘은 固城郡 赤田浦 싸움에서 패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고려사』 列傳 권46, 辛禡 4년 11월조).

42)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5년(1379) 5월조, “韓國柱還自日本 大內義弘 遣朴居士 率其軍一百八十人 偕來”.

43) 『고려사』 권133 열전 제46, 신우 4년(1378) 10월조 ; 『고려사』 권134 열전 제47, 신우 5년(1379) 윤5월조 ; 신우 6년(1380) 11월조.

구 사신을 지속적으로 파견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막부가 고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지만 규슈 내의 전란으로 인해 ‘무로마치 왜구’의 출몰을 막아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결국 십 수 차례에 걸친 고려의 금구 외교가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서 지속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기대만큼의 금구 효과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열도 특히 규슈의 정세 안정과 왜구의 출몰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금구라는 외교 목표가 뚜렷했던 고려의 입장에서 한동안 기대했던 외교적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고려는 내륙으로 깊숙이 침탈을 일삼는 왜구를 대상으로 군사적으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1376년(우왕 2)의 최영의 홍산대첩, 1380년(우왕 6) 화포공격을 이용한 나세·심덕부·최무선 등의 진포대첩, 1380년(우왕 6) 이성계에 의한 황산대첩 등의 왜구 3대첩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몇 차례의 군사적인 대승만으로 왜구 침탈을 근절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한편 고려는 선제적인 왜구 근거지 공격 전략을 선택하여, 1389년 박위가 대마도정벌을 단행하였다.⁴⁴⁾ 고려의 대마도정벌은 적극적인 선제적인 공격을 통해 왜구를 금지시키려는 군사적인 강경 대응책이었다. 그렇다고 ‘무로마치 왜구’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는 않았다.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도 ‘무로마치 왜구’의 침탈은 계속되어 조선시대로 그 고민이 떠넘겨졌다.

44) 『고려사』 권116 열전 제29 박위전 ; 『고려사』 권137 열전 제50, 신창 원년(1389) 2월조.

IV. 조선 초기의 ‘무로마치 왜구’와 조선의 금구 외교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도 왜구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조선의 입장에서 계속 출몰하는 ‘무로마치 왜구’의 억제가 대일본 외교에서 최대의 현안이었다. 조선의 대왜인 정책은 고려에서처럼 왜인을 조선에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왜구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정치적·경제적으로 복속시키는 일이었다, 따라서 조선은 개국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무로마치 왜구’의 출몰 억제가 대일본 외교에서 최대의 현안이었다. 조선은 조선과 무로마치 막부, 조선과 다자이후, 조선과 대마도, 조선과 슈고(守護)세력 등과 수시로 사신과 관리를 교환하며 동시에 다원적인 금구 외교를 시도하였다. <표 4>와 같이 1392년부터 1398년까지 약 7년간 일본과 수십 차례에 걸쳐 사신을 주고 받았다. 그리고 이후에도 조선과 일본, 조선과 대마도 사이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신과 관리의 왕래가 있었다.

조선 초기 금구 외교는 고려 후기와 마찬가지로 무로마치 막부와 지방의 정치세력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조선으로서는 일본 측의 화해와 협조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왜구가 사라져 준 것이 아니었다. 고려 멸망 직전에 몇 년간 잠잠했던 왜구가 1393년(태조 2)부터 다시 고개를 들고 조선을 침탈하기 시작하였다. 섬라국(暹羅斛國)에 파견되었던 회례사(回禮使) 일행이 전라도 나주(羅州)에서 왜구의 포로가 되고, 1396년 7월 겨우 이자영(李子瑛)만이 일본에서 살아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⁴⁵⁾ 또 같은 해 8월에는 왜구가 영해성(寧海城)을 함락시키고,⁴⁶⁾ 10월에는 동래성을 포위하였다가 병선 21척을 불사르고 달아나는 등의 사건이 빈발하고 있었다.⁴⁷⁾ 조선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무로마치 왜구’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식으로 군사를 동원하여 왜구의 근거지를 일거에 섬멸하려는 강경책을 추진하였다.

1396년 12월 태조는 김사형을 오도 병마 도통처치사로 삼아 이키(一岐)와 대마도를 정벌하도록 명령하였다.⁴⁸⁾ 이것은 고려 말 박위의 대마도정벌 때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약탈을 일삼는 왜구를 군사력으로 일거에 섬멸하는 왜구 토벌 작전이었다. 김사형에 의한 대마도정벌의 성과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1398년부터 조선에 출몰하는 왜구의 회수가 어느 정도는 감소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45)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1396) 7월 11일조, “李子瑛來自日本. 初子瑛以通事, 偕禮賓少卿裴厚, 回禮暹羅斛國, 與其使者林得章等, 還到羅州海中, 爲倭寇所虜盡殲之. 子瑛獨被生擒以歸, 至是乃還”.

46)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1396) 8월 23일조.

47)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1396) 10월 27일조.

48)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1396) 12월 3일조, “丁亥 以門下右政丞金士衡爲五道兵馬都統處置使 以藝文春秋館太學士南在爲都兵馬使 中樞院副使辛克恭爲兵馬使 前都觀察使李茂爲都體察使 聚五道兵船擊一岐 對馬島”.

<표 4> 조선과 무로마치 막부의 왜구금지 사신 왕래. ()는 추정⁴⁹⁾

시기	조선 사신	일본 사신	사료 출전
1392년(태조 1) 10월		僧 藏主·宗順(筑州)	『태조실록』
1392년(태조 1) 11월	覺鎚		『선린국보기』
1392년(태조 1) 12월		僧 壽允	『선린국보기』
1393년(태조 2) 6월		僧 建哲(一岐)	『태조실록』
1393년(태조 2) 9월		미상	『태조실록』
1394년(태조 3) 5월	金巨原	僧 梵明	『태조실록』
1394년(태조 3) 5월		僧 梵明	『태조실록』
1394년(태조 3) 9월		미상(日本)	『태조실록』
1394년(태조 3) 10월	미상		『태조실록』
1394년(태조 3) 10월	崔龍蘇		『태조실록』
1394년(태조 3) 12월		미상(今川了俊)	『태조실록』
1395년(태조 4) 3월	金積善		『태조실록』
1395년(태조 4) 4월		미상(薩摩)	『태조실록』
1395년(태조 4) 7월		僧 原正泉(今川了俊)	『태조실록』
1395년(태조 4) 7월		僧 宗俱(今川了俊)	『태조실록』
1395년(태조 4) 7월		미상(日向)	『태조실록』
1395년(태조 4) 7월		미상(薩摩)	『태조실록』
1395년(태조 4) 12월	金積善 귀국		『태조실록』
1395년(태조 4) 12월		미상(大内)	『태조실록』
1396년(태조 5) 3월		僧 通竺·永琳(大内)	『태조실록』
1396년(태조 5) 7월	李子瑛 귀국		『태조실록』
1397년(태조 6) 5월	朴仁貴		『태조실록』
1397년(태조 6) 6월		미상(今川了俊)	『태조실록』
1397년(태조 6) 7월		미상(今川了俊)	『태조실록』
1397년(태조 6) 7월		미상(大内)	『태조실록』
1397년(태조 6) 8월		미상	『태조실록』
1397년(태조 6) 10월		僧 梵明	『태조실록』 ⁵⁰⁾⁵¹⁾
1397년(태조 6) 11월		僧 永範·永廓(大内)	『태조실록』
1397년(태조 6) 12월	朴惇之		『태조실록』
1397년(태조 6) 12월		미상(渋川滿頼)	『태조실록』
1398년(태조 7) 7월		미상(肥前)	『태조실록』
1398년(태조 7) 7월		僧 靈智(大内)	『태조실록』

조선의 강경한 왜구 진압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부터 투화해 오는 왜인의 수가 고려 말과 비교도 안 될 없을 만큼 증가해 가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에는 투화해 오는 일본인을 어떻게 수용하는가는 당면과제로 부상하였다. 조선에게는 군사적 정벌이라는 강경 군사전략만을 구사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었다. 조선은 일본인의 유입과 동향에 맞추어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김사형의 대마도정벌 다음 해인 1397년(태조 6) 조선에 투화한 일본 승려 원해(原海)에게

49) 졸고, 「중세 왜구의 경계침탈로 본 한·일 관계」 『한일관계사연구』42, 2012, 23~24쪽 참조.

50)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1396) 8월 23일조.

51)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1396) 8월 23일조.

전의박사(典醫博士)와 평(平)씨라는 성을 하사하였다.⁵²⁾ 또 1398년(태조 7) 2월에는 등육(藤六)과 임온(林溫)이 투화해 오자 장군직을 하사하고,⁵³⁾ 1407년(태종 7) 7월에도 평도전(平道全)이 투화해 오자 관직을 주고 선물로 은대(銀帶)를 하사하는⁵⁴⁾ 등의 왜인에 대한 회유정책도 꾸준히 실시하였다. 이처럼 조선이 ‘무로마치 왜구’를 근절하기 위해 대마도정벌이라는 강경책과 왜인을 포용하는 회유책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대왜인 금구 외교 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갔다.

이를테면 1407년 조선에 투화해 오는 평도전(平道全)에게 벼슬을 내려주었다.⁵⁵⁾ 또 1413년 대마도 종정무(宗貞茂)가 보낸 객인(客人)과 임온(林溫)이 보낸 객인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을 때, 임온에게 관직을 하사하였다.⁵⁶⁾ 이처럼 조선 초부터 일본인 투화자에게 벼슬을 하사하는 수직인제도(受職人制度)를 적극 실시하고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산발적으로 투화해 오던 일본인의 수가 조선 초기부터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의 적극적인 투화인 수용정책과 정착을 배려하는 제도의 운용에서 그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조선은 유입하는 일본인에게 일정한 지역(=포소)에 거주하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1407년 경상도 병마절제사 강사덕(姜思德)이 각 포소(浦所)의 사정을 알리는 상소문을 보면,⁵⁷⁾ 부산포와 내이포의 경우 1407년 이전부터 왜인의 포소(=거주지)로 운영되고 있었다.⁵⁸⁾

그리고 <표 5>에서와 같이 염포와 가배량의 경우에는 1418년(태종 18) 왜인 거주와 흥리왜인의 증가로 인해서 이곳에 왜관을 설치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1418년이 되면 왜인을 수용했던 포소는 부산포, 내이포, 염포, 가배량 등 4곳으로 확대되었다.

52) 『태조실록』 권10 태조 6년(1397) 8월 25일조. "日本僧原海率妻子來. 稍精醫術. 命長髮. 授典醫博士. 姓平".

53) 『태조실록』 권13 태조 7년(1398) 2월 17일조. "以降倭萬戶庾六. 改名藤六. 爲宣略將軍. 行中郎將. 羅可溫改名林溫. 爲宣略將軍. 行郎將".

54)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1407) 7월 15일조. "以平道全爲員外司宰少監 賜銀帶 道全 日本人之投化者也".

55)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1407) 7월 15일조. '以平道全爲員外司宰少監 賜銀帶 道全 日本人之投化者也.'

56)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1413) 8월 8일조. '宗貞茂使送客人及林溫使送客人等 來獻土物. 溫投化來仕. 受將軍之職 後還入對馬島 爲倭萬戶.'

57)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1407) 7월 27일조. '興利倭船 於各浦散泊 窺覘兵船虛實 實爲未便. 前番都節制使報于議政府 使於左右道都萬戶防禦之處到泊 (令)諸島倭船不能通知其故 依前於各浦散泊. 乞通諭各島 渠首行狀成給 使於都萬戶在處到泊 以防詐僞 以一體統

58)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산포와 내이포의 설치시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설이 있다. 그 중에서 1407년(태종 7)에 설치되었다고 보는 설로는 이현중(1964) 『朝鮮前期對日交涉史研究』, 한국연구원 ; 김익환(1979) 「부산왜관의 변천과 日本 專管居留地」, 『朝鮮近代對日關係史研究』 ; 한문중(2008) 「조선 전기 한일관계와 1407년의 의미」, 『지역과 역사』 22 등의 연구가 있다. 또 1409년(태종 9) 설치되었다고 보는 설로는 나종우(1990) 「조선 초기 대일본 통제책에 대한 고찰」, 『如山柳炳德博士華甲紀念韓國哲學宗教思想史』 ; 장순순(2001) 「조선 전기 왜관의 성립과 조.일외교의 특징」, 『한일관계사연구』 15 등의 연구가 있다.

<표 5> 조선 초기 포소와 삼포에 관한 기록

장소	출처 년대	기사 내용
富山浦 (釜山浦)	1407년(태종 7) 7월	홍리왜선이 左右道都萬戶가 방어하는 곳에 와서 정박
	1419년(세종 원년) 9월	왜인이 부산포와 내이포에 모여듦
	1423년(세종 5) 10월	객인이 숙박하는 내이포와 부산포 두 곳에 관사(館舍)와 창고를 지음
乃而浦 (薺浦)	1407년(태종 7) 7월	홍리왜선이 左右道都萬戶가 방어하는 곳에 와서 정박 내이포는 홍리왜선과 왜객의 사선(使船)이 항상 정박
	1419년(세종 원년) 9월	왜인이 부산포와 내이포에 모여듦
	1423년(세종 5) 10월	객인이 숙박하는 내이포와 부산포 두 곳에 관사(館舍)와 창고를 지음
鹽浦	1418년(태종 18) 3월	염포와 가배랑에 각각 왜관을 설치하여 항거왜인을 나누어 거주케 함
加背梁	1418년(태종 18) 3월	염포와 가배랑에 각각 왜관을 설치하여 항거왜인을 나누어 거주케 함

조선의 일본에 대한 강·온의 외교정책은 한동안 ‘무로마치 왜구’의 출몰을 뜸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1419년(세종 1)에 이르자 왜구가 다시 늘어났다. 같은 해 5월 ‘무로마치 왜구’에 의해 비인현(庇仁縣)의 백성들이 살해되고 병선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⁵⁹⁾ 다시 고개를 드는 왜구의 침탈은 조선에게 다시 군사작전을 감행하도록 빌미를 제공하였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태종은 병권을 장악하고 ‘무로마치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에 대한 군사적인 응징을 단행하였다.⁶⁰⁾ 같은 해 6월 9일 태종은 대마도 정벌의 교서를 내리고,⁶¹⁾ 같은 달 19일 이종무를 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로 임명한 다음 대마도 정벌을 단행하였다.⁶²⁾ 20일에는 이종무가 대마도의 두지포(豆知浦)에 상륙하여 장기전에 대비하였다. 이에 대마도의 종정성(宗貞盛)이 화친을 요청해 왔으므로 이종무는 이것을 받아들고 7월 3일 거제도(巨濟島)로 철수하였다.⁶³⁾ 이와 같은 이종무의 대마도정벌(=己亥東征)은 ‘무로마치 왜구’의 근거지를 초토화시켜서 그동안 왜구의 만행을 엄중히 문책하기 위해 실시한 군사적 징벌이었다.

그러나 1419년 조선의 대마도정벌로 인해서 대마도와의 외교관계가 단절되었고 포소도 폐쇄되었다. 일시적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외교적 관계가 소원해지는 상

59) 『세종실록』 권4 세종 원년(1419) 5월 7일조, “本月初五日曉 倭賊五十餘艘 突至庇仁縣之都豆音串 圍我兵船焚之 烟霧矇暗 未辨彼我”.

60) 『세종실록』 권4 세종 원년(1419) 5월 14일조.

61) 『세종실록』 권4 세종 원년(1419) 6월 9일조.

62) 『세종실록』 권4 세종 원년(1419) 6월 19일조 ; 이종무의 대마도정벌은 병선 227척과 17,285명의 병사, 그리고 65일분의 식량 등을 가지고 출전하였다(『세종실록』 권4 세종 원년(1419) 6월 17일조).

63) 『세종실록』 권4 세종 원년(1419) 7월 3일조.

황이 연출되었다. 그런 다음에 1423년 부산포와 내이포가 다시 개항되었다. 그리고 1426년 염포에서 추가로 왜인거주를 하락하면서 이른바 삼포(三浦)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⁶⁴⁾

조선은 삼포를 중심으로 단순히 왜인을 수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왜인에게 투화를 권유하고 큰 상을 주는 적극적인 왜인 수용정책을 추진해 나갔다.⁶⁵⁾ 기본적으로 왜인의 투화를 권유하고 큰 상을 내리는 원칙을 유지해 간 것이 조선의 대왜인 정책의 기본이었다. 또 왜인이 투화한 이후에도 의복과 식량을 지급하고 조세와 10년 동안 역(役)은 면제해 주는 등 왜관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생활지원 정책도 전개하였다. 그리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투화해 온 왜인의 생활 안정까지도 배려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례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왜인들에게 3년 동안 직(職)의 유무를 불문하고 봄·가을에 겹옷 한 벌, 여름에 홑옷 한 벌, 겨울에 유의(襦衣) 한 벌씩을 주고 있었다. 그런데 1423년(세종 5)에 이르면 더욱 확대시켜서 갓·신 이외에 의복은 1인당 봄·여름에 저포(苧布) 2필, 면마포(縣麻布) 각 1필과 가을·겨울에 면주(綿紬) 4필, 저포(苧布) 2필, 면포(縣布) 1필, 면자(縣子) 3근 7냥을 주도록 결정하고 있다.⁶⁶⁾ 또 1448년(세종 30) 투화한 왜인에게 쌀·술·소금·간장·어육(魚肉) 등을 하사하도록 하고 있다.⁶⁷⁾ 이처럼 조선은 고려의 정책과 차별화해서 왜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하는 대왜인 유화정책으로 적극 탈바꿈 해나갔다.

그러나 조선의 적극적인 왜인 수용정책에는 몇 가지 부작용이 내재되어 있었다. 1418년(태종 18) 하연(河演)은 상소문에서 투화한 왜인이 조선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제부터 더 이상 양식을 주지 말도록 건의하고 있다.⁶⁸⁾ 조선의 재정 부담이 삼포에 규정보다 많은 왜인이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1436년(세종 18) 삼포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왜인을 돌려보내고 206명만을 삼포에 거주하도록 조치하였다.⁶⁹⁾ 또 1440년(세종 22) 삼포에 무단으로 드나드는 왜인을 통제하기도 하였다.⁷⁰⁾ 그리고 1443년(세종 25) 삼포에 숨어든 도적과 본국에서 죄를 지은 왜인을 찾아내도록 지시하고 있다.⁷¹⁾ 그리고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의 수가 조선의 재정부담과 풍속유지에 밀

64) 졸고, 「고려와 조선 전기 왜인 집단거주의 형성과 운영」 『역사와 담론』56, 2010, 165쪽.

65) 1419년(세종 원년) 10월 대마도 종준(宗俊)의 투화를 성사시키는 큰 공이 있는 자에게는 벼슬을 주고, 공이 작은 자는 백성으로 삼겠다고 설득하고 있다(『세종실록』 권5 세종 1년(1419) 10월 11일조, ‘其必如宗俊等親來投化 乃許其降 大者爲官 小者爲民 聽其所願 使安生業. 汝往曉諭島人 其速來報.’).

66) 『세종실록』 권20 세종 5년(1423) 5월 13일조, ‘禮曹啓 前例 投化人等限三年 勿論有無職 給春秋袂衣一襲 夏節單衣一襲 冬節襦衣一襲. 今濟用監事煩 製造爲難 請笠靴外衣服 每一名給春夏等苧布二匹 縣麻布各一匹 秋冬等綿紬四匹 苧布二匹 縣布一匹 縣子三觔七兩 以爲恒式 從之.’

67) 『세종실록』 권122 세종 30년(1448) 12월 23일조, ‘乙亥 賜投化倭護軍藤九郎米酒鹽醬魚.’

68) 『태종실록』 권35 태종 18년(1418) 3월 20일조, “代言河演啓曰 投化倭人等來居我國 非一二年矣. 而猶賴國家資生 其支費不資 請自今勿復給糧”.

69) 『세종실록』 권71 세종 18년(1436) 3월 29일조, “遂遣敬差官于慶尙道 挨刷以送乃而浦住倭二百五十三人 鹽浦住倭九十六人 富山浦住倭二十九人. 其貞盛請留人及情願仍居二百六人 許令仍留”.

70) 『세종실록』 권89 세종 22년(1440) 5월 26일조, “若無符牒下海者 令各浦禁遏 亦勿許過送”.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삼포에 거주하는 왜인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조선에 입국하는 일본 사행의 접대가 커다란 부담이었다. 『해동제국기』와 『경국대전』에 일본 사신의 순수 접대비가 1만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삼포에 입항하는 왜인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귀환할 때까지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다. 조선이 대일본 유화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는 적지 않았다. 『성종실록』에는 1477년(성종 8) 삼포에서 소요되는 왜료(倭料)가 22,390여 석이고,⁷²⁾ 1490년(성종 21)부터 3년간 삼포에서 왜인에게 든 비용이 40,500여 석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⁷³⁾ 이처럼 『경국대전』에서 규정해 놓은 비용보다 더 많은 재정 지출은 조선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조선의 대왜인 유화정책의 이면에는 지나친 재정 부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조선은 큰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일본을 상대로 화래와 공존을 위해 막대한 경비를 감내해 나갔다. 그러면서 ‘삼포’를 중심으로 대왜인에 대한 유화책과 강경책을 적절히 병용시켜 나갔다. 조선은 ‘무로마치 왜구’에 대한 금구 외교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국내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 재정 부담을 감내해 내야만 했다.

71) 『세종실록』 권102 세종 25년(1443) 12월 16일조, "予惟在逃本賊及得罪本國之倭 恐或變名易姓 潛來隱伏. 卿知此意 密諭舊住親信之倭曰 如有潛來者 盡心伺察以告 則國家必厚賞汝矣 多方設計以捕之".

72) 『성종실록』 권77 성종 8년(1477) 윤2월 11일, "慶尙道軍需, 雖曰不裕, 丙申年冬等會計之數一百六十五萬六千八百三十餘碩, 同年一半州倉加納七千二百七十餘碩, 三浦倭料二萬二千三百九十餘碩; 國屯田所出、監司及各官補添亦多, 年年如此儲備, 雖不大裕, 亦非不足".

73) 『성종실록』 권278 성종 24년(1493) 윤5월 8일(신축), "近年客人出來之數, 比前日少減, 然考庚戌, 辛亥, 壬子三年, 三浦所費之數, 則大概四萬五百餘石, 若有凶歉, 國家將何以待之".

V. 맺 음 말

가마쿠라 시대 왜구는 일본열도가 정치적·사회적 혼란에 빠지는 조큐(承久)의 난의 발발로 고려를 대상으로 약탈하는 일본 해적의 약탈에서 시작되었다. 한편 고려는 초기부터 왜인을 수용하고 이들을 고려 내에 정착시키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후 몽골의 두 차례 일본 침입으로 왜인의 고려 거주가 뜸했다. 그러나 14세기 중반 이후 왜인의 고려 거주는 정착이 아니라 약탈을 목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이것이 ‘가마쿠라 왜구’인데, 이들의 고려 침탈 기록은 일본 사료인 『명월기』, 『백련초』, 『오처경』 등에도 나타난다. 왜구가 등장하던 시기에 고려가 가마쿠라 막부에 파견한 금구 사신이 수차례에 걸쳐서 다자이후로부터 매우 우호적인 회답을 받아냈다. 결과적으로 가마쿠라 막부에 대한 고려의 금구 외교는 어느 정도 화해 공존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하고, 이어 남북조내란의 장기화로 일본열도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규슈에까지 간노조란(觀應擾亂)의 여파가 미치면서, 고려에서 왜구 출몰이 잦아졌는데, 이것을 『고려사』에서 ‘경인년(1350년) 이후 왜구’라고 불렀다. 경인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왜구의 침입은 고려사회에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안겨 주었다. 1360년대부터 고려는 왜구를 제압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갔다. 먼저 고려는 왜구의 발호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교토에 금구사신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무로마치 막부는 왜구의 출현이 일본의 혼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공감하고, 금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와 공동으로 노력하였다. 고려는 막부와 대마도에 별도로 사신과 관리를 파견하여 금구 외교를 전개하였다. 막부와 대마도에서 고려의 금구 사신을 접대하는 태도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따라서 고려 사신에 대한 막부와 대마도의 우호적 태도는 ‘무로마치 왜구’에 의한 고려의 피해를 공동 인식하는 화해의 결정적 증거였다.

137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려는 왜구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외교적인 대응에만 의존하지 않고 군사적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갔다. 각각 홍산, 진포, 황산, 관음포에서 대승을 거둔 고려는 자신감을 가지고 박위의 지휘 아래 대마도 정벌을 단행하였다. 고려는 금구의 문제를 외교와 군사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고려의 외교적·군사적인 대응이 성공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양국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 속에서 십 수 차례에 걸쳐 금구 외교가 지속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대했던 것만큼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왜구 출몰이 일본열도의 정치적 안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인과관계의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개국 직후 일시적으로 증가해 가는 ‘무로마치 왜구’의 출몰은 대일본 외교에 있어서 최대 현안이었다. 조선의 대왜인 정책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인을 적극 수용하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복속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개국 직후부터 조선과 무로마치 막부, 조선과 다자이후,

조선과 대마도, 조선과 슈고(守護)세력 등과 수시로 사신을 주고받으며 다원적인 왜구금지 외교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조선은 약탈을 일삼는 왜구를 군사력으로 일거에 섬멸하려는 대마도 정벌을 두 차례나 실시하였다. 조선의 유화적인 대왜인 정책은 왜인이 조선에 거주할 수 있는 포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삼포(三浦)시대를 열어 투화한 왜인을 수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까지도 배려하는 평화적인 대왜인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삼포를 중심으로 왜인을 수용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왜인에게 투화를 권장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인 왜인 수용정책이었다. 그러나 조선이 실시한 대왜인 유화정책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삼포’를 중심으로 하는 왜인에 대한 유화책과 강경책은 조선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조선에게 가중되는 재정적 부담은 ‘무로마치 왜구’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이었다.

「인조 즉위초 후금(後金) 대비책과 회답검쇄환사(1624년) 파견」

이 훈(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머 리 말

1. 인조 즉위초 후금(後金)의 위협 고조와 병력 이동 논쟁
 - 1) 즉위 직후 후금 인식과 서변(西邊) 대비책
 - 2) 후금의 ‘겨울 직공설’과 병력 이동 논쟁
2. 1623년 도쿠가와 막부의 통신사 요청과 조선의 대응
 - 1) 도쿠가와(德川) 막부의 ‘쇼군(家光) 습직 축하’ 명분
 - 2) 일본측(對馬藩)의 통신사 요청과 ‘권의지책’(權宜之策)으로서의 파견
3. 1624년 회답검쇄환사의 국서 전달과 ‘린호’(隣好)의 의미
 - 1) 개작 이전 인조의 회답국서와 대일본인식
 - 2) 조선의 ‘자발적’ 통신사 파견으로 기재된 쇼군 답서의 의도
4. 회답검쇄환사의 일본 정보와 남쪽 병력의 서변(西邊) 이동 결정
 - 1) 회답검쇄환사의 일본 정보와 조선의 막부권력 인식
 - 2) 후금 대비책으로 남쪽 병력의 ‘서변’ 이동 추진

맺 음 말

머 리 말

임란 이후 조일 양국관계에 대해서는, 1607년 조선이 ‘회답검쇄환사’를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과 국교를 회복한 이래 1811년까지 ‘통신사’라는 이름의 국왕사절을 파견하여 상호간에 ‘구신’(舊信) 또는 ‘화호’(和好)를 확인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안정되게 유지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임란 이후 조선이 도쿠가와(德川) 막부에 파견한 통신사의 파견 횟수를 보면 19세기 후반까지 260년 동안 모두 12번에 불과하다. 통신사가 조일간 교린 또는 평화외교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것 치고는 교류가 활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숫자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절반은 주로 국교 재개 직후(1607~1655년)의 50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6번에 걸쳐 집중적으로 파견되었다. 이 시기에는 제1회 회답검쇄환사 파견(1607년)을 시작으로 을미통신사행(1655년) 까지 거의 10년에 한번 꼴로 파견되었다.

여기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1624년(인조 2)의 제3차 회답검쇄환사는 제2차 회답검쇄환사(1617년, 광해군 9)로부터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본측이 ‘쇼군(將

軍) 습직 축하'라는 명분으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왔다. 그리고 조선은 쇼군 습직 사실은 인지한지 6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파견을 결정하였다. 제1차 회답검쇄환사(1607년, 선조 40)가 일본측의 요청부터 조선의 파견 결정까지 2년, 제2차 회답검쇄환사가 요청에서 파견 결정까지 3~4년이나 걸렸던 것에 비한다면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지막 신미통신사행(1811년, 순조 11)이 파견 교섭 자체만 거의 30년 가까이 걸린 것에 비한다면 놀라운 속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2차례의 사행에 비해 인조 즉위 직후 회답검쇄환사(1624년)의 파견이 신속하게 결정되었던 것은 왜일까?

기왕의 연구에서는 인조의 즉위 직후 '이괄의 난'(1624.1~2)과 후금(後金)의 압박이라는 내우외환 속에서 일본측(對馬藩)의 협박에 가까운 요청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파견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해온 경향이 있었다.⁷⁴⁾ 임란 이후 조일 외교는 조선이 요구한 통교조건, 즉 쇼군의 '선위치서'(先爲致書)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일본측의 요청이 더 결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 이에 일본측이 먼저 요청을 해 오면 조선은 그때그때 대응하는 식이었다고 이해해온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일본측의 요청과 조선의 파견」이라는 교섭절차에 비중을 둔 연구의 경우, 통신사 파견이라는 조선의 결정을 대외정책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보다는 협상 기술이나 교섭 현상에 주목하여 쓰시마번⁷⁵⁾의 국서 위조 사실 및 조일 양국관계에서 쓰시마번의 역할만을 강조해 온 경향이 있었다⁷⁶⁾

이러한 연구에서는 임란 이후 후금의 대두라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변동 속에서 일본이 조선의 안보 위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빈번하게 외교를 선택했으며, 조선 역시 명과 후금의 압박, 모문룡에 대한 군사적 부담 속에서 왜 일본과 외교를 결정했는지, 조일 양국의 국정 운영이나 외교정책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부족이라 할 수 있다. 내정과 외교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관점에서 도쿠가와 막부가 정권의 안정 차원에서 조선과의 통신사외교를 필요로 했음을 밝힌 연구라 하더라도, 조선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검토가 빈약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⁷⁷⁾

74) 1624년 제3차 회답검쇄환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장식, 「1624년 마지막해 떠난 사행과 뜻밖의 큰 수확」『통신사를 따라 에도시대를 가다』고즈원, 2005.

이민호, 「인조조의 대일관계고」『동서사학』4, 1998.

문영규, 「인조대 대일외교의 성격」『한일관계사연구』19, 2009.

손승철, 「임란 직후 중화적 교린체제의 부활」『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지성의 샘, 1994.

田代和生, 『書き替えられた国書—徳川朝鮮外交の舞台裏』中央公論社, 1983.

三宅英利, 「家光政権の成立と回答兼刷還使」『近世日朝関係史の研究』文献出版, 1987.

仲尾宏, 「寛永元年度(1624)の朝鮮通信使と將軍襲職祝賀」『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明石書店, 1997.

仲尾宏, 『朝鮮通信使—江戸日本の誠信外交』岩波書店, 2007.

75) '쓰시마'에 대해, 도쿠가와 막번제(幕藩制) 하에서 다이묘(大名) 소(宗)씨가 다스리는 쓰시마번의 번정(藩政)기구를 의미할 때는 '쓰시마번'(對馬藩), 지역적인 공간을 의미할 때는 '쓰시마'(對馬)로 표기한다.

76) 田代和生, 『書き替えられた国書—徳川朝鮮外交の舞台裏』中央公論社, 1983.

77) 三宅英利는 외교가 내정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1624년의 회답검쇄환사 파견을 분석한 결과, 일본측에서는 도쿠가와 세습정권에 대한 반도쿠가와 다이묘의 진정, 조선으로서는 후금대비책과 인과관

임란 이후 조선의 대외관계를 보면, 중국 대륙에서 명(明)에 대한 후금(後金)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선은 ‘북변 방어’라는 새로운 안보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후금의 만주 점령(1618년)과 요동(遼東) 공략(1621년) 이후, 명의 대요동·조선 정책의 창구가 모문룡(毛文龍)의 군영(도독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인조 즉위 직후 毛 군영의 가도(槓島) 주둔에 따르는 군량 공급 부담문제는 국정상 가장 큰 현안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광해군대부터 정묘호란(1627년) 직전까지도 지속되었으며, 명의 후금 공략시 언제라도 군사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도 갖추어야만 했다.

후금 또한 1624년 회담겸쇄환사 파견 때까지 조선을 직접 공략하지는 않았지만, 조선과 명의 연합을 차단하기 위해 조선을 먼저 공략할 수 있다는 전략이었다. 인조 즉위 이후 국정운영에서는 이렇듯 명의 군사적 요청 가능성에 대한 불안, 모문룡의 조선 주둔 부담, 후금의 북변 침입 가능성에 대비한 군량과 군인, 무기의 확보가 가장 긴급한 문제로, 軍役의 실시, 호패제 및 대동법 실시, 양전(量田) 등도 모두 국방안보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제1차 회담겸쇄환사 파견(1607년)을 계기로 조일간에 국교가 회복됨에 따라 당장의 전쟁 재발 위험은 해소되었다. 또 2차례에 걸친 회담겸쇄환사(1607·1617년)의 일본 정탐을 통해 도쿠가와 막부가 무력을 동원하여 재침할 가능성은 낮다는 인식도 생기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쓰시마번(對馬藩)이 막부의 무력 도발 가능성(餘威)을 들먹임으로써 일본의 재침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었기에 남변의 방어체계도 여전히 가동되고 있었다. 인조는 반정을 통해 즉위한 만큼, 혹시라도 일본의 무력 도발로 인한 백성의 부담 증가로 민심이 동요할 경우 전후복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왕권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인조 즉위 직후의 회담겸쇄환사 파견이란 이렇게 군사·안보적으로 위기에 당면한 가운데 내려진 외교적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내부 문제를 안고 있었다. 후금의 대두와 관련하여 명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 요청 등은 없었지만,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역시 대륙정세 동향과 그에 따른 조선의 건재 여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오사카의 전투’(1614~1615년)로 히데요리(豐臣秀頼) 세력을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부(西國) 지역에는 도쿠가와(德川) 세습권력에 대해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는 반도쿠가와 다이묘(大名)들이 존재하였다. 이에 막부로서는 이에미츠(德川家光)의 쇼군 습직(1623년)을 계기로 3대에 걸친 세습정권의 권위를 전국의 다이묘에게 부각시키기 위해 조선과의 외교 재개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렇듯 17세기 초반에는 후금의 대두로 동아시아 각국에서 안보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조일 양국 모두 비상시국을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의외로 회담겸쇄환사 파견을 통한 외교를 멈추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양국 모두 국정 운영상의 난제 해결과

계에 있었음을 처음으로 지적하였다(『家光政權の成立と回答兼刷還使』『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文獻出版, 1987). 이에 비해 仲尾宏는 1624년의 회담겸쇄환사 초빙과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 이데오로기의 연관성을 부각시켰다(『寛永元年度(1624)の朝鮮通信使と將軍襲職祝賀』『朝鮮通信使と德川幕府』明石書店, 1997).

관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7세기 초반 후금의 대두로 인해 ‘북로남왜’에 처한 조선의 안보환경 속에서 조일간에 사절 파견이라는 외교가 왜 필요하였으며, 또 외교의 실태는 어떠했는지를 조선의 국정운영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회담검쇄환사의 귀국 후 후금대비책에 일어난 정책 변화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1. 인조 즉위초 후금(後金)의 위협 고조와 병력 이동 논쟁

1) 즉위 직후 후금 인식과 서변(西邊) 대비책

인조 즉위 직후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면, 새로운 왕권의 안정을 위해 반정 명분을 신속하게 납득시키는 한편, 누르하치의 요동 함락(1621년)으로 확인된 후금의 군사적 위력에 대비하여 북변의 방어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1623년 3월에는 즉위하자마자 모문룡을 통해 왕위 교체사실을 명(明)에 알렸으며,⁷⁸⁾ 이듬해인 1624년 4월 명의 사자가 ‘조선국왕’ 책봉에 대한 교서를 전달해오자 이를 전국에 반포하여 민심의 안정을 도모하였다.⁷⁹⁾ 그리고 조선 스스로 친명을 표방하여 ‘송명배금’(崇明背金) 의지를 부각하는 한편,⁸⁰⁾ 명의 후금 토벌시 군사적 협력을 약속하였다.⁸¹⁾ 반정공신 중의 한사람이었던 이괄(李适)은 조만간 오랑개(후금)와 일전을 벌여야 하니 군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인조에게 건의하였으며, 인조도 이를 받아들였다.⁸²⁾

인조 정권이 후금을 위협요인으로 여겨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은 후금을 ‘奴賊, 胡地, 胡人’(오랑개)으로 지칭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⁸³⁾ 그런 만큼 후금과의 충돌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책이 정묘호란(1627년)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송명배금’ 의지를 관철할만한 군사적 역량을 구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광해군대의 방어책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후금의 위력은 이미 선왕대부터 확인된 바 있다. 후금은 자신들보다 월등한 방어병력을 보유하고 있던 요동의 巨鎭들을 함락(1621년, 광해군 13)한 것을 시작으로,⁸⁴⁾ 심양(瀋陽)과 요양(遼陽)에 이어 광녕(廣寧)까지 함락(1622년, 광해군 14)시켰다. 후금이 산해관(山海關) 밖의 모든 영역, 즉 요동을 세력권 안에 넣게 됨으로써 조선과 명의 육로 교통도 단절되게 되었다. 이는 병참·보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임진왜란 당시의 일본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후금군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군보다 월등한 기동력과 지리적 접근성을 갖춘 후금의 요동

78)『인조실록』권1, 원년(1623) 4월 23일 임오.

79)『인조실록』권1, 원년(1623) 3월 22일 임자.

80)『인조실록』권1, 원년(1623) 4월 23일 임오.

81)『인조실록』권1, 원년(1623) 4월 23일 임오(모문룡에게 천조와 함께 후금 토벌).

82)『승정원일기』인조 1년(1623) 4월 13일 임신.

83)『인조실록』권1, 원년(1623) 6월 24일 계미, 7월 3일 신묘.

84)『광해군일기』권161, 13년(1621) 2월 4일 병오.

경영이란 조선에 있어서는 북쪽에 안보상 심각한 위협과 불안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광해군 당시 가장 불안하게 여겼던 것은, 군사상 유리한 조건을 갖춘 후금군이 조선의 도성(都城)을 향해 곧바로 직공(直攻)해 들어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광해군대에는 조선의 군사적 열세를 고려하여 후금과의 교전시 군사적으로 정면대결하기 보다는 직로(直路)상에 위치한 정주와 평양성의 방어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⁸⁵⁾

인조가 즉위한 1623년도 후금에 대한 안보위기는 기본적으로 광해군대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즉위 직후 ‘송명배금’을 표방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광해군대의 판단과 전략을 계승하여, 도성 방어를 위한 평양성 건축과 서북지방(西路, 西邊, 西道 및 北路)의 수비(산성 수축 및), 즉 ‘서방’(西防)에 중점을 둔 대비책들이 논의되었다.

인조 즉위 직후 서방(西防)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었을까?

우선, 1623년 4월 인조가 즉위한 지 1달도 안 되는 시기에 도원수 장만(張晩)을 비롯한 정충신(鄭忠信), 남이흥(南以興) 등의 무장(武將)들이 조선의 군사적 열세 때문에 후금과의 교전시 정면대결 보다는 수성(守城)과 방어에 치중해야 할 것을 건의하였다.⁸⁶⁾ 인조 역시 조선군의 허술함을 인정한 바 있다.⁸⁷⁾ 같은 해 8월 좌찬성 이귀(李貴)는 조선의 허약한 군사력을 고려할 때 관서(關西)의 방비는 영변과 평양성을 중심으로 수비할 것을 건의하였다.⁸⁸⁾ 평양성을 중시한 서북변의 방어는 바로 광해군대의 대후금 대비책을 계승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7~8월에는 인조가 조정 대신(좌의정, 우의정, 병조·호조·형조의 판서) 및 관서 방비의 책임을 맡은 부원수 이괄 등과 함께 관서(西路)의 방비, 즉 ‘서방’(西防)을 위한 병력 징발 및 군량 확보, 이를 위한 재정 마련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몇 차례에 걸친 논의에서는, ‘서방’에 대략 1만5천명 정도의 병사와 군량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다.⁸⁹⁾ 조선은 광해군대에 이미 요동과 심양지역을 수비하는 후금군을 2십8만명 정도로 파악한 바 있다.⁹⁰⁾ 인조대에도 그에는 못미치지만 안주 목사 정충신(鄭忠信)과 연안부사 남이흥(南以興)이 1624년 4월 후금군의 총병력을 9만명으로 추산 보고한 바 있다.⁹¹⁾ 서변의 1만5천명 정도의 병력이란 우선 규모 면에서 10만명 단위의 후금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열세였다. 임란으로 상실된 병력, 민력의 피폐로 이를 확보할 만한 재정적 기반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당장 확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후금군(騎兵)의 신속한 기동성을 고려할 경우 군사 징발이 어려울 경우 대응 시기를 놓칠 수도 있었다. 이에 좌의정 윤방(尹昉)이 남쪽의 군사를 징발하는 대신 군포(軍布)를 거두어 서변에서 바로 병사를 고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⁹²⁾ 그리고 9월에는 우찬성 이귀(李貴) 역시 남쪽의 군사

85) 허태구, 「仁祖代 對後金(對淸) 방어책의 추진과 한계」 『조선시대사학보』 61, 2012, 82~91쪽.

86) 『인조실록』 권1, 원년(1623) 4월 2일 신유.

87) 『인조실록』 권3, 원년(1623) 윤10월 25일 신해.

88) 『인조실록』 권2, 원년(1623) 8월 29일 정해.

89) 『인조실록』 권2, 원년(1623) 7월 3일 신묘, 8월 16일 갑술, 8월 17일 을해.

90) 『광해군일기』 권161, 13년(1621) 2월 11일

91) 『인조실록』 권5, 2년(1624) 4월 14일 무진.

징발을 지연시키는 대신 현지 모병(募兵)의 유리한 점을 제시하였다.⁹³⁾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현지에 가서 모군(募軍)을 하겠다고 자원 의사까지 표명하였다.⁹⁴⁾ 그러나 결국 모병 시도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 결과 9월에는 병사 징발 방침이 3남(충청·전라·경상)의 군사를 서북지방으로 이동시키는 쪽으로 결정되게 되었다.⁹⁵⁾ 1623년 10월부터 윤10월에 걸쳐 전라도 병사 2천2백명, 충청도와 경상도 병사 2천9백명 등, 약 7천명의 병사가 서북지역에 투입되었다.⁹⁶⁾ 그리고 서북(평산, 덕진) 및 도성 주변의 산성에 대한 방어 점검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1623년 10월 후금 대비책으로 이미 남쪽 군사의 서변 이동이 추진되기 시작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1624년 1월에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났다. 도성 방어를 위해 8도 병사의 징발이 논의되는 가운데, 좌찬성 이귀(李貴)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倭情)을 이유로 남변 방위부대의 복상 불가를 건의하였다.⁹⁷⁾

2) 후금의 ‘겨울 직공설’과 병력 이동 논쟁

1624년(인조 2) 2월에는 인조 즉위 이후 일본측이 처음으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왔다. 이때는 이미 ‘이괄의 난’(1624.1~2)도 진압된 상태로 8월에 제3회 회답검쇄환사 일행을 일본에 파견함으로써 1607년 국교재개 이래의 양국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앞서 보았듯이, 일본과 외교를 추진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군사·안보 면에서는 인조대의 서북지역 대비책으로 남쪽 병력의 이동 조치들이 이제 막 수립되기 시작한 때였다. 그러나 이괄의 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남쪽 병력의 서변 이동 방침이 신속하게 추진되지는 못했다. 총체적으로는 1621년 이후 모문룡의 군영(槓島) 유지에 소요되는 군량 조달과 관련된 경제적 요구들이 조선의 재정을 압박함으로써 조선의 군사력 확충 방안 등을 모색할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 같다. 이 시기『인조실록』 및 『승정원일기』를 보면, 인조가 대신, 비변사와 함께 거의 매달 모문룡의 군량 조달 문제를 논의할 정도로 부담에 시달렸다. 이런 가운데 서방(西防) 대비책으로는 기존의 남쪽 병력을 이동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추진 과정에서는 남변 안보에 대한 인식 차를 바탕으로 신료들의 의견도 양분되었다.

역사적 사실만을 놓고 보면, 인조 즉위 직후부터 정묘호란 직전(1623~1626년) 까지 후금이 조선에 직접 군사적 도발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이에 실제로는 모문룡의 군사 행동과 후금군의 군사적 동향에 대한 정탐을 계속하면서 서방(西防)에 대비한 남쪽 병력의 이동을 추진하는 수 밖에 없었다. 병력 이동 논쟁은 1625년 5월부터 9월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거의 반년 정도 지속된 논쟁을 종식시킨 것은 뜻밖에도 제

92)『인조실록』권2, 원년(1623) 8월 16일 갑술.

93)『인조실록』권3, 원년(1623) 9월 2일 기축.

94)『인조실록』권3, 원년(1623) 9월 13일 경자.

95)『인조실록』권3, 원년(1623) 9월 6일 계사.

96)『인조실록』권3, 원년(1623) 9월 10일 정유, 10월 29일 병술, 윤10월 2일 무자, 윤10월 9일 을미.

97)『비변사등록』인조 2년(1624) 1월 27일.

3회 ‘회담검쇄환사’ 일행의 일본정탐 결과였다.

그러면 구체적인 추진 경위는 어떠했을까?

조선은 명의 실지(失地) 회복과 후금의 위협으로부터 조선의 북쪽 변경을 지켜준다는 명분하에 1621년 이후 조·명 국경 근처의 섬인 가도(槎島)에 주둔하고 있는 모문룡의 군사행동이 북변을 더 위태롭게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1624년 4월 모문룡의 후금 공격을 둘러싼 논의에서는, 호조판서 심열(沈悅)이 후금 공격의 성공과 패배를 불문하고 경유지역인 조선이 피해를 면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인조 역시 모문룡의 군사 동원이 실제로는 경유지역인 함경도를 불모지로 변하게 할 것을 염려하였다.⁹⁸⁾ 후금 정찰을 내세운 모문룡의 명분없는 군사동원으로 경유지역이 불모지가 될 경우 이는 실제로는 조선의 실지(失地)를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심이 이반될 수 있었다. 이에 즉위 직후 명에 대해 후금 공격시 파병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병하지는 않았다.⁹⁹⁾

인조 정권으로서는 반정 1년만인 1624년 4월에서야 책봉 사실을 반포하여 이제서야 겨우 민심이 안정된 데다, 후금보다도 군사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성급한 파병 보다는 후금 동향 파악에 비중을 둘 수 밖에 없었다. 1624년 11월에는 후금의 정세를 정탐하고 온 노남향 등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¹⁰⁰⁾ 그리고 12월에는 참장 서고신(徐孤臣)이 모문룡측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보고하였다. 즉 후금군이 압록강의 겨울철 동결 때 조선에 침범해올 계획이 있었지만, 모문룡측이 후금 세력을 분열시켰기에 조선을 직접 침략해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었다.¹⁰¹⁾ 이에 비변사에서조차 후금이 조선의 국경을 넘어 침범해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지만, 만일에 대비하여 경기도 군사를 변방으로 이동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¹⁰²⁾ 후금에 대한 정보는 정확성 여부를 불문하고 여러 정보원을 통해 계속해서 수집되었다. 1625년 3월에는 누르하치(奴酋)가 군사 2만으로 명의 금주위(錦州衛)를 공격했으나 실패하고 심양(瀋陽)으로 돌아간 사실이 보고되었다.¹⁰³⁾ 그러나 5월에는 후금의 금주위 공격은 실패했지만 조선을 먼저 침략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선제공격설’이 제기되면서, 남쪽 군사를 북쪽으로 데려가 방수(防守)해야 한다는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¹⁰⁴⁾

앞서 보았듯이, 인조 즉위 직후 후금 대비책으로서는 이미 1623년(인조 1) 10월에 남쪽 군사를 서북쪽으로 데려가 방수(防守)한다는 방침이 시행된 전례가 있다. 이에 서변의 방비와 순찰을 맡아보았던 영사(申欽), 제찰사(張晩) 등이 1625년 5월 재차 남쪽 군사의 북쪽 이동이 부득이함을 피력하였다.

반면에 비변사는 민력 고갈을 이유로 남쪽 군사의 북쪽 방수를 반대하였다.¹⁰⁵⁾ 그

98) 『인조실록』권5, 2년(1624) 4월 16일 기해.

99) 『인조실록』권5, 2년(1624) 4월 16일 기해.

100) 『인조실록』권7, 2년(1624) 11월 22일 임신.

101) 『인조실록』권7, 2년(1624) 12월 6일 병술.

102) 『인조실록』권7, 2년(1624) 12월 29일 기유.

103) 『인조실록』권8, 3년(1625) 3월 13일 신유.

104) 『인조실록』권9, 3년(1625) 5월 24일 신미, 5월 29일 병자.

리고 1625년 6월 후금의 杜有格(요동) 공격 사실과 명 공격 계획 정보를 입수하게 되자, 오히려 그해 겨울까지는 후금의 조선 침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좌찬성(李貴)은 민력 휴식을 위해 남쪽 병력을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거둬 반대의를 표명하였다.¹⁰⁶⁾

병력 이동에 대한 논쟁은 1625년 9월 모문룡이 제공하는 후금 정보, 즉 후금이 그해 겨울 조선 침략을 지시했다는 정보를 조선에 제공하여 후금에 대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또다시 재점화하게 되었다.¹⁰⁷⁾ 같은 달 인조가 ‘서변’ 정세와 남쪽 병력 이동 문제를 놓고 대신 및 비변사 등에 의견을 구한 바, 좌찬성(李貴)과 우의정(申欽)은 여전히 남쪽 병력의 이동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후금은 명 공격이 주목적이므로 오히려 조선 침범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었다. 이귀 및 비변사는 1624년 1월 이후 민력의 휴식과 남변(南邊)에 대한 경계 유지를 이유로 남쪽 군사의 징발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었다. ‘왜정’(倭情)을 내세운 것을 보면, 임란 이후 2차례의 회담겸쇄환사 파견(1607·1617년)으로 일본과 국교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무력 도발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변의 방어도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¹⁰⁸⁾

이에 반해 좌의정(尹坊)은 모문룡의 정보대로 후금이 명을 공격하기 이전 조선으로 먼저 침략해 올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제철사의 의견대로 남쪽 군사의 징발을 요청하였으며, 예조판서(김상용), 판윤(김찬성), 영의정도 같은 의견이었다.¹⁰⁹⁾ 이에 비변사가 정식으로 3남 병사의 이동을 건의함에 따라 1625년 9월에는 인조가 정식으로 병력 이동을 결정하였다.¹¹⁰⁾

1625년 5월부터 9월까지 지속된 병력 이동 논의에서 신료들간에 의견이 양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가 채 1달도 안되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는, 후금군의 ‘겨울철 침공 및 선제 공격설’ 등에 대한 불안이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1625년 6월 평안감사 이상길(李尙吉)은 후금군의 청하성(淸河城) 공격 당시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고한 바 있다.¹¹¹⁾ 그러나 1625년 6월 이후 수집된 후금 관련 정보를 통해서는 ‘겨울철 침공 위기’에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후금군에 대한 두려움은 기병(騎兵)을 ‘철기’(鐵騎)로 표현하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겨울철 압록강이 얼었을 때 바람보다 빠른 속도로 공격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¹¹²⁾ 겨울철에는 압록강이 얼어 평지가 되기 때문에 후금 기병의 속도라면 짧은 시간에 도성(漢城)까지 ‘직공’(直攻)해 들어올 수 있었다. 이에 6월 도성 방어를 위해 남한산성의 행궁을 건축하도록 지시하는 한편,¹¹³⁾ 8월에는 병조판서(서성)가 경기·수원 및 어영군

105)『인조실록』권9, 3년(1625) 5월 29일 병자.

106)『인조실록』권9, 3년(1625) 6월 6일 임오.

107)『인조실록』권10, 3년(1625) 9월 24일 기사.

108)『인조실록』권13, 4년(1626) 윤6월 22일 임술.

109)『인조실록』권10, 3년(1625) 9월 28일 계유.

110)『인조실록』권10, 3년(1625) 9월 30일 을해.

111)『인조실록』권9, 3년(1625) 6월 6일 임오.

112)『인조실록』권9, 3년(1625) 6월 19일 을미.

113)『인조실록』권9, 3년(1625) 6월 23일 기해.

에서 서변 방어를 위해 병사를 차출할 것을 건의했지만, 인조가 허락하지 않았다.¹¹⁴⁾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1625년 9월 인조는 남쪽 병사의 이동을 결정하였다. 인조의 이러한 결정은 ‘겨울철 직공’이라는 전술을 구사하는 후금의 위협으로부터 도성을 방어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만큼, 경기 및 수원의 병사나 어영군에서 차출하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남쪽 병력 이동 문제를 둘러싸고 신료들간에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가 1달 만에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계기라면, 왜정(倭情)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며 남변의 방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신료(李貴 등)들의 주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조의 판단이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이에 앞선 1625년 3월 제3차 회담검쇄환사의 ‘귀국보고’ 이후 도쿠가와(德川)막부 정권의 전국 지배 상황에 대한 인조의 판단과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2. 1623년 도쿠가와 막부의 통신사 요청과 조선의 대응

앞서 보았듯이, 인조 즉위 직후 1년 반은 후금의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국정 현안이었다. 회담검쇄환사의 파견 직전인 1624년 4월에는 모문룡의 후금 공격시 조선군을 명(明)에 파병하는 문제가 긴급현안으로, 인조와 신료들은 모문룡 군사의 통과지역인 함흥부(咸興府)가 결국은 불모지가 될 것을 우려하여 즉위 직후의 파병 약속과 달리 끝내 파병하지 않았다. 그리고 회담검쇄환사의 귀국 후 1625년 5~9월까지의 후금의 ‘선제공격설’ 및 ‘겨울철 직공설’로 인한 위기감 때문에 남쪽 병력의 서변 이동 문제를 둘러싸고 신료들간에 의견이 양분되었다. 이동 반대를 주장하던 이귀 등이 내세운 이유는 ‘왜정’(倭情)이 불안하여 남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조 즉위 직후의 국정에서 볼 때 회담검쇄환사의 일본 파견이란 그 자체가 긴급을 다투는 중요한 현안은 아니었다. 그러나 후금 대비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남변 안보에 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행의 눈으로 일본 사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더할 나위없이 중요한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인조실록』,『비변사등록』,『승정원일기』와 같은 정부측 기록, 외교사례집에는 1624년의 회담검쇄환사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 있지 않다. 파견 당시의「信行節目」도 병자호란(1636년) 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조선측의 대응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¹¹⁵⁾ 일본측 기록 역시 국서개작사건(柳川一件)의 당사자였던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가 관련 기록을 인멸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시기의 사행에 비해 소략한 편이라 할 수 있다.¹¹⁶⁾

114)『인조실록』권9, 3년(1625) 8월 16일 임진.

115)『增正交隣志』권5, 통신사행.

1624년 회담검쇄환사의 ‘신행절목’ 관련 ‘文籍’이 없다는 기록으로 볼 때 병자호란 때 소실된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 남아있는『통신사등록』은 1643년 통신사 때 기록부터 남아있다.

그 때문인지 1624년 회담검쇄환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교섭 초기단계의 경위가 애매모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당시 조선이 후금의 위협, 이괄의 난으로 인한 국정 혼란 속에서 왜관의 인구 밀집, 쓰시마번(對馬藩)의 계속되는 사자 파견, 일본에 대한 의혹 때문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한 결과 서둘러서 파견을 결정했다는 식의 개괄적인 설명이 주를 이룬다. 직접적인 결정 계기 역시 북방에 대한 긴장이 증대되는 가운데 남방 일본과의 우호관계가 조선의 국방·국가 안위를 위해 필요했다는 대일정책의 기본관념에서 비롯되었다는 식의 원론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당시 인조 정권이 직면한 국정상의 난제를 총체적으로 지적만 했을 뿐, 국가 안위상의 어떤 문제가 일본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된 결정적 계기였는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인조 즉위 후 조선이 추구하려던 일본과의 외교란 어떤 것인지, 소위 ‘임기응변적 대응’(權宜之策)이 의미하는 조선정부의 정책적 내지는 전략적 측면은 놓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동안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교섭 초기단계의 경위를 통해 대일본외교의 모습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도쿠가와(德川) 막부의 ‘쇼군(家光) 습직 축하’ 명분

일본은 1617년의 회담검쇄환사 파견으로부터 불과 7년 밖에 지나지 않은 1624년에 ‘쇼군 습직 축하’라는 새로운 명분을 내세워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왔다. 임란 직후 제1차 회담검쇄환사(1607년)는 ‘국교회복’(修好)이 명분이었으며, 제2차 회담검쇄환사(1617년)는 도쿠가와 막부의 ‘오사카(大坂) 평정 축하’가 명분이었다. 이에 비해 1624년의 제3차 회담검쇄환사는 이제까지와 달리 처음으로 ‘쇼군 습직 축하’를 내세웠다. 파견 명분으로만 본다면 상대국의 조경사에 사자를 파견하여 위로 및 축하한다는 교린국간의 교제에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2차례의 회담검쇄환사 때와 파견경위를 비교해 보면, 조선은 2차례 모두 임란 이후 일본과 국교는 회복했지만, 일본의 조경사에 사자를 파견하는 것은 명의 허락사항이라거나, 또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되도록 사자를 파견하지 않으려는 방침이었다.¹¹⁷⁾ 여기에 1624년 일본측(쓰시마번)이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을 당시의 막부 사정이나 조선 상황을 보면, 양국 모두 대내외적으로 긴급한 문제를 안고 있어서 18세기 이후처럼 어쩌다 ‘쇼군 습직’ 때 사자를 한번만 파견하면 양국관계가 30년 가까이 장기간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1624년의 경우 일본측으로서는 ‘쇼군 습직 축하’ 명분이 국교 재개 이후로는 처음이므로 조선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교섭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통신사 초빙이란 400~500명이나 되는 조선의 사행원이 귀국할 때까지 거의 1년 안팎의 긴 시간을 일본에 체류해야하는 국제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인마(人馬)의 동원 및 접대에 많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었다. 일본 국내에

116) 『朝鮮通交大紀』권6, 萬松院公(宗義成).

117) 『선조실록』권205, 39년(1606) 11월 9일 갑술(비망기에 수록된 선조의 질의와 비변사의 추가 의견) 이훈의 논문(「임란 이후 ‘회담검쇄환사’로 본 대일본 외교전략 - 선조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49, 2014 및 「광해군대 ‘회담검쇄환사’의 파견(1617년)과 대일본외교」 『한일관계사연구』52, 2015) 참조.

서 조차 번거롭게 여기는 측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왕대의 전례와 달리 굳이 ‘쇼군 습직 축하’라는 새로운 명분을 내세워 통신사를 요청해왔던 것은 이러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모종의 정치적인 의도 내지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이 쇼군 가문의 경사라 할 수 있는 ‘쇼군 습직 축하’를 명분으로 삼아 통신사를 요청해온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도쿠가와 막부의 제2대 쇼군 히데타다(德川秀忠)는 1623년 7월 후시미성(伏見城)에서 전국의 다이묘(大名)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의 습직을 선포하였다. 에도(江戸)가 아닌 교토(京都)의 후시미성에서 쇼군 습직이 이루어졌던 것은 구(舊) 도요토미(豊臣)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오사카 전투’(1614~1615년)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도쿠가와 정권에 대해 아직도 복종하지 않는 서쪽 지역의 다이묘(西國大名)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습정권으로서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¹¹⁸⁾

쇼군 습직 축하를 위한 에도성(江戸城)에서의 통신사 의례(전명의)는 1624년 12월 이에미츠(家光)가 새로운 쇼군으로서 정치를 시작한지 3개월째에 치루어졌는데, 이 역시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에도성에 모인 전국의 다이묘에게 막부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단 이때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에미츠 자신이 직접 통신사 요청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 같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쓰시마번(對馬藩)의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와 가까운 막신(幕臣), 즉 오고쇼(大御所, 은퇴쇼군 德川秀忠)의 측근인 츠치이 도시카츠(土井利勝)로부터 요청 지시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오히려 히데타다(秀忠)의 의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¹¹⁹⁾

히데타다(秀忠)는 쇼군직 양위 이후 구막신(土井利勝, 井上正就)들과 함께 에도성(江戸城)의 니시노마루(西丸)로 옮겨 오고쇼(大御所) 정치를 시작했는데, 히데타다의 정치지표는 쇼군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¹²⁰⁾ 무가(武家)정권인 도쿠가와 막부에 있어서 새로운 쇼군 이에미츠는 와카기미(若君, 세자)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쇼군이 되었다. 이에 武功이 아니라 치정(治政)의 실적도 없는 이에미츠의 쇼군 습직을 전국의 다이묘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에도성(江戸城)에서 외국 사자로부터 쇼군 습직을 축하한다는 국제적인 용인이 필요했다. ‘오사카의 전투’(1614~1615년)를 통해 히데요리(豊臣秀頼) 세력을 소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反도쿠가와 다이묘들의 존재로 인해 전국 지배가 아직도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에미츠(家光) 정권에 대한 이웃나라(隣國)의 용인을 통해 막부의 권위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¹²¹⁾ 통신사 초빙이 야말로 反도쿠가와 다이묘와 민심을 진정시키는 한편, 쇼군의 권위를 분식(粉飾)할 수 있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¹²²⁾

118) 仲尾宏, 「寛永元年度(1624)の朝鮮通信使と將軍襲職祝賀」『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明石書店, 1997, 78쪽.

三宅英利, 「家光政権の成立と回答兼刷還使」『近世日朝関係史の研究』文獻出版, 1987, 215~216쪽.

119) 仲尾宏, 「寛永元年度(1624)の朝鮮通信使と將軍襲職祝賀」『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明石書店, 1997, 79쪽.

120) 三宅英利, 「家光政権の成立と回答兼刷還使」『近世日朝関係史の研究』文獻出版, 1987, 215쪽.

121) 三宅英利, 「家光政権の成立と回答兼刷還使」『近世日朝関係史の研究』文獻出版, 1987, 234~236쪽.

막부권력 초기의 불안한 모습은 회담검쇄환사의 일본 체류중 막부측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들이 귀국 후 도쿠가와 정권의 전국 장악력에 대해 인조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전국의 다이묘들이 ‘立功創業’의 將(家康)에는 복종하지만, ‘繼序承襲者’(家康→秀忠→家光)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는 분위기로 쇼군 이에미츠(家光)조차도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 ‘오사카 전투’당시 도쿠가와 진영의 다이묘였던 안도 시게나가(安藤重長)는 혹시라도 통신사 요청이 무산되어 조선과 불화를 빚을 경우, 反도쿠가와 다이묘에 의한 반란 내지는 불복의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다.¹²³⁾ 이에 막부로서는 ‘쇼군 습직 축하’를 새로운 명분으로 내세워 제2차 회담검쇄환사(1617년, 광해군 9) 이후 7년 만에 다시 조선과의 통신사외교를 재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일본측(對馬藩)의 통신사 요청과 ‘권의지책’(權宜之策)으로서의 파견

제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의 습직(1623년 7월) 이후, 쓰시마번(對馬藩)은 쇼군의 습직 사실을 조선에 알리는 한편, 이를 축하하기 위한 통신사 파견을 몇 차례에 걸쳐서 요청해왔다. 조선으로서는 ‘쇼군 습직 축하’ 요청이 전례에 없는 예기치 못한 명분이라 할 수 있었다. 이에 쓰시마번의 거듭되는 재촉에 조선이 정식으로 파견의사를 밝힌 것은 1624년 3월이었다.

조선은 일본측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우선 쓰시마번이 쇼군 습직 사실을 처음으로 알려온 것은 1623년 윤 10월경으로 보인다. 쓰시마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는 쇼군직 선포가 있는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사자(古川右馬之助, 源智次) 편에 서계를 보내 인조 즉위를 축하해 왔다. 1623년 윤 10월 4일자로 작성된 쓰시마번주의 서계는 ‘예조참판’ 앞으로 보내온 것이었다.¹²⁴⁾ 이 시기라면 인조가 아직 명(明)으로부터 책봉(1624년 4월)도 받기 이전임에도, 쓰시마번주는 일찌감치 인조 즉위에 대한 축하와 함께, 일본에서도 “세자가 쇼군직을 세습”(世子亦襲位)하였음을 알려왔다.¹²⁵⁾ 그러나 이때의 쓰시마번주 서계에는 쇼군 습직을 조선에 통보만 했을 뿐, 아직은 이를 축하하기 위한 통신사 파견을 요청한다는 직접적인 문언(文言)은 없었다. 물론 이때 쓰시마번 사자가 왜관에 체류하는 동안 동래부 소속 역관 등 조선측 관련자에게 구두(口頭)로 통신사 초빙 건을 언급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문언상의 직접적인 요청은 없었기에, 1624년 1월 예조참의(金德誠) 명의로 작성된 답서에서도, 즉위 축하에 대한 조선측의 사의(謝意) 및 양국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것에 대해 교린지국으로서 감회만을 표했을 뿐이었다.¹²⁶⁾ 1624년 1월이라면 조선에서는 ‘이괄의 난’으로 인해 인조가

122) 仲尾宏, 「寛永元年度(1624)の朝鮮通信使と將軍襲職祝賀」『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明石書店, 1997, 79쪽.

123) 『東槎錄』(姜弘重) 가운데 安藤重長の 언급.

124) 『善隣通書』(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4753,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MF 782).

125) 쓰시마번이 인조 즉위 직후 신속하게 사자를 파견했던 것은, 반정 직후의 조선사정 및 후금의 위협으로 인한 조선의 안보 상황 등에 대한 정탐, 그리고 기유약조(1609년)로 감소된 쓰시마번 선박의 조선 파견 기회를 늘려 보려 했던 것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난 중인 상황에서 국정이 혼란했을 뿐 아니라, 쇼군 습직에 축하사자를 파견한 전례도 없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자, 쓰시마번(對馬藩)에서는 다시 사자를 파견하여 통신사를 요청해왔다. 1624년 2월 경상감사(閔聖徽) 및 동래부사(金緻)는 쓰시마번의 거듭된 사자 파견을 보고하면서, 서변(西邊, 후금 위협)이 급박한데다 모문룡의 조선 주둔으로 조선의 사정이 녹록치 않으므로 통신사 파견을 허락하더라도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¹²⁷⁾ 이 시기는 인조가 피난에서 돌아온 직후로 부산 왜관에 체류하는 왜인도 거의 1천여명에 달해 응대 비용의 증가 및 언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있었다. 이에 통신사 파견 여부를 둘러싼 중앙의 논의에서도 예조 및 비변사가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신사 파견을 1~2년 후로 늦추는 임기응변적 대응(權宜之策)을 모색하되 중앙의 예조가 아닌 동래부사 차원에서 답변할 것을 건의하였다.¹²⁸⁾ 그런데 2월 보고 시점에서 파견된 쓰시마번 사자가 누구인지, 누구 명의로 어떤 내용으로 된 서계를 지참했는지는 기록의 부재로 확실치 않다. 단, 『春官志』 및 『功事撮要』에, “이에 앞서 왜추(倭酋) 히데타다(秀忠)가 그의 아들 이에미츠(家光)에게 傳位하였으며, 僧使 겐포(玄方)를 파견하여 통신사 초빙(來聘)을 요청하기에 交好를 받아들였다”라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외교승 겐포(玄方)가 동래에 파견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된다.¹²⁹⁾

그런데 조선이 이러한 임기응변책을 세운지 1달도 안된 1624년 3월, 쓰시마번은 또 다시 사자 다치바나 도모마사(橘智正, 井手弥六左衛門)를 파견하여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왔다. 쓰시마번 사자는 일본의 통신사 파견 요청 이유를 막부 쇼군이 인심을 안정시키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만약 파견 시기가 지연될 경우 비록 일본이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귀국(조선)이 보낸다 해도 허사로 돌아갈 것이라며 양국 관계의 파탄을 암시하는 말로 위협하였다. 그리고 쓰시마번주(宗義成) 및 가신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가 막부 쇼군(關白)으로부터 중죄를 받을 것이라는 하소연도 덧붙였다.¹³⁰⁾ 조선과의 교섭시 막부의 권위를 내세워 위협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려는 쓰시마번의 전략은 이미 이때부터 구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거듭되는 사자 파견에 조선은 파견 시기를 앞당겨 바로 같은 달인 3월에 파견을 결정하였다. 국교 재개 이후 ‘쇼군 습직 축하’와 같은 쇼군 가문의 경사와 관련된 명분은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금 대비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일본 정탐이 필요했던 때문인지 이를 반대하는 조정의 논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쓰시마번 사자(橘智正)의 통신사 요청 건에 대한 회답은 앞서 조정의 논의에서 정해진 대로 1624년 3월 동래부사(金緻) 명의로 서계로

126) 『萬曆·天啓·崇禎年中不時來書』(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5680,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MF 901)

예조참의(金德誠)의 답서(天啓 4년 정월).

동래부사(金緻, 天啓 3년 11월) · 부산첨사(全三達, 天啓 3년 11월)의 답서에는 축하사자에 대한 사의만 기재.

127) 『인조실록』권4, 2년(1624) 2월 28일 임자, 『비변사등록』인조 2년(1624) 2월 30일.

128) 『비변사등록』인조 2년(1624) 2월 30일조의 “目今事勢, 與前大異, 不可無權宜之策”

129) 『春官志』권2 통신사 및 『功事撮要』.

130) 『인조실록』권5, 2년(1624) 3월 18일 임신.

쓰시마번에 통보하였다. 통보 내용은 ‘修好’차원에서 허락한다는 지극히 간략한 내용이었다.¹³¹⁾

이러한 교섭경위로 볼 때, 제3차 회답검쇄환사 파견은 적어도 쓰시마번(對馬藩)의 3차례에 걸친 요청, 그리고 조선의 파견 연기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24년 3월 정식으로 파견을 결정할 때 까지 불과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쓰시마번이 쇼군 습직사실을 처음으로 알려온 1623년 윤10월부터 친다면 6개월 만에, 그리고 조정에서 통신사 파견이 정식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1624년 2월부터 따지면 1달 만에 신속하게 파견이 결정되었다. 1607년의 회답검쇄환사가 요청부터 결정까지 2년, 1617년의 회답검쇄환사 때 3~4년 걸린 것과 비교한다면,¹³²⁾ 인조 즉위 직후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이라 할 만큼 신속하게 결정이 된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의 파견결정에서 한번 생각해볼아야 할 문제가 있다. 하나는 조선이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하나는 왜 동래부사로 하여금 파견결정을 통보하게 했을까라는 문제이다.

먼저, 조선이 1624년 3월 쓰시마번 사자(橘智正, 井手弥六左衛門)의 파견 직후 바로 같은 달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이유를 교섭 절차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임란 이후 2차례의 회답검쇄환사 파견 전례(1607·1617년)에 비추어볼 때, 조선이 파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통신사 파견을 요청한다는 ‘쇼군’(日本國王) 명의의 ‘선위치서’(先爲致書)가 전제조건이었다.『인조실록』이나『비변사등록』을 보면, 1624년 당시 도쿠가와 막부가 국내 인심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먼저 요청해온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때 쓰시마번 사자가 실제로 막부 쇼군의 ‘선위치서’를 가져왔는지 그 존재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쓰시마번측 역시 국서재작사건 당시 야나가와(柳川)씨가 증거 인멸 차원에서 기록을 없애 버렸기 때문에, ‘선위치서’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상이할 정도이다.¹³³⁾ 그러나 통신사 파견이라는 외교적 대사를 치름에 있어서, 교섭절차 및 사행원의 명칭, 국서와 예물 준비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과거 전례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임란 이후 통신사외교를 유지하던 200년 동안 내내 지켜진 기본적인 지침이었다. 1617년의 회답검쇄환사 때에도 쓰시마번과의 교섭이 3~4년이나 걸렸지만, 조선이 내건 막부 쇼군(秀忠) 명의의 ‘선위치서’를 쓰시마번 사자(橘智正, 井手弥六左衛門)가 가져오자 곧바로 파견을 결정하였다.¹³⁴⁾ 이때 조선은 쇼군(秀忠, 히데타다)의 ‘선위치서’가 쓰시마번이 자의적으로 만든 위서(僞書)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선이 제시한 절차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수

131) 동래부사(金緻) 답서(天啓 4년 3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서계, No.109).

132) 이 훈, 「인조대의 국정운영과 1636년의 통신사외교」 『한일관계사연구』56, 2017, 101쪽.

133) 손승철은 1624년 회답검쇄환사 때 쓰시마번의 국서재작이 통신사를 요청한다는 도쿠가와 이에미츠(德川家光)의 국서를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선위치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지성의 샘, 1994, 188쪽). 이에 비해 三宅英利는 ‘선위치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文獻出版, 1987, 215~240쪽), 仲尾宏은 이에미츠 명의 ‘선위치서’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明石書店, 1997, 82쪽).

134) 『광해군일기』권115, 9년(1617) 5월 30일 기사.

용한 바 있다. 1624년의 경우, 만약 쓰시마번(對馬藩) 사자가 ‘선위치서’를 지참해오지 않았다면, 조선으로서는 통신사 파견시 가장 첫 번째 절차부터 과거 전례(1607·1617년)와 다른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조정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동래부사나 비변사, 예조와 같은 관련 부서에서도 문제제기가 없었으며, 조정대신들 사이에서도 논의의 흔적이 없다. 이것으로 보면 위서(僞書)라 할지라도 쓰시마번 사자가 쇼군 이에미츠(家光) 명의의 ‘선위치서’를 지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624년 3월의 쓰시마번 사자 다치바나 도모마사(橘智正, 井手弥六左衛門)는 1617년 회답검쇄환사 파견 요청시에도 ‘선위치서’를 가져온 인물이다.¹³⁵⁾ 조선이 橘智正의 파견 직후 바로 같은 달에 신속하게 동래부사(金緻, 天啓 4년 3월일)로 하여금 파견결정을 통보하게 했다는 것은, 파견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아마도 1623년 윤10월(古川右馬之助)과 1624년 2월(불명, 玄方 추정)에 파견된 사자들이 쇼군 습직 축하를 위한 통신사 요청을 구두(口頭)로 해왔기에 조선이 선뜻 파견을 결정하지 못하자, 1624년 3월 쓰시마번 사자(橘智正, 井手弥六左衛門) 편에 구체적인 문서를 가져오자 곧바로 파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쓰시마번 기록인『朝鮮通交大紀』에는 회답검쇄환사가 지참한 인조의 국서가 쓰시마번에 의해 개작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과거 쓰시마번이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는 국서를 쇼군 명의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 개작(僞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다.¹³⁶⁾ 이것으로 본다면 그만큼 ‘선위치서’의 존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앞서 다치바나 도모마사(橘智正, 井手弥六左衛門) 이전의 구두(口頭) 교섭 역시 쇼군 습직 축하에 대해 조선의 자발적인 파견을 유도하기 위한 일본측의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1624년 조선의 회답검쇄환사 파견 결정을 중앙의 예조가 아니라 동래부사로 하여금 회답하도록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를 위해서는 쓰시마번 서계에 대해 조선이 어떤 수준에서 대응했는지가 참고가 될 것 같다. 전반적으로 인조 즉위 축하 및 쇼군 습직과 관련된 쓰시마번측 서계에 대해 조선이 예조참의 및 동래부사·부산첨사 명의로 발급한 서계를 보면, 문면 자체에는 조일 양국간의 조경사에 사자를 파견하여 축하하는 것을 양국간의 ‘交隣之禮’ 내지는 ‘修好之誠’, 또는 ‘隣好’라는 문언으로 정중하게 표현하고는 있다.¹³⁷⁾ 그러나 쓰시마번측 서계에 대해 누구 명의로 답서를 발급했는지를 본다면, 조선의 대응이 아주 조심스러웠음을 엿볼 수 있다.

먼저 1623년 윤10월 인조 즉위 축하 및 쇼군 습직을 통보하기 위해 쓰시마번 사자(古川右馬之助)가 지참해온 서계는 쓰시마번주(宗義成)가 ‘예조참판’ 앞으로 보내온 것이었다.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극도로 정중함을 반영한 ‘上表文’(賀卽位表) 형식의

135)『광해군일기』권115, 9년(1617) 5월 30일 계사.

136)『朝鮮通交大紀』권6, 光雲院公(宗義成).

137) 예조참의 金德誠 답서(天啓 4년 정월, 1624년)의 ‘隣好’
동래부사 金緻 답서(天啓 3년 11월, 1623년)의 ‘交隣之禮’
부산첨사 全三達 답서(天啓 3년 11월, 1623년)의 ‘交隣之禮’
동래부사 金緻 답서(天啓 4년 3월, 1624년)의 ‘修好之誠’

서계였다.¹³⁸⁾ 이 서계에는 ‘臣’이라는 문언 자체는 없지만, 쓰시마번주 스스로 조선의 신하적 입장에서 예조참판을 통해 조선국왕 인조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이었다.¹³⁹⁾ 쓰시마번으로서는 인조 즉위 축하를 명분삼아 예조참판 앞으로 서계를 보내는 ‘신례’(新例)를 만들어 온 셈이다. 그러나 조선의 답서는 예조참판이 아닌 ‘예조참의’(金德誠) 명의로 발급되었다. 대등이 기본 이념인 교린외교의 관행으로 보자면 조선도 예조참판이 답서를 발급해야 했지만, 이것이 전례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조참의 명의로 답서를 발급했다고 본다.¹⁴⁰⁾ 쓰시마번의 신례 시도는 이를 계기로 ‘即位賀使’라는 ‘전례’(前例)를 만들어 기유약조(1609년) 이래 감소된 사자의 파견 기회를 확대해보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국왕의 즉위 축하를 위해 쓰시마번이 예조참판 앞으로 사자를 파견해오는 ‘陳賀差倭’는 효종 즉위(1650년)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차왜’(大差倭, 참판사)로 인정되었다.¹⁴¹⁾

또한, 조선이 막부의 통신사 요청 의사를 확인한 후 파견 결정을 일본에 통보함에 있어서도 애초의 방침대로 예조참의가 아닌 ‘동래부사’ 명의로 대응하게 하였다. 임란 이후 12차례에 걸친 통신사 파견에서 조정(중앙)의 결정을 지방관(동래부사)로 하여금 대응하도록 한 것은 1624년의 회답검쇄환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¹⁴²⁾

이와 같이 1624년 회답검쇄환사 파견 교섭의 초기단계에서 보인 조선의 대응이란, 쓰시마번이 요구하는 조선측 상대(예조참판)보다도 관위가 낮은 예조참의, 또는 중앙 정부가 아닌 동래부사로 하여금 대응한다는 방침이었다. 말하자면 조선으로서는 전례가 없는 예상치 못한 ‘쇼군 습직 축하’ 요청을 수용하기는 하되, 어디까지나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국교 재개 이후 조정사에 대한 빙문을 바탕으로 하는 교린외교를 되도록 뒤로 미루려는 대일본 통교방침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쓰시마번에 대해서도 ‘신례’(新例) 시도를 곧바로 항례화하려는 의지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쓰시마번은 통신사 교섭을 빌미로 막부의 무위(武威) 내지는 위협을 내세워 빈번하게 사자를 파견해오면서 예조참판 앞 서계 등과 같이 ‘신례’를 만들어 되도록 조선에 사자를 파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보고자 필사적인 교섭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은 ‘신례’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기유약조 이래의 통교방침을 지키려 했다고 할 수 있다.

3. 1624년 제3차 회답검쇄환사의 국서(國書) 전달과 ‘린호’(隣好)의 의미

138) 米谷均, 「近世日朝關係における對馬藩主の上表文について」『朝鮮學報』154, 1995.

139) 『善隣通書』(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4753,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MF 782).

140) 조선국왕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예조참판 앞 서계를 지참해 오는 쓰시마번 사자가 ‘陳賀差倭’(大差倭)로 정착되는 것은 1650년 효종 즉위 때부터이다. 그러나 쓰시마번 자체에서는 인조 즉위시 ‘賀即位表’라는 예조참판 앞 서계를 지참해간 古川右馬之助(源智次)를 최초의 ‘即位賀使’로 인식하였다(『朝鮮通交大紀』권6, 光雲院公).

141) 『增正交隣志』권2 陳賀差倭, 『변례집요』권1 別差倭(경인년, 1650년, 효종 1).

142) 1636년 병자통신사(예조참의 답서로 파견 통보), 1643년 계미통신사(예조참의 답서로 파견 통보), 1655년 통신사(예조참판 답서로 파견 통보), 1682년 임술통신사(예조참판 답서로 파견 통보).

1) 개작 이전 인조의 회답국서와 대일본인식

일본측의 ‘쇼군 습직 축하’ 요청에 대해, 조선이 1624년 3월 ‘修好之誠’에 따라 사자를 파견하여 축하하겠다는 중앙조정의 의사를 동래부사(金縵)로 하여금 쓰시마번(對馬藩)에 통보함에 따라,¹⁴³⁾ 일본에 파견할 사행원도 같은 달 곧바로 선정되었다. ‘회답사’의 정사에 정립(鄭崐), 부사에 강홍중(姜弘重), 종사관으로 김남중(金南重)이 각각 임명되었다.¹⁴⁴⁾ 그런데 이때의 사행 명칭을 보면 일본측이 요청한 통신사(信使)가 아니라 일본측의 요청에 회답한다는 ‘회답사’였다. 과거 선조(1607년)와 광해군대(1617년)의 논의를 보면, 일본측이 통신사를 요청하고, 조선 역시 통신사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회답검쇄환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이는 임란 이후 조선의 관민에 남아있는 반일정서, 피로인 쇄환이라는 전후처리, 전후 복구 문제 등으로 인해, 일본과 국교는 회복했지만 상대방의 조경사에 대한 위로 및 축하 등, 교린관계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교류에 대해서는 되도록 확대하지 않으려는 조선의 정치적인 판단과 방침에서 비롯된 명칭이었다.¹⁴⁵⁾ 인조대에 명칭을 둘러싼 조정의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임란 때의 피로인 쇄환 문제가 아직도 사행 임무의 하나였던 것을 보면 선왕대의 전례와 방침을 참고하여 ‘회답검쇄환사’로 정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1624년의 회답검쇄환사에 대해서는 조일 양국 모두 기록이 남아 있지 않지만, 사행 구성을 비롯하여 국서와 예물 등, 파견에 필요한 제반 준비 등도 전례를 참고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1624년의 회답검쇄환사 일행은 정사(鄭崐)를 비롯하여 약 460명 가량으로 구성되었던 것 같다. 3사 일행은 1624년 8월 인조를 인견한 후 한성을 떠나 부산과 쓰시마(對馬島)를 거쳐 12월에 에도(江戸)에 도착하였다. 에도에서는 혼세이지(本誓寺)에 체류하면서 에도성(江戸城)의 전명익(傳命儀, 1624년 12월 19일)에서 인조의 국서(國書)를 도쿠가와 쇼군에게 전달한 후 쇼군의 회답서를 받아 가지고 이듬해인 1625년(인조 3) 3월에 귀국하였다.

정사 일행이 에도에 체류하는 동안 수행해야 할 임무로는 피로인 쇄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나 조일간 외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는 정사 일행이 지참해간 인조의 국서를 쇼군(將軍) 이에미츠(家光)에게 직접 전달한 후 이에 대한 쇼군의 답서를 받아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에도 1607년 및 1617년의 회답검쇄환사 때와 마찬가지로 역시 쓰시마번이 조일 양국의 국서를 개작(改作)하는 외교참사가 있었다. 이에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보면 조일 양국의 최고결정권자인 국왕과 쇼군이 어떠한 내용의 국서를 주고받았는지 국서에 담긴 정치적 의도나 외교전략 보다는 쓰시마번(對馬藩)이 조일 양국 국서에서 어떤 부분을 개찬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국서는 아무리 정중한 문언으로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전쟁인 만큼, 분명히 자국의 이해 및 정치적 의도가 반영

143) 동래부사 김치(金縵) 답서(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서계, No.109).

144) 『인조실록』권5, 2년(1624) 3월 25일 기묘. 그러나 실제로 회답검쇄환사 일행이 출발시에는 종사관이 신계영(辛啟榮)으로 교체되었다.

145) 이훈, 주) 44의 논문.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쓰시마번이 양국의 국서를 개찬했다고는 하지만 조선국 왕과 도쿠가와 쇼군의 정치적 의도나 취지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교체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개찬한 부분과 잔류된 부분을 비교해 보면, 조선과 도쿠가와 막부의 외교적 명분과 정치적 의도, 쓰시마번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국서개찬이라는 외교참사에 가려지는 측면이 있었기에 여기에서는 개찬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서 양국 국서에 담긴 파견 명분과 의도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인조의 국서부터 보기로 한다. 정사(鄭瑬) 일행이 지참해간 인조의 국서는 일행이 에도에 체류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2월 19일 에도성(江戸城)의 전명의(傳命儀)에서 쇼군 이에미츠에게 전달되었다. 이때 전달된 국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쓰시마번이 개작한 위서(僞書)로 밝혀졌기 때문에, 조선의 의도를 살피기 위해서는 1624년 회답겸쇄환사 일행이 지참해간 개작 이전의 국서부터 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다음은 쓰시마번 기록에 남아있는 개작 이전의 인조 국서이다.

國書致日本國王

上年貴國遠勞使价，越海脩聘，良荷善意，(a)屬因皇朝毛師奉命東來駐筭弊境，饗饑禮繁，邦內少暇靡遑報謝，迄用歉然，(b)昨因馬島傳報，憑審賢王光承令緒，思繼舊信隣好之誼，寔切懽茲慶遣近臣，顚備賀儀兼脩答禮，土宜甚薄，愧缺六幣，所冀益固鴻基，茂膺休祉，(c)毋忘畏天之誠，永思保國之道，不宣¹⁴⁶⁾

위에서 정사 일행이 지참해간 국서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쓰시마번 사자가 먼저 쇼군 습직 소식을 전해왔기에 구신(舊信)을 중시하여 사자를 파견한다는 내용으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위 국서의 (b)를 보면 쓰시마번이 먼저 쇼군 습직을 알려왔기에(昨因馬島傳報) 답례(答禮)차 파견한다는 절차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馬島傳報’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 문장만을 놓고 문서(선위치서)가 없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⁴⁷⁾ 외교문서가 정중하면서도 압축적인 문언으로 작성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위의 문장을 단지 구두전달로 보기는 어렵다. 앞에서 보았듯이 통신사 요청에 대한 조선의 의사결정과정을 파견절차를 기준으로 따져 본다면, 쓰시마번이 작성한 僞書(선위치서)라 할지라도 막부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모종의 문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국서의 첫머리에 쓰시마번의 역할이 부각되어 있는 것은, 1624년 3월 쓰시마번 사자(橘智正, 井手弥六左衛門)가 왔을 때 조선의 통신사 파견이 늦어질 경우 쓰시마번주 등이 막부로부터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하소연을 배려한 문장이라 생각된다.

146) 쓰시마번 기록인『朝鮮通交大紀』(권6 光雲院公(宗義成)에는 개작 이전 및 개작 이후의 인조 국서(僞書)가 수록되어 있으며, 柳川調興이 개작한 부분과 이유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다.

당시 조선측 기록으로 개작 이전의 국서는『淸陰先生文集』(권16, 金尙憲)에 수록되어 있는데, ‘答禮’가 ‘答札’로 기재되는 등, 『朝鮮通交大紀』와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147) 仲尾宏, 「寛永元年度(1624)の朝鮮通信使と將軍襲職祝賀」『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 明石書店, 1997, 82쪽.

그런데 개작 이전의 위 국서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파견 당시 조선의 외교적 입장(a)과 파견 의도(c)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먼저 (a)를 보면, “지난해 귀국 사자가 修聘을 해왔지만, 명 황제의 지시를 받들어 모문룡이 조선 국경에 주둔하고 있는 까닭에 그 응대에 대한 부담이 커서 감사할 경향이 없었다. 마침내 지난번 쓰시마번의 통보로 쇼군 습직을 알게 되어 舊信에 따라 隣好를 계속하고자 사자를 파견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아마도 1623년 쓰시마번의 ‘즉위하사’ 파견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회답해야 한다면서도, 인조 국서의 첫머리에 모문룡의 주둔 부담을 부각시키면서 회답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조선은 일본측의 요청대로 사자를 파견하기는 하지만 조일관계가 조명관계의 영향을 받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대등에 바탕을 둔 양국관계라면, 조선이 명 황제의 지시에 따라 외국군을 조선에 주둔시키고 있는 사실을 숨기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조의 국서에서는 본문의 시작 부분에 조선에 대한 명(明)의 군사·외교적 압박을 언급해 둠으로써 조일관계가 결코 조선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말미의 (c)를 보면, “하늘을 두려워하는 성신(誠信)을 잊지 않는 것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는 길”이라 하여 양국 관계에 있어서 성신과 우호가 중요한 것임을 당부하고 있다. 이 대목은 아마도 통신사 교섭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막부의 병력 동원이 있을 것이라는 쓰시마번의 위협을 의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후금의 위협에 대해 남쪽 병력을 서북쪽으로 옮기는 대비책이 긴급 현안이었던 당시 안보 상황으로 볼 때 신의에 바탕을 둔 안정된 조일관계를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대일본외교에서 조선이 의도하는 바였다고 할 수 있다.

(a)와 (c)의 두 가지로 볼 때, 1624년 인조의 회답겸쇄환사 파견이란 국왕 명의의 사자를 보내 교린관계를 유지하기는 하되, 조일관계가 명나라의 허락사항임을 내세워 일본의 의도대로 양국관계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선왕대(선조 및 광해군)의 ‘회답겸쇄환사’ 파견 전략을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임란 직후 1607년 회답겸쇄환사 때에는 사행명칭을 통신사가 아니라 ‘회답사’임을 강조함으로써 교린관계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사절왕래에 대해 이번에 한정한다는 식으로 일정한 선을 긋는 한편, 만약 일본측이 요구해올 경우에도 조일 양국의 사절왕래는 명나라의 허락사항이라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다.¹⁴⁸⁾ 또 1617년 회답겸쇄환사 때에는 아예 광해군의 국서에 조일간의 사절 왕래가 명나라에 보고사항임을 명기하였다.¹⁴⁹⁾ 1624년 인조 국서에 ‘모문룡 주둔 부담’을 언급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대일본전략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작된 인조의 국서에서는 조선의 이러한 전략이나 파견 의도는 사라진 채

148)『선조실록』권205, 39년(1606) 11월 9일 갑술(선조의 비망기, 선조의 질문에 대한 비변사의 추가의견).

149)『同文彙考』에는 개작이전과 이후를 불문하고 광해군의 국서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광해군의 국서는 일본측기록인 『朝鮮通交大紀』 및 『隣好始末物語』에 쓰시마번이 개작한 위서가 전한다. 해당 부분은 “況今日修好敦睦, 茲遣使价爲報慇懃, 將此曲折已奏天朝(明)”이다.

쓰시마번(對馬藩)의 역할만이 부각되어 있다. 다음은 쓰시마번 기록에 남아 있는 인조의 개작 국서이다.

朝鮮國王李倧 奉書

日本國王 殿下

上年馬島 遠勞使价, 越海脩聘, 良荷善意, 就傳報憑審賢王光承令緒, 思篤前好隣交之義, 寔切懽慶, 茲遣近臣, 顯備賀儀, 兼脩盛禮, 土宜甚薄, 愧缺六幣, 所冀益固鴻基, 茂膺休祉, 不宣. 天啓四年甲子八月日¹⁵⁰⁾

위의 개작 국서에서는 ‘貴國遠路使价’가 ‘馬島’의 사자로, ‘答禮’도 ‘盛禮’로 변경되었다. 쇼군 습직을 조선에 통보함에 있어서 쓰시마번의 역할이 한층 더 부각된 한편, 쓰시마번이 ‘答禮’를 ‘盛禮’로 고침에 따라 조선의 사자 파견이 ‘회답’이라는 절차도 알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개작 이전의 인조 국서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 즉 조·명관계로 인해 일본측의 요청에 신속하게 응하지 못했다는 조선의 외교적 입장(a) 및 사자 파견의 궁극적 의도(c)는 모두 삭제되었다. 오로지 쓰시마번의 역할로 인해 조선에서 쇼군 습직을 축하하는 사자가 파견되었다는 식의 간단한 내용만이 남게 되었다.

개작 이전 국서의 (a) 부분이 사라진 것은, 조선의 통신사 파견이 늦어진 것을 막부에 숨기고 쓰시마번의 교섭력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통신사를 요청하는 도쿠가와 막부 입장에서 볼 때 ‘조·명관계’ 언급이 반가운 표현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개작 이전 인조 국서의 말미에서 조선이 신의(信義)를 강조하는 부분(c)은 임란 이후 일본에 대한 조선의 불신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도쿠가와 막부의 반감을 우려하여 쓰시마번이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¹⁾

2) 조선의 ‘자발적’ 통신사 파견으로 작성된 쇼군 답서의 의도

이에 대한 쇼군 이에미츠(家光)의 답서는 어떠했을까?

에도성의 전명익(1624년 12월 19일)에서 정사 일행이 인조 국서를 전달한 지 사흘(12월 22일)만에 막부 로쥬(老中 酒井忠世, 土井利勝)가 사행의 숙소로 이에미츠의 답서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답서의 주체인 쇼군이 ‘일본국왕’이 아니라 ‘日本國 源家光’이라는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밖에도 정중함이 결여된 ‘予·采納·兩邦’ 등의 문언이 있었기에 사자 일행이 쓰시마번의 겐포(玄方)를 통해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150) 『朝鮮通交大紀』권6 光雲院公, 宗義成의 개작 국서.

『同文彙考』(권8, 通信) 및 『春官志』(권3, 國書及倭答書)에도 개작 이후의 僞書로 보이는 인조 국서(天啓4年甲子8月日)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朝鮮通交大紀』와는 약간의 문언 차이가 있다. 다음의 본문에서 밑줄 친 부분이 그것이다.

上年貴國(馬島, 『朝鮮通交大紀』), 遠勞使价, 越海脩聘, 良荷善意, 昨者因馬島傳報(『朝鮮通交大紀』에 생략), 憑審賢王光承令緒, 思篤前好隣交之義, 寔切懽慶, 茲遣近臣, 顯備賀儀兼脩答禮(盛禮 『朝鮮通交大紀』), 土宜甚薄, 愧缺六幣, 所冀益固鴻基, 茂膺休祉, (毋忘畏天之誠, 永思保國之道, 『同文彙考』 『春官志』 『朝鮮通交大紀』 모두 생략) 不宣. 天啓四年甲子八月日

151)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지성의 샘, 1994, 191쪽.

이를 후(12월 24일)에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가 수정된 답서를 가져왔다.

다음은 회답검쇄환사 일행이 받아온 쇼군 이에미츠의 답서이다.

日本國王 源家光 奉復

朝鮮國王 殿下

維時納寒天氣逼人，茲蒙一封書三官使之溫訊，一團和氣恰如坐春風中，(d)寡人(予，개작 이전)幸統領日域，忽達貴簡(貴簡，개작 이전)，修禮致賀，若干珍產來贈(또는 采納，개작 이전)感佩，繼前烈篤隣交之良意益切，慰確約兩國(兩邦，개작 이전)流慶，萬代敢勿間闊矣，伏冀順時爲國自愛，不宣。

龍集甲子冬十二月 日 152)

위의 답서는 쓰시마번주(宗義成)와 柳川調興이 개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사 일행이 제기한 문제가 모두 수정되었다. 쇼군 이에미츠의 칭호가 ‘일본국왕’으로 변경되었으며, 정중함이 결여된 문언도 ‘寡人·來贈·兩國’으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처음에 막부 로쥬가 가져온 쇼군 답서의 ‘忽達貴簡’도 ‘忽達貴聞’으로 수정되었다.

그런데 쇼군 답서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d)의 밑줄친 부분이다. 이 부분은 회답검쇄환사의 성격과도 관련된 것으로, 위의 쇼군 답서를 이에미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에미츠의 일본 통치 사실이 귀국(조선)에까지 알려져 예를 갖추어 치하하시고”로 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 즉 소문을 전한 쓰시마번의 역할이 은연중에 암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건은 조선이 이에미츠의 일본 통치 소문을 듣고 자발적으로 사자를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찬 이전의 막부측 문서가 ‘貴簡’이라 하여 조선의 자발적 파견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개작 이전과 이후를 불문하고 어느 것도 조선이 회답검쇄환사를 ‘자발적’으로 파견한 문장이라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파견 경위로 보자면, 조선은 일본측이 먼저 ‘쇼군 습직 축하’를 위해 통신사를 요청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회답하는 차원에서 사자를 파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개찬 이전의 인조 국서에도 분명히 회답 차원의 사자 파견이라는 교섭절차(答禮, 答札)가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미츠의 답서에는 쓰시마번의 공작으로 인해 일본측의 요청 부분은 아예 기재 자체가 없으며, 조선의 자발적인 축하 부분만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쇼군 답서의 위와 같은 문언은 막부가 회답검쇄환사를 통해 어떠한 정치적 성과를 얻어내려고 했는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에미츠의 답서는 초안을 곤치인 스텐

152)『東槎錄』(姜弘重)에는 쓰시마번이 개찬한 쇼군 답서(偽書)만 수록되어 있다.

『通航一覽』(권94, 朝鮮國部 70, 兩國書儀物并信使御暇等, 寬永度)에 수록된 개작 이전의 쇼군 답서는 다음과 같다.

日本國源家光 奉復

朝鮮國王 殿下

維時臘天寒氣逼人，茲蒙一封書三官使之溫訊，一團和氣恰如坐春風中，予幸統領日域，

忽達貴簡，修禮致賀，若干珍產采納感佩，繼前烈篤隣交之良意益切，忻慰確約，兩邦流慶，萬代敢勿間闊矣，

伏冀順時爲國自愛，不宣。 龍集甲子冬十二月日

(金地院 崇傳)이 작성하여 大御所(西丸)의 은퇴 쇼군 히데타다(秀忠)에게 사전 검토를 받은 뒤 확정된 것으로 당시의 작성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¹⁵³⁾ 막부측의 작성 지침이란 답서 내용은 되도록 양국간에 논란거리를 피하도록 할 것이며, 조선이 먼저 來朝하는 식으로 작성하되 전반적으로는 대등을 유지하여 조선의 사행이 항의할만한 내용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었다.¹⁵⁴⁾ 이러한 지침에 맞추어 작성된 쇼군의 답서는 새로운 쇼군 이에미츠(家光)의 최종 확인을 거쳐 정사 일행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막부측의 지침으로 볼 때, 사행 일행이 쇼군 답서를 받자마자 바로 문제제기를 하여 쓰시마번이 답서를 개작했다고는 하지만, 조선의 자발적 파견을 부각시키려 했던 막부의 의도 부분까지 개작했다고는 볼 수 없다. 자발적 파견으로 작성해야만 했던 이유로는, 새로운 쇼군 습직에 대해 이웃나라 외교사절의 축하라는 국제적인 절차를 통해 막부 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反도쿠가와 다이묘들을 진정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¹⁵⁵⁾

세습정권으로서 막부 권력을 분식하기 위해 조선의 통신사를 자발적인 파견인 것처럼 연출하려 했던 것은, 1624년을 시작으로 17세기 중반까지 이어졌다. 1643년 계미통신사 때에는 이에미츠(家光)가 그의 아들인 이에츠나(家綱)가 태어났을 때 ‘와카기미(若君, 세자) 탄생 축하’라는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 통신사를 요청해오면서 구두교섭을 해왔다. 구두전달을 할 경우 문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차상 조선이 먼저 자발적으로 파견하는 식의 문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쇼군의 답서에는 ‘닛코산(日光山) 치제’의 제문(祭文)에 대해서도 조선국왕이 스스로 ‘自撰’한 것으로 작성해 왔다.¹⁵⁶⁾ 효종대에 파견된 1655년 을미통신사의 경우에도, 쇼군 이에츠나(家綱)의 답서에는 3사가 자발적으로 와서 쇼군 습직 축하는 물론, 이에야스(家康, 權現堂)에서 이에미츠(家光, 大猷院)에 이르는 도쿠가와 세습 쇼군의 묘당에 치제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재하였다.¹⁵⁷⁾ 쇼군 답서의 이러한 기재는 제2대 쇼군 히데타다(秀忠)와 그의 아들인 제3대 쇼군 이에미츠(家光)에 걸쳐 막부 권력의 강화에 힘쓰던 시기에도 일치한다.

153)『通航一覽』94, 朝鮮國部 70,「兩國書儀物并信使御暇等」寛永元年(1624) 12월 21일.

80) 仲尾宏,「寛永元年度(1624)の朝鮮通信使と將軍襲職祝賀」『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明石書店, 1997, 92~93쪽.

해당 사료는 다음과 같다.

(전략)

一. 造國書者改之ト書テ論決之事ニ及フヘカラス

(중략)

一. 書簡大概ハ前代ヲウケテ今度國書改ニ付、 歸伏シテ使來朝アルト、 十ノモの一、 二ハ彼國ヲ仰下,

全書ハ等輩心ニ可有之候

(후략)

(『歷朝來聘』(金地院記)「甲子朝鮮來貢記」(일본 國立公文書館)

155) 三宅英利,「家光政權の成立と回答兼刷還使」『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文獻出版, 1987, 215쪽.

仲尾宏,「寛永元年度(1624)の朝鮮通信使と將軍襲職祝賀」『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明石書店, 1997, 96쪽.

156) 이훈, 「병자호란 이후 1643년의 계미통신사 파견과 대일본외교 -외교사적 의미를 중심으로-」『임진왜란에서 조선통신사의 길로』경인문화사, 2019, 219쪽.

157)『通航一覽』권95, 朝鮮國部 71,「兩國書儀物并信使御暇等」明曆元年(1655) 10월 25일.

요컨대 인조의 국서, 그리고 쇼군의 답서로 상징되는 1624년의 회답겸쇄환사 파견을 보면, 개작되기 이전 원래의 문서에는 자국의 외교적 입지나 국내 정치 사정 때문에 상대국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었다. 그러나 쓰시마번의 국서 개찬이라는 우여곡절 결과 상대국을 자극하는 문언들이 수정 또는 삭제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조일 양국관계를 안정시키는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일 양국 국서에는 말미 부분에 모두 ‘隣交·隣好의 지속’을 약속하고 있다. 이것이 비록 외교적인 수사라 할지라도 조일관계는 물론 국내정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으로서는 일본의 재침 가능성을 억제함으로써 국내정치의 안정은 물론, 후금 대비책을 계획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그리고 도쿠가와 막부는 세습정권에 대한 조선의 자발적 파견을 부각시킴으로써 反도쿠가와 다이묘들에 대해 무력을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을 진정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4. 회답겸쇄환사의 일본 정보와 남쪽 병력의 서변(西邊) 이동 결정

1) 회답겸쇄환사의 일본 정보와 조선의 막부권력 인식

1624년 회답겸쇄환사 파견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인조가 이들을 파견할 당시 사행 본연의 임무인 인조의 국서를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특별한 임무를 하나 더 부여했다는 것이다. 1624년 8월 회답겸쇄환사 일행의 한성 출발시, 인조는 정사(鄭士)를 인견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무기 구입 및 정세 탐방을 특별 임무로 지시하였다.¹⁵⁸⁾

인조가 특별 임무를 지시한 것은 왜일까?

앞서 보았듯이 인조대의 회답겸쇄환사(1624년) 파견은 후금의 위협에 대한 대비책이 모색되는 와중에 추진되었다. 즉위 직후부터 강구하기 시작한 후금 대비책이란, 1623년(인조 1) 9월 이래 조선의 군사적 열세를 고려하여 후금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보다는 평양성 등 북변의 성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전략으로서 남쪽 병사의 서변 징발을 통해 병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1624년 3월 회답겸쇄환사 파견이 결정되자, 4월에는 비변사가 도성 방어를 위한 경기 군사의 훈련을 위해 사행으로 하여금 일본에서 무기(鳥銃, 環刀)를 구입해 올 것을 건의하였다.¹⁵⁹⁾ 인조도 이를 수용하여 5월 회답겸쇄환사를 인견하는 자리에서 무기 구입을 특별 지시하였다. 그러나 정사 정립(鄭立)이 외교사행으로 가서 무기 구매를 하는 것이 부적절함을 건의함에 따라 이 지시는 철회되었다.¹⁶⁰⁾ 그렇지만 5월 후금(眞撻)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비변사의 보고에 이어,¹⁶¹⁾ 바로 다음 달인 6월에는 평양성의 축조(6~11월) 등 북변 방어책이 추진되고 있었다.¹⁶²⁾ 인조가 8월 출발을 앞둔 회답겸쇄환사 일행에게 ‘일본사정

158)『인조실록』권6, 2년(1624) 8월 20일 임인.

159)『인조실록』권5, 2년(1624) 4월 24일 정미.

160)『인조실록』권6, 2년(1624) 5월 11일 갑자.

161)『인조실록』권6, 2년(1624) 5월 21일 갑술.

정탐'이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했던 것은, 실제로 남쪽 병력을 서북쪽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도쿠가와 막부정권의 국내 지배력 및 병력 동원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조가 도쿠가와 막부의 전국 지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행의 귀국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질문한 내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정사 일행은 귀국하자마자 일본 사정을「聞見事件」으로 정리하여 제출했던 것 같다.¹⁶³⁾ 그러나 인조는 이러한 귀국보고서와는 별도로 이들을 대면한 자리에서 바로 정사 일행과 일본 사정에 대해 직접 질문을 주고받았다.

인조와 사행원간에 이루어진 구두(口頭)문답이란 어떤 내용이었을까?

인조의 질문은 “도쿠가와 막부의 내부사정, 쇼군직 습직 배경, 막부의 에도(江戸) 입지”에 대한 3가지였다. 먼저 인조가 가장 궁금해하는 ‘일본 사정’에 대해서는 정사 정립(鄭崐)이 답변하였다. 즉 막부는 쇼군(관백, 德川家光)이 전국 60주 다이묘(將官)의 가족을 국중에 인질로 잡아다 놓고 있으며, 동서의 여러 곳에 막부가 직접 장수를 파견하여 反도쿠가와(德川) 세력의 반란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막부가 ‘참근교대’(參勤交代)와 같이 다이묘의 가족을 에도(江戸)에 불모로 잡고 있지만, 아직은 다이묘 장악력이 불안하여 일본이 무력을 동원하여 이웃나라(조선)를 침범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를 보고하였다.

인조의 두 번째 질문은 전 쇼군(德川秀忠)이 아직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린 아들(德川家光)에게 쇼군직을 계승했는가라는 것이었다. 정립은 세습정권으로서의 도쿠가와 막부권력의 한계와 그 때문에 통신사 초빙을 통해 국내 인심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즉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국의 다이묘들이 ‘立功創業’의 將(家康)에는 복종하지만, 秀忠에서 家光로 이어지는 ‘繼序承襲者’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는 분위기로 쇼군 이에미츠(家光)조차도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인조는 막부가 왜 일본의 동쪽 구석인 에도(江戸)에 입지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사 강홍중(姜弘重)이 답변하였다. 막부의 에도 입지는 동쪽의 反도쿠가와 다이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오사카성(大坂城)을 막부가 직접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는 것이었다.¹⁶⁴⁾ 요컨대 정사 일행이 전하는 막부권력이란, 쇼군이 3대에 걸쳐 습직하였지만 세습정권에 대한 反도쿠가와 다이묘들의 위협적인 동향, 또 막부가 다이묘들의 가족을 인질삼아 ‘참근교대’를 실시하여 막부 지배강

162)『인조실록』권6, 2년(1624) 6월 27일 기유 및 권7, 2년(1624) 11월 2일 임자.

163) 부사 강홍중(姜弘重)의 『東槎錄』에 수록되어 있는「聞見總錄」을 일컫는 것 같다. 「聞見總錄」은 일본에 대한 백과사전과도 같은 것으로, 1617년 회담검쇄환사의 종사관 이경직(李景稷)의 『扶桑錄』에 수록되어 있는 일본 정탐 내용(「尙古日記」)을 참고 및 보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에 대한 각종 항목으로는, 지리, 지도를 비롯하여, 정치, 군정, 사회제도, 신분, 교통, 인구, 산물 등 경제, 주택, 의복, 공복, 음식, 풍속, 혼인 등에 대한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도쿠가와 막부 정권의 실태에 대해서는 정사 일행이 직접 관찰한 내용을 비롯하여, 일본측으로 얻어낸 정보(소문) 등을 바탕으로 보충한 것이 많으며, ‘오사카 전투’(1614~1615년) 이후에도 反도쿠가와 다이묘의 존재가 막부권력의 위협요인이었음이 반영되어 있다.

164)『인조실록』권8, 3년(1625) 3월 25일 계유, 인조와 회답사의 문답.

화를 시도하는 등, 아직도 불안한 권력 초기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두문답 내용만 보더라도 인조의 관심은 막부의 재침 가능성과 막부 권력의 안정성 여부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사 일행의 이러한 일본 정탐 의견은 교토(京都)와 에도(江戸) 체류중 이들을 응대했던 막부측 관리와의 문답, 에도성의 전명기에 참가할 일부 다이묘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취득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은 정보였다고 할 수 있다. 교토 체류중에는 茶僧을 통해 ‘오사카 전투’(1614~1615년) 이후 막부의 지배 상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즉 교토와 후시미(伏見) 사이에는 오사카 전투 이후에도 히데요리(豊臣秀頼) 잔당이 모여 들고 있으며, 도쿠가와 막부가 군사를 일으켜 이를 없애지 못하는 것은 이를 기회삼아 反도쿠가와 다이묘들이 오히려 난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아직 제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¹⁶⁵⁾ 사행 일행은 이와 비슷한 정보를 조선인 피로인을 통해서도 들었으며,¹⁶⁶⁾ 에도(江戸)에서는 막부측 관리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에도 체류중 사행 일행을 응대했던 봉행(奉行) 안도 시게나가(安藤右京進重長)는 ‘오사카 전투’시 이에야스(家康) 군에 가담했던 무장으로 도쿠가와 막부로부터도 신뢰가 두터워 정보의 신빙성도 높았다고 할 수 있다.¹⁶⁷⁾ 안도는 역관과의 문답을 통해, 도쿠가와 막부가 ‘오사카 전투’(1614~1615년)로 히데요리 세력을 멸망시킨 이후 전국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그 공과가 유공자(有功者) 대신 쇼군의 자손에게로 전수되어 다이묘의 불만을 초래하였기에, 조선의 사자를 초빙하여 공적을 과장하고 인심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막부의 진짜 의도를 확인해 주었다. 또한 참근교대 실시로 각지의 무장(武將)이 에도(江戸)에 있기는 하지만, 만약 조선의 사자가 오지 않았다면 다이묘들 가운데에는 조선과의 외교파탄을 기회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음을 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히데타다(秀忠, 은퇴장군 오고쇼)가 히데요리 잔당 소탕을 위해 군사를 일으키지 않은 것은 다이묘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서라고 했는데, 이는 교토 차승의 정보와도 일치하였다.¹⁶⁸⁾ 이와 같이 회답검쇄환사 일행은 막부 쇼군 측근과의 문답을 통해 막부가 조선 사자를 초빙한 진짜 속내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반 도쿠가와 다이묘 통제를 위해 선불리 무력(武力)을 동원할 경우 오히려 막부 권력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부담을 없애는 한편 다이묘 통제와 막부 권위도 함께 분식할 수 있는 ‘교린외교’를 선택했다는 것이었다.

1607년 회답검쇄환사 파견 이래 사행원들의 중요 임무 중 하나는 히데요시(豊臣秀吉)를 멸하고 武家정권을 수립한 도쿠가와 막부의 국내 상황을 정탐해 오는 것이었다. 앞서 1617년 회답검쇄환사의 정사였던 오윤겸(吳允謙)의『東槎上日錄』에는, ‘세키기하라 전투’(1600년) 및 오사카 전투(1614~1615년) 이후 히데요리 및 그를 추종하던 다이묘들이 제거됨으로써 제2대 쇼군 히데타다(德川秀忠)의 전국 장악력 등이 보고되

165)『東槎錄』(강홍중, 1624) 11월 23일.

166)『東槎錄』(강홍중, 1624) 12월 14일.

167) 安藤重長 (1600~1657) 는 에도시대 초기의 다이묘로 上野高崎藩의 第2代藩主임. 1609년(慶長 14) 에 德川家康를 拝謁하였으며, 오사카 전투(大坂の陣) 당시는 이에야스 군에 참전하였다. 막부에서는 書院番頭,寺社奉行 (1635~1657年), 奏者番 등을 역임하였다.

168)『東槎錄』(강홍중, 1624) 12월 18일.

었다.¹⁶⁹⁾ 1624년 회담검쇄환사의 부사 강홍중(姜弘重)의『東槎錄』에도 혼슈의 관문인 아카마가세키(赤間關)에서 에도(江戸)에 입성할 때까지 체류 지역에 대해 오사카 전투(1614~1615) 이후 도쿠가와 막부와 관계를 중심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며, 막부의 전국 지배 실태를 전달하고는 있다.¹⁷⁰⁾ 그러나 한편으로는 막부측 관리와의 접촉을 통해 오사카 전투 이후에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다이묘 통제가 문제라는 새로운 정보도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립 등, 회담검쇄환사 일행이 전하는 일본 정보는, 쓰시마번(對馬藩)이 전해오는 일본정보와는 사뭇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쿠가와 막부를 비롯한 일본 사정에 관한 정보는 조선 조정에서도 동래부사나 경상감사의 보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접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는 쓰시마번이나 왜관을 통해서 들어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쓰시마번의 이해관계나 왜관 사정에 맞추어 한번 걸러진 정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쓰시마번은 1624년 회담검쇄환사 파견을 요청할 당시만 해도, 조선의 회담이 늦어질 경우, 막부가 조선에 대해 금방이라도 무력 동원 가능성(武威)이 있는 것처럼 협박했다. 그러나 회담검쇄환사가 직접 목격하고 온 막부 권력이란, 전국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反도쿠가와 다이묘의 위협이라는 내부문제를 안고 있기에 이웃나라인 조선에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으로, 쓰시마번의 정보와는 사뭇 차원이 다른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행록은 정식 출장보고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회담검쇄환사 일행이 직접 확인해온 정보인 만큼, 국왕 인조를 비롯하여 조정 관료, 비변사 등에게까지 도쿠가와 막부권력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참고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정책 결정의 근거로도 작용하였다.

3) 후금 대비책으로 남쪽 병력의 ‘서변’ 이동 추진

그렇다면 제3차 회담검쇄환사의 귀국 이후 후금 대비책에는 실제로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

‘남쪽 병력 징발 건’에 대해서는, 1625년 5월부터 9월까지 후금의 ‘겨울철 직공설’이 대두되면서 신료들의 의견도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1625년 9월 인조가 징발하는 쪽으로 최종결정을 내렸다. 회담검쇄환사의 귀국보고(3월)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물론『인조실록』,『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을 보면 인

169) 1617년 회담검쇄환사의 정사였던 오윤겸(吳允謙)의『東槎上日錄』에는 쓰시마를 떠나 교토(京都)로 가는 도중에 머물렀던 체류 지역에 대해 이에야스(家康)의 정국 장악 이후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다. 혼슈의 관문 아카마가세키(赤間關)에 대해서는 ‘세키기하라 전투’(1600년)에서 이에야스에게 패한 이후의 모오리(毛利)씨 행적을 중심으로, 히데요리(秀頼)의 거점이었던 오사카(大坂)에 대해서는, ‘오사카의 전투’(1614~1615년)에서 히데요리가 전사한 후 관백(쇼군)의 지시에 따라 마츠다이라(松平忠明)의 지휘 아래 도시가 재건되는 모습 등이 기록되었다. 즉 이에야스를 불안하게 했던 히데요리와 그를 추종하던 다이묘들이 제거됨으로써 제2대 쇼군 히데타다(德川秀忠)의 전국 장악력 등이 보고되었다.

170) 강홍중(姜弘重)의『東槎錄』에 따르면, 회담검쇄환사 일행은 아카마가세키(赤間關)를 시작으로 (아키(安藝), 우시마도(牛窓), 무로즈(室津), 오사카(大坂), 교토(京都), 히코네(彦根), 나고야(名古屋), 오카자키(岡崎), 츠루가(駿河), 하코네(箱根), 가나가와(神奈川)를 거쳐 에도(江戸)에 입성할 때까지 체류 지역의 관할 다이묘에 대해 오사카 전투(1614~1615) 이후 도쿠가와 막부가 패권을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이들을 어떻게 교체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조가 통신사의 귀국 보고를 듣고 남쪽 병력 이동을 결정했다는 식의 두 가지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제시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인조와 회답검쇄환사의 구두문답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무력을 동원한 일본의 재침 가능성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으로 본다면, 적어도 회답검쇄환사의 일본 파견을 통해 남변의 방비 소홀에 대한 불안은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본다. 남변에 대한 불안 해소는 인조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사안보 전담부서인 비변사에까지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변사는 1625년 5월까지만 해도 남쪽 군사의 북쪽 방수를 반대했었다.¹⁷¹⁾ 그러나 1626년 윤6월 비변사는 조선이 모문룡 군영에 공급해야 할 군량 조달책으로, 하삼도(전라·경기·충청) 영문(營門)에 비치되어 있는 양곡을 서변(西邊)으로 옮길 것을 건의하고 있다. “남쪽 근심이 어느 정도 해소”(南憂稍緩, 西社政急)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¹⁷²⁾ 말하자면 1624년 회답검쇄환사의 일본 정탐 결과로 일부 신료(이귀 등)의 “왜정으로 인한 남변 경계론”은 더 이상의 설득력은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남쪽 병력 및 군량의 서북쪽 이동의 결정적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1626년 7~8월 사이 후금의 겨울철 공략 가능성에 대한 모문룡측의 정보¹⁷³⁾ 및 의주(義州) 침공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자,¹⁷⁴⁾ 후금의 위협에 대한 위기가 한층 고조되면서 3남 병사의 서방(西防) 조달이 신속하게 추진되게 되었다. 1626년 8월에는 우의정(신흠)이 남군 5천명을 징발해서 서변으로 옮길 것을 건의함에 따라, 전라도 병사 1천2백명이 서변으로 차출되었다.¹⁷⁵⁾ 신흠은 1625년 9월 병력이동 논의 때만 하더라도 후금의 주적(主敵)은 명(明)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 침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좌찬성 이귀와 함께 남쪽 병력의 징발에 반대했던 인물이지만, 이 건의로 인조의 결정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9월말에는 전라도 병사 1천2십5명과 경상도 병사 1천1십3명이 서변으로 차출되었다.¹⁷⁶⁾

요컨대, 인조즉위 직후부터 1626년 말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후금의 ‘겨울철 직공설’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도 정묘호란 직전까지 후금의 직접적인 군사도발은 없었다. 따라서 후금 정탐을 계속하는 가운데 남쪽 병력의 차출을 주저하고 있었으나, 1625년 회답검쇄환사의 귀국보고를 통해 도쿠가와 막부의 내부문제로 인해 무력 침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최종결정권자인 인조도 남쪽 병력 징발이라는 결단을 내려 북변 방어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북변 방어를 위해 도쿠가와 막부의 안정, 나아가 조일관계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대외인식은 ‘권의지책’(權宜之策)에 따른 1624년의 회답검쇄환사 파견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요동치는 변동기에는 조일간 통신사외교의 밑바탕이 되었다. 병자호란 직전 후금과의 전쟁위기 속에서 ‘권시지책’(權時之策)으로 병자통신사(1636년)를 파견했던 것이나, 명·청 교체기에 청·일연대를 견제하기 위해 계미

171)『인조실록』권9, 3년(1625) 5월 29일 병자.

172)『인조실록』권13, 4년(1626) 윤6월 22일 임술.

173)『인조실록』권13, 4년(1626) 7월 9일 기묘.

174)『인조실록』권14, 4년(1626) 8월 17일 병진.

175)『인조실록』권14, 4년(1626) 8월 17일 병진, 8월 29일 무진.

176)『인조실록』권14, 4년(1626) 9월 27일 병신, 9월 29일 무술.

통신사(1643년)를 파견했던 것, 북벌을 추진하던 효종대(1655년 을미통신사)까지는 적어도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본다.¹⁷⁷⁾

맺 음 말

지금까지 1624년의 회답검쇄환사 파견을 조일 양국의 국정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다음의 두 가지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인조 즉위 초 후금의 대두라는 동아시아의 변동 속에서 조선이 비상시국을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일본과의 외교를 멈추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일본 역시 조선의 안보 위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무력 동원 대신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던 이유를 국내의 정치적인 필요라는 관점에서 살펴 본 것으로, 조일 양국 모두 통신사 교섭의 파탄시 이를 감당할만한 여력이 없는 가운데 위험부담이 적은 외교를 선택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선의 1624년 회답검쇄환사 파견이란 일본의 요청에 대해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1607년 국교 재개 이후 선조대의 대일본통교 방침을 계승한 것으로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인조 즉위 후 1623년 10월 수립된 후금 대비책의 핵심은 남쪽 병력을 서북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이 대비책이 1625년 9월 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추진되게 된 결정적 계기를 회답검쇄환사의 일본 정탐 보고로 보았다. 즉 인조 즉위 이후 국정상 가장 긴급한 현안은 후금의 위협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정묘호란 직전까지도 조선과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없었다. 이에 후금 동향 정탐을 계속하는 가운데 1625년 5~9월 사이 후금의 ‘선제공격 및 겨울 직공설’에 따른 위기가 고조되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료(李貴 등) 및 비변사가 ‘왜정’을 이유로 남쪽 병력 이동을 반대함에 따라 후금 대비책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탐이라는 인조의 특별지시를 받은 회답검쇄환사의 귀국보고(1625년 3월)를 계기로 도쿠가와 막부가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을 침범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서야 1625년 9월 비로소 남쪽의 병력을 서변으로 옮기는 후금 대비책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1624년 회답검쇄환사 일행이 정탐해온 일본사정이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거나 막부측 관리와의 접촉을 통해 얻은 것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정보였다는 것이다. 쓰시마번의 이해가 반영된 일본 정보와는 차이가 있었기에 인조 및 비변사의 막부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물론 후금대비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1624년의 회답검쇄환사의 외교적 파견 명분은 이에미츠(家光)의 쇼군(將軍) 습직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본측이 ‘쇼군 습직 축하’라는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온 진짜 속내에 대해서는 회답검쇄환사의 일본 체류중 막부측 관리와의 접촉을 통해 비로소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회답검쇄환사 일행은

177)『효종실록』권14, 6년(1655) 1월 25일 경술.

그들의 경유지역인 아카마가세키(赤間關)에서 에도(江戸)에 이르기까지 ‘오사카 전투’(1614~1615년) 이후 도쿠가와 정권의 전국 지배 실태를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도 시게나가(安藤重長)와 같은 쇼군 측근의 막부 관리와의 문답을 통해서도 ‘참근교대’와 같은 다이묘 통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야스(家康) 이래 세습정권에 불만을 가진 反도쿠가와 다이묘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 도쿠가와 막부의 통신사 요청이 성사되지 못했을 경우 이를 계기로 反 도쿠가와 다이묘들이 내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는 속내도 파악할 수 있었다. 막부가 反도쿠가와 다이묘의 동요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다는 막부의 내부 정보(진 의)는 회답검쇄환사로 하여금 조선에 대한 막부의 무력 동원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1624년 회답검쇄환사 파견은 일본측의 요구에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1607년 국교 재개 이후의 대일본 통교방침을 계승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1624년 ‘쇼군 습직 축하’를 위한 회답검쇄환사 파견은 조선으로서는 전례에 없는 예기치 못한 외교명분이었다. 쓰시마번은 ‘즉위하사’편에 이에미츠(家光)의 쇼군 습직 사실을 통보해온 것을 시작으로, 1624년 2월과 3월에도 통신사 요청을 해왔다. 조선은 특히 3월 쓰시마번 사자(橘智正)의 파견을 계기로 신속하게 파견을 결정했다. 결정 배경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선위치서’의 존재 여부가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은 채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간단히 평가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조선의 교섭절차로 볼 때 선조 이래 내건 통교조건, 즉 전례에 따라 ‘선위치서’가 충족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리고 조선의 대응으로 볼 경우에도 1624년의 회답검쇄환사 파견이란 선조 이래의 대일본 통교방침, 즉 상대국의 조경사에 대한 사절 교류를 되도록 미루려 했던 선조 이래의 통교방침 및 기유약조를 계승한 것임을 밝혔다. 쓰시마번은 1623년 윤10월 인조즉위 직후 ‘즉위하사’라는 명분으로 이에미츠(家光)의 쇼군 습직 사실을 알려 오면서 ‘예조참판’ 앞으로 서계를 가져왔다. 즉 쓰시마번의 신례(新例) 시도에 대해 조선은 ‘예조참의’로 하여금 대응하게 하는 한편, 통신사 파견 허락에 대해서도 중앙의 예조가 아닌 ‘동래부사’(金繼)로 하여금 대응하게 하였다. 이렇게 일본측의 요청보다도 한 단계 낮추어서 대응하도록 한 것은, 도쿠가와 막부의 경조사에 대한 조선의 사자 파견이 임기응변적인 것임을 내비치는 의사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유약조 이후 통교 축소를 만회하고자 통신사 요청을 계기로 접대 기회를 되도록 증가시키려는 쓰시마번의 신례 시도가 전례로 항례화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조선의 이러한 대응방침은 1624년의 회답검쇄환사 일행이 지참해간 인조의 국서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인조의 국서는 쓰시마번이 개찬(僞作)한 내용만이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개작이전의 인조 국서에는 “일본의 경사에 대한 조선의 사자 파견이 모문룡의 가도(槲島) 주둔에 대한 부담으로 여의치 않음”을 명기함으로써 조·일관계가 조·명관계에 구속받는 것임을 부각시켰다. 이는 일본의 조

경사에 대한 조선의 사자 파견이 명(明)의 허락사항이라는 선조 및 광해군대의 대일본 통교방침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인조 국서의 말미 부분에는 양국관계에서 “신의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후금 대비책이 긴급 현안인 안보 상황에서 조선이 모색해야만 하는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쓰시마번의 개작 국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임란 이후 국교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조선의 불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여겨 막부의 반감을 우려한 결과 모두 삭제되었다.

여섯째, 인조 국서에 대한 쇼군(이에미츠)의 답서 역시 막부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쇼군의 답서에는 쓰시마번의 개작 이전과 이후를 불문하고 조선이 이에미츠의 쇼군 습직 소식을 듣고 “먼저 자발적으로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했다는 식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혔다. 이는 새로운 쇼군 습직에 대해 이웃나라 외교사절의 축하라는 국제적 인지 절차를 통해 反도쿠가와 다이묘를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뿐만 아니라 세습정권으로서 막부 권력을 분식하기 위해 조선의 사자 파견을 자발적인 것으로 연출하려 했던 것은 1624년의 회답겸쇄환사를 시작으로 1643년의 이에미츠의 아들(若君) 탄생 축하를 위한 계미통신사, 1655년 쇼군 이에츠나(家綱)의 습직을 축하하기 위한 을미통신사 때까지 계속되었음을 지적하였는데, 히데타다(秀忠)와 이에미츠(家光)에 걸쳐 막부 권력의 강화에 힘쓰던 시기와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개작되기 이전 원래의 인조 국서 및 쇼군의 답서에는 자국의 외교적 입지나 국내 정치 사정 때문에 상대국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었지만, 쓰시마번의 국서 개찬이라는 우여곡절 결과 상대국을 자극하는 문언들이 수정 또는 삭제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조일 양국관계를 안정시키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일 양국 국서에는 말미 부분에 모두 ‘隣交·隣好의 지속’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록 외교적인 수사라고 할지라도 조일관계는 물론 국내정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도쿠가와 막부는 세습정권에 대한 조선의 자발적 파견을 부각시킴으로써 反도쿠가와 다이묘들에 대해 무력을 동원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을 진정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으로서는 일본의 재침 가능성을 억제함으로써 국내정치의 안정은 물론, 후금 대비책을 계획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요컨대, 조선의 입장에서 북변 방어를 위해서는 ‘권의지책’(權宜之策)을 발휘하여 도쿠가와 막부와 안정, 나아가 조일관계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조대의 대외인식은 1624년의 회답겸쇄환사 파견을 시작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요동치는 변동기에는 조일간 통신사외교의 밑바탕이 되었다. 병자호란 직전 후금과의 전쟁위기 속에서 ‘권시지책’(權時之策)으로 병자통신사(1636년) 파견을 결정했던 것이나, 명·청 교체기에 청·일연대를 견제하기 위해 계미통신사(1643년)를 파견했던 것, 명·청 교체 이후 북벌을 추진하던 효종대(1655년 을미통신사)까지는 적어도 이러한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본다. 조선의 이러한 대일본외교 전략은 1607년 제1회 회답겸쇄환사 파견 이후 도쿠가와 막부와 직접통교 루트 유지로 일본 사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

였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였다.(완)

막말-메이지초기 한·일간의 갈등과 화해

현 명 철

<목차>

- I. 머리말
- II. 막말 정치사와 한일관계관의 변화
- III. 외교 갈등과 기유약조 체제의 붕괴
- IV. 기유약조 붕괴 이후의 왜관과 외교 갈등
- V. 조일수호조규의 체결과 화해
- VI. 맺음말

I. 머리말

조일수호조규(강화도 조약)는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며, 이로 말미암아 조선이 개항되었고 그 조약은 불평등한 것이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 쇄국에서 개항으로 이끈 조약, 함포외교 즉 일본의 무력에 의해 굴복한 조약, 준비되지 않은 개항이었기에 불평등한 조약, 나아가 일본의 침략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맺은 국권피탈의 첫 걸음이 된 조약 등, 침략과 저항의 프레임에서 이루어진 설명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임란이후 우호적인 한일관계나 왜관의 존재, 양국 간의 부단한 교섭을 설명할 공간이 없다.

한일관계사의 연속성에서 조일수호조규를 바라보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상을 복원할 수 있다. 당시 조약이 맺어진 후 수신사를 통해 전달된 예조참판 이인명의 서계를 보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전해들은 말이 와전되어 두 나라가 서로 의심하여 사이가 틀어진 채 여러 해가 되었고, 인교의 구의를 생각할 때마다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귀국 대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본방의 대신과 명백히 담판하여 다시는 장애될 일이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마치 비바람이 지나간 난초 밭에 꽃향기만 가득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구의를 두텁게 하고 영구적인 우호를 계속한다면 기쁨이 한량없겠습니다.¹⁷⁸⁾

또한 이 서계에 대한 일본 외무대승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의 답서에서도,

귀국과 우리나라는 작은 배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가깝고, 외교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세월이 오래되자 사신이 단절되어 60여 년이 지나니, 두 나라의 정의가 점점 괴리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변리대신이 귀국에 가서 거듭 옛 외교를 닦고 새로운 맹약을 세웠습니다. 귀국 역시 서둘러 수신사를 파견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접대했는지 지금 감히 군말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평소 경모하던 마음이 이번에 촉발되어 우리의 분수를 다하였음을 귀국 수신사도 알고 있는 바입니다. 두 나라의 교제가 이로부터 더욱 친밀해질 것이 기대되니 양국 백성의 행복이 이

178) 김기수, 『일동기유』 권4, 서계. (수신사기록 번역총서1, 보고서 간행, 구지현 옮김 『일동기유』 171-172쪽)

보다 더 클 수 없을 것입니다.¹⁷⁹⁾

이 서계의 내용을 보면, 「조일수호조규」는 한일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고 우호를 회복한 조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계 내용에 나오는 밑줄 부분, 막말-메이지 초기 ‘두 나라가 서로 의심하여 사이가 틀어진’, ‘두 나라의 정의가 점점 괴리’된 과정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강화도 조약에 대한 재검토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강화도 조약 체결의 국제적 요인과 조선측의 주체적 요인을 분석한 윤소영은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이 아님을 강조하였다¹⁸⁰⁾. 이태진은 조약 체결과정에서 고종의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강화도 조약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 맺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 정부가 능동적으로 맺은 요인이 더 강하였다고 하였다.¹⁸¹⁾ 제홍일은 조약체결과과정에서 조약교섭의 실질적 책임자인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의 조선관에 분석을 집중하여 일본은 소극적으로 강화도 조약에 임하였다고 하고, 조선을 ‘개국’시켰다는 평가는 실체가 없는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논하였다.¹⁸²⁾ 한편, 강화도 조약에 대한 후대의 인식을 분석한 츠키야시 다츠히코(月脚達彦)는 최혜국대우 규정과 협정관세 규정이 없는 강화도 조약은 ‘불완전한 불평등 조약’이며 이 조약을 굴욕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보는 인식은 체결당시는 물론 3·1운동 시까지도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¹⁸³⁾ 박한민도 조일수호조규는 양국 우호를 선언하는 성격이 강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1883년 「조일통상장정」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된 교섭을 통해 형성된다고 파악하여 ‘조일수호조규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¹⁸⁴⁾ 김흥수 역시 조일수호조규로 조선이 개국한 것이 아니며 불평등한 조약도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다.¹⁸⁵⁾

본 발표는 최근의 연구에 용기를 얻고, 위의 사료에 의거하여 조일수호조규를 근대 전환기의 갈등을 해소한 조약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조망은 전근대와 근대 사이의 한일관계사의 단절을 극복하여 연속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선 근대 전환기의 갈등이 무엇이며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메이지 초기의 외교를 둘러싼 갈등의 시작은 조선후기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폐단’이라고 규정한 메이지 정부의 쓰시마번과, 과거의 외교 관계를 ‘성신지교’라고 믿어 온 조선 동래부의 충돌로 시작되었고, 폐번치현 후, 외무성에 의한 일방적인 기유약조의 폐기, 일본이 힘에 의거하여 새로운 조약을 맺고자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은 피하고자 하였던 동래부의 모습이 그 핵심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발표의 II장에서는 막부말기 정치사의 변화 속에서 쓰시마번이 그동안 ‘성신지교’를 ‘구폐’라고 표현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과, 그 ‘구폐개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서술한다. III장에서는 대수대차사 파견 이후 왜관에서의 교섭과 동래부의 대응을 검토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기유약조 붕괴 이후의 갈등 상황과 왜관의 모습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V

179) 『일동기유』 전계서, 174-175쪽

180) 윤소영, 「조일수호조규의 역사적 위치」(『한일관계사연구』18, 한일관계사학회), 2003.

181) 이태진, 「1876년 강화도 조약의 명암」(『한국사 시민강좌』36, 일조각), 2005.

182) 제홍일, 「명치초기의 조선정책과 강화도사건 - 宮本小一을 중심으로 - 」

183) 月脚達彦, 「近代朝鮮の条約における '平等' と '不平等' - 日朝修好条規と朝米修好通商条約を中心に」(『東アジア近代史』 13), 2010.

184) 박한민, 박사논문 『조일수호조규 체제의 성립과 운영 연구(1876-1894)』 201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185) 김흥수, 「일본 역사교과서의 강화도 조약 기술 검토」(『동북아역사논총』35호, 2012년).

장에서는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과정에 대해 새롭게 검토하여 조일수호조규가 갈등을 해소한 측면도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II. 막말 정치사와 한일관계관의 변화

일본 막부의 개국은 직접 한일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한일관계관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래의 조선과의 우호 관계가 ‘구폐(과거의 폐단)’라고 명확히 표현되고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양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가교 역할을 자부해 온 쓰시마번이 그동안 ‘성신지교’라고 찬양하였던 한·일 외교관계를 ‘구폐’라고 표현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과, 그 ‘구폐개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서술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지난 4월 심포지움¹⁸⁶⁾에서 이미 발표하였기에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1. 막부의 개항과 대외팽창론의 대두

막부의 개항에 따라 「대외팽창론」이 일본에서 나타난다. 이는 페리 함대의 내항에 따라 막부가 수호조약을 맺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이묘들에게 물었기 때문에, 다이묘들이 자신들에게 논의하도록 하였고, 자연스럽게 도쿠가와(德川) 막부 성립 이래 논의조차 금지되었던 해외로의 진출 - 대외팽창론이 공개적으로 분출된 것이었다.

이 대외팽창론은 그동안 ‘의롭지 못한 전쟁(不義之舉)’이라고 평가하였던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침략을 신공왕후 전설과 어울려 일본의 국위를 빛낸 일로 찬양하는 역사의식을 만들어 내었고, 막부의 쇄국정책을 비판하는 기능을 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논의에서 기존 한·일간의 우호관계나 쓰시마에 대한 배려는 찾을 수 없다. 조선과 막부가 오랫동안 외교 관계를 지속해 온 역사도 관심 밖이다. 그들에게는 조선과의 외교는 막부와 쓰시마의 독점이었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고, 막부의 쇄국외교는 비판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임진왜란시의 豊臣秀吉의 대외팽창의 기억만이 중시되었던 것이다. 이점이 당시 「대외팽창론」의 중요한 성격이었다. 비록 막부와 쓰시마가 연결된 한일관계의 핵심부의 의견은 아니었지만, 서남옹변의 여론으로 대외팽창 사상의 대두와 확산은 임진왜란 전후처리 합의(조선후기 우호적 한일관계의 기반)가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 이는 쓰시마번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2. 막부의 개항과 쓰시마

서남 옹변 사이에서 나타난 대외팽창사상은 조선과 가교(架橋)를 자임하고 있었던 쓰시마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다. 게다가 개항 후 서양과의 외교 교섭을 위해 외국봉행(外國奉行)이 임명되어 외교 사무를 관장하게 되면서, 외교 전문가를 자처하던 쓰시마[對馬] 영주의 막부 내에서의 위상도 크게 저하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개항장을 통하여 값싼 외국 면제품이 들어오게 되자 조선과의 중계무역을 통해 독점적 판매망을 구축하였던 쓰시마[對馬]의 상업망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이윤이 급감하였다. 조선과의 공무역이 주로 조선의 공물을 수입하고 구리를 수출하는 것이었는데¹⁸⁷⁾, 서양의 목면이 개항장을 통해 수입되면서 이윤이

186) 현명철, 「일본의 개항과 한일관계관의 변화」(『2019 김은숙교수 정년 기념 한일관계사학회 기획학술회의』 자료집)

187) 원래 공무역은 목면 1121동 44필이었으나, 1651년 400동을 쌀로 달라고 해서 공목 721동 44필과

급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지 영토는 협소하면서도 10만석 가격(家格)의 영주임을 자부하고 그에 어울리는 무사단을 유지하였던 쓰시마는 실질적으로 파산상태에 몰리게 되었다.

1861년 초슈[長州]는 '항해원략책'을 제안하여 막부의 개항을 지지하고 중앙정치에 개입하였다. 도자마[外様]번이 막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당시 고립되어 있었던 막부로서는 초슈가 조정에 개국을 권하여 칙허를 요청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기에 이를 받아들였다. 물론 초슈가 막부를 돕거나 막부 개혁을 단행하여 일본 전체의 미래를 바라보는 의식은 없었고 오히려 막부와 대립할 수 있을 정도의 군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이해가 일반적이다.¹⁸⁸⁾

초슈[長州] 영주와 친척이기도 하고 거리상으로도 가까웠던 쓰시마는 서남옹번 사이에서 분출된 대외팽창론, 막부의 개항정책과 초슈의 「항해원략책」, 그리고 조선무역 이윤의 급감이라는 태풍에 직면하여 생존의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3. 쓰시마[對馬]의 이봉[移封]운동과 막부의 외교 일원화 정책

막부의 개항정책과 초슈의 「항해원략책」, 그리고 조선무역 이윤의 급감이라는 문제에 처했을 때, 러시아 군함 포사드니호가 군함 정박장을 요구하여 쓰시마에 투묘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쓰시마는 쓰시마 전토를 막부가 수용하고 쓰시마에는 큐슈 10만석의 땅을 달라는 '이봉운동'을 전개한다.¹⁸⁹⁾ 막부의 개항 정책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개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 그러나 개항을 반대할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쓰시마 전토를 이봉해 달라는 의견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번주의 지시를 받고 에도에 입성한 쓰시마 무사들은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특히 각 번의 에도 저택을 순회하면서 주선을 요청하고 만일 막부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러시아 함대와 전쟁을 벌이겠다는 엄포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오후나고시[大船越]에서 충돌사건이 일어난 것은 좋은 구실이 되었다. “막부의 개항정책으로 인해 러시아 함대가 쓰시마 영지에 정박한 것이며 충돌로 인명사고가 났으므로, 무사들의 분노가 견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마도 전토를 막부가 수용하는 것뿐”이라는 주장이었다. 막부가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무사들은 승패를 고려하지 않고 전쟁으로 돌입할 것이며 다이묘로서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막부를 압박하였다. 막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일개 번이 전쟁을 일으켜 전멸당하더라도 명예를 지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막부의 권위를 심하게 훼손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쓰시마가 내세운 전쟁의 각오는 예기치 않은 지지와 반향을 불러들였다. 에도 각 번저의 많은 무사들이 대외전쟁의 과격한 각오를 「志士」라고 칭찬하였다. 쓰시마는 여론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또한 많은 번들이 서한을 보내와 만약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쓰시마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막부의 지도적 위치가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쓰시마의 뜻이 대외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봉(移封)에 있었음은 물론이었지만, 여론은 대외전쟁의 각오를 찬양하는 쪽으로 흘러 양이운동의 확산을 초래하였다. 막부는 쓰시마의 요구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

一, 토지만 준다면 어찌되어도 좋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미 에도 루스이[留守居]등은

공작미 16000석이 되었다. 1801년 새로운 약조로 56동이 줄었고, 공작미도 1필당 10두로 계산하게 되어서 어서 이때에는 공목 665동 44필, 공작미 13333석5두가 공무역가였다. 한편 진상으로는 구리 34788근이 공무역가이다.

188) 井上勝生、『막말·유신』岩波新書 1042, 2007년 제9刷

189) 여기에 대해서는 현명철 「제1장 1861년 대마주의 이봉 청원 운동」(『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 관계』국학자료원, 2003년, pp23-pp60) 참고.

오로지 그러한 논리로 말하고 있다.¹⁹⁰⁾

막부는 여론의 중심에 들어선 쓰시마의 요구와, 이로 파생되는 양이운동의 확산을 차단하여야 했다. 또한 막부의 입장에서도 개항을 단행한 후, 외국봉행이 외국과의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조선과의 외교도 외국봉행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외교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초슈[長州]의 항해원략책에 공감하고 있었던 막부 군함봉행 카츠카이슈[勝海州]도 비슷한 견해를 제출하였다. 여기에 조정이 악착같이 반대하는 효고[兵庫]항 개항 대신에 쓰시마 개항을 서양에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되어 외교적 접촉도 진전시켰다. 이런 논의를 거쳐서 막부노중 안도노부마사[安藤信正]는 7월 13일, 쓰시마의 이봉을 내허[內許]하기에 이른다. 내허를 받고 쓰시마 영주는 8월 1일 이봉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쓰시마 수용을 위한 조사단 활동이 마무리될 무렵인 1862년 1월, 막부 노중 안도[安藤]가 피습당하여 실각한다. 이를 사카시타문 밖의 변[坂下門外の變]이라고 한다. 일본 열도는 점차 양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대마도 조사를 마치고 귀환한 막부 관리의 보고에도 만일, 쇄항을 단행하게 될 경우도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마도의) 전토 이봉은 연기하고(중략), 몇 촌락만을 수용하여 각국 군함 정박장으로 허가하여(중략), 대략 시모다[下田]를 개항했을 때에 준하여야 할 것입니다.¹⁹¹⁾

라고 대마도 전토 이봉에 부정적인 의견을 결론적으로 내리고 있다. 이 견해는 쇄항의 가능성을 고려한 ‘토지 일부수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쓰시마가 피하고자 하였던 최악의 결과였다. 조사단의 보고에 대하여 막부의 다른 외국봉행들이 평의를 열어 찬성을 표함으로 결국 대마번의 移封 운동은 좌절되었다. 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쓰시마 처리를 통한 외교권의 장악, 즉 조선 후기 한일 간 외교의 특색이었던 쓰시마를 매개로 하는 외교를 변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일본 중앙정부에서 검토되기 시작하였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양이(攘夷)시대의 전개와 원조요구운동의 변화

1862년 초, 막부장군 이에모치[家茂]와 황녀 카즈노미야[和宮]의 결혼이 이루어졌고, 사쓰마[薩摩]의 시마즈 히사미쓰[島津久光]는 1862년 3월 중순, 병사 1000명을 거느리고 상경하였다. 명분은 막부의 내분을 수습하여 막부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내걸었다. 도자마[外様] 다이묘가 막부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막부의 반발을 초래할 일이었지만 막부는 적대하지 않았다. 히사미쓰[久光]는 조정의 칙을 받든 특사를 대동하고 에도(江戸)에 올라가 막부에 개혁을 요구하였다.¹⁹²⁾ 황녀와 결혼한 직후여서 막부 쇼군(將軍)은 조정의 칙사를 접대하고 개혁에 부응하였다(文久の改革). 히도쓰바시 요시노부[一橋慶喜]는 장군 후견직, 마쓰다이라 요시나가[松平慶永]는 정사총재직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성과는 사쓰마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반면에 초슈[長州]의 ‘항해원략책’은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다.

초슈[長州]번은 1862년 7월, 방침을 일변하여 서양과의 조약을 파기하고 서양세력을 배척한다는 ‘파약양이(破約攘夷)’를 번론(藩論)으로 내세웠다. ‘항해원략책’에서 ‘파약양이(破約攘夷)’로 번론(藩論)이 극단적으로 바뀐 것은 조정을 장악하고 막부를 궁지에 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것이 정치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초슈는 藩論을 바꾸기 전에 천황의

190) 『鈴木大日記』 1861년 5월 28일조. 内閣文庫所蔵史籍叢刊 11.

191) 『開國起源Ⅲ』(『勝海舟全集』3, 勁草書房, 1979년) 360-364쪽

192) 1. 장군이 다이묘들을 이끌고 교토로 와서 국사를 의논한다. 2. 연해 5개 대번의 번주를 다이로에 임명하여 국정에 참가시킨다. 3. 一橋慶喜를 將軍後見職으로, 松平春嶽를 政事總裁職에 임명하여 將軍을 보좌하게 한다.

의지를 먼저 확인하였고, 조정은 통상조약은 물론 화친조약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천황의 뜻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초슈는 자신들만이 천황의 뜻을 받드는 충신이라고 선전하면서 ‘파약양이(破約攘夷) 외길’을 주장할 수 있었다. 초슈는 다시금 정치력을 회복하였다. 존왕양이 과격파가 초슈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일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많은 무사들이 ‘양이’에 동참하여 막부의 개항 정책을 성토하였으며 초슈는 그들에게 논리를 제공하는 두뇌가 되었다. 그들은 텐쥬(天誅)라는 테러 행위를 통해 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으며, 일본 열도는 ‘양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존왕양이 과격파는 조정 내부에도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다.

초슈[長州]가 ‘파약양이’를 藩論으로 내세우고 존왕양이 과격파가 세력을 확대하자, 개항을 전제로 성립된 쓰시마[對馬]의 이봉운동은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실제로 막부에서는 쓰시마 전토 이봉에 대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하지만 반발과 부작용을 우려하여 막부는 이를 쓰시마에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 일부 이봉은 쓰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쓰시마의 일부 무사들은 원조 주선을 대가로 초슈와 운명을 같이할 것을 약속하였다. 쓰시마의 무사들을 포섭한 것은 조슈의 기도다카요시[木戸孝允]였다. 기도의 계획에 따라 쓰시마의 일부 무사들은 쓰시마[對馬] 영주(다이묘) 요시요리(義和)의 명령을 무시하고 에도(江戸)로 나갔으며, 1862년 9월 말일, 그곳에서 당시 반막부 세력의 중심이었던 초슈(長州)와 동맹을 맺는다. 그들은 초슈의 ‘파약양이’ 외길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초슈의 주선을 얻어 쓰시마번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쓰시마 양이정권(攘夷政權)’이라고 부른다.¹⁹³⁾

조슈[長州]는 쓰시마[對馬]의 원조 주장을 적극 지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조정에도 적극 공작하였다. 초슈[長州]의 주선이 효과를 발하여 1863년 1월, 조정은 쓰시마에 양이단행의 칙서와 조정의 회답서를 내린다. 조정이 일개 약소 번에 칙서를 내렸다는 것은 당시 많은 화젯거리가 되었다. 쓰시마는 한일관계의 변경이 아니라 서양과의 양이전쟁이 벌어질 경우의 최전선이며, 쓰시마의 문제는 일본 전체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조정의 해석은 일본 내 서날리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쓰시마는 다시금 일본 열도의 주목을 받았다. 쓰시마 무사들은 조정의 칙을 각 번의 무사들에게 보여주면서 주선을 요청하였고 각 번의 무사들 사이에 쓰시마 원조를 둘러싼 토론이 벌어졌다. 이미 막부는 양이를 실행하겠노라고 조정에 약속을 하였기에 이들을 토벌하거나 제어할 수 없었다.

결국 1863년 4월, 老中 이타쿠라카츠키요[板倉勝靜]가 쓰시마에 대한 원조를 결정하고 「조선국체정 탐색지내명(朝鮮國體情探索之內命)」을 쓰시마에 내린다.¹⁹⁴⁾ 이는 수세에 몰린 막부의 결정이지만, 무익한 원조는 아님을 표방한 것으로 1861년 안도[安藤信正]가 쓰시마 이봉을 허락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훗날 조선과의 외교와 무역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이었음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다음달, 이러한 내허를 받고 쓰시마는 어린 藩主의 이름으로 원조요구원서를 제출한다. 이 원서가 오늘날 「정한론 원서」로 주목받게 된다. 그 내용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쓰시마의 위기가 아니라 조선의 위기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즉,

… 일본이 양이를 단행하게 되면 그들(서양세력)의 불만이 조선을 향하게 되어, 조선을 (침략하여) 교두보로 삼고 일본의 각 지역을 약탈할 것이므로 이는 쓰시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退守의 책을 버리고 進戰의 책을 세워

193) 여기에 대해서는 현명철 「제2장 대마주 ‘양이정권’의 성립 배경과 과정」(『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 전게서 pp61-85) 참고

194) 「朝鮮事務一件」四、939쪽.

서 서양 오랑캐가 조선에 침입하기 이전에 책략을 세워두면, 神君(도쿠가와이에야스) 이래 200여년의 和交, 여기에서 신의로써 조선을 원조한다는 뜻으로 복종시키고 만 일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兵威를 보여야 하는 데 이때 임진 일거와 같이 명분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¹⁹⁵⁾

원서의 내용은 ‘내허’의 내용을 보충하고 확인하는 형태를 취한다. 막부의 입맛에 맞게 막부가 원조를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절차이다. 조선과의 외교를 담당해 왔으며, 조선의 현실에 대해 유일하게 잘 알고 있는 쓰시마가 공식적으로 조선이 위험하며, 조선이 침략당하면 일본이 위험하게 된다고 선동하는 것은, 막부의 견해와 당시의 여론을 받아들여 원조 요구의 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며, 객관적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었다. 정치적 행동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목되는 것은, 병위를 보이되 임진왜란과 같이 명분이 없는 전쟁이라는 말은 피하여야 한다는 것, 하루속히 막부가 쓰시마를 직할령으로 삼고 조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 나아가 서양 열강이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일본이 조선을 복종시켜야 하며 이것이 도쿠가와 막부의 정신과 일치한다는 논리가 당시의 여론으로 형성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초기 조선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었던 대외팽창론(혹은 항해원략책)이 쓰시마의 이봉운동과 원조요구운동을 통해 현실성을 띠고 기존의 외교관계와 접점을 찾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동시에 기존 외교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폐단으로 간주된 한일관계

1866년 12월 요시노부[徳川慶喜] 정권이 성립되자, 老中 이타쿠라는 다음과 같은 達을 쓰시마에 하달하였다.

조선국 취급에 대해서는 일찍이 규칙이 있었겠으나 지금부터는 변혁을 할 터이므로 그 뜻을 잘 받아들여주기 바란다. 지금의 시세를 잘 살피어 모든 격식은 옛날의 격식에 따르지 않고 다른 외국과의 교제에 준하여 더욱 신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라. 나아가서는 이정암 윤번제를 폐지하며 별단의 역인을 파견할 터이니 명심하라¹⁹⁶⁾

이는 조선과의 외교를 막부가 직접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1861년 쓰시마의 이봉운동에서 촉발된 직접외교 구상이 좀 더 현실감을 갖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막부가 조선과의 외교 관계에서 옛날의 격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기존의 조선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수순으로 장기 계획이었고, 조선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막부의 사절 파견도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막부는 국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힘을 상실하고 있었다. 게다가 쇼군 요시노부[徳川慶喜]를 지지하였던 코메이[孝明]천황이 급사하였다. 천황의 급사는 요시노부 정권에는 큰 타격이었다.

1867년 8월 토막파는 무력으로 막부를 타도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 1867년 10월14일, 요시노부[慶喜]는 대정봉환(大政奉還)을 신청하였다. 요시노부[慶喜]는 다이묘 연합정부를 만들어, 도쿠가와[徳川]가 필두가 되어 국정의 실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대정봉환이 상실했던 이날, 「적신(賊臣) 요시노부[慶喜]를 진륙(殄戮)하라」는 막부를 토벌하라는 밀칙이 사쓰마 번주와 초슈 번주 앞으로 내려진다. 이것이 위조된 밀칙이었음이 최근 밝혀졌지만, 당시로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정치에서는 권모술수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게 한다.

195) 『大島家文書』 중 「御願書写」 (『稿本』), 1863년 5월

196) 「工儀被仰上」(『御家記編輯材料』)

67년 12월 9일, 궁궐을 장악한 토막파는 왕정복고를 선언하고 쇼군직을 폐지시키는 왕정복고의 비밀 쿠데타를 성공시킨다. 신정부는, 전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에 대하여 「사관납지(辭官納地)」, 즉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다. 이는 도발이었다. 1868년 원단, 드디어 오사카에서 막부가 무력 반격을 결정하였다. 막부의 병사들 15,000명이 교토 후시미[伏見]와 도바[鳥羽]로 진격하였던 것이다. 토막파가 바라는 무력대결의 국면은 이렇게 막부가 시작하였다. 이를 무진전쟁이라고 부른다.

무진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쓰시마[對馬]는 관군에 포함되려고 노력하였으나 도움이 되는 병사들이 아니었기에 무시당하였다. 하지만 초슈의 기도다카요시[木戶孝允]의 주선으로 무진전쟁에서 관군에 병사를 내보낼 수 있었으며, 덕분에 막부가 항복하였을 때에는 승리자의 입장에 설 수 있었다. 하지만 쓰시마의 재정난은 심각하여 무기의 근대화를 도모하여 수입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무사들의 봉급을 지불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은 변함없었다.

신정부는 외교권을 장악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고, 3월 11일에는 對馬藩에게 모든 외국과의 교제를 조정에서 담당한다는 뜻을 명령하였다. 하지만 쓰시마에 대한 지원책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쓰시마의 외교권은 애매한 상태로 남겨둘 수 밖에 없었다. 즉,

이번에 왕정으로 일신되어 모든 외국과의 교제는 조정이 담당할 것이다. 조선은 옛날부터 왕래하던 나라이므로 더욱 위신을 세우고자 하는 뜻으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宗家에 양국 통교를 가역으로 명하며, 조선국과의 교제는 외국 사무보의 마음가짐으로 행하라고 명하니, 국위를 더욱 세울 수 있도록 진력하라. 특히 왕정일신의 시기이므로 해외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히 마음을 기울여 구폐를 척결하고 奉公하라.¹⁹⁷⁾

이는 일본 국가 기구의 면에서 볼 때 1861년 이래 막부가 추진하였던 조선과의 직접 외교를 장악하려는 의도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쓰시마번[對馬藩]의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행해온 원조 요구의 근거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었다. 조선과의 통교를 가역으로 유지하면서 구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원조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처음으로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구폐’라고 표현하고 ‘구폐’를 척결하라는 언급이 나온다. ‘구폐’의 내용이 무엇이며 ‘구폐척결’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윤 4월 6일, 쓰시마[對馬] 다이묘 요시아키라[宗義達]는 위 명령에 대한 봉답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부속서를 첨부하여 쓰시마 처리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소개해 보자.

一, ① 쓰시마가 조선국과 교제를 맺고 사신을 보내고 세건선을 보내고 조약을 맺게 된 것은 1440년대 초, 남북조 시대 서국(西國) 병난(兵亂)으로 선조들이 규슈의 영토를 잃고 대마도에 들어와 숨어있었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 원래 세건을 약속한 것은 실로 차래지식(嗟來之食-업신여기며 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전적으로 일시의 구급지책(救急之策)에 불과합니다. 그때부터 다년간에 걸쳐 영지의 회복을 꾀하였지만 불행하게도 성공하지 못하여 드디어 조선을 기대하지 않고는 국력이 지탱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잘못된 관례(謬例)가 생기어, 외국에 대하여 번신(藩臣)의 예(禮)를 취하여 수백 년간 굴욕을 조선으로부터 받았으니, 분개절치(憤慨切齒)합니다<중략>

② 그리하여 금번 조선국과의 구폐를 일신하라는 엄명을 받았으니, 사력을 다하여

197) 『朝鮮外交事務書』1(한국일본문제연구회, 성진문화사, 1971년) 69~70쪽, 이하 『事務書』로 약칭함

속히 그 실효를 세워 나라의 소망을 달성하도록 분발할 것입니다만, (중략) (對馬藩 경제 자립이) 조선에 손을 쓰는 제일의 순서라고 생각하오니, 비상한 파격적인 성단을 내려주셔서 선제의 예려(叡慮)를 세우고 금후 외국에게 경멸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후에는 쓰시마번은 사교(私交)의 폐해를 비롯하여 기타 유폐를 모두 개혁하여 (국가의) 위신을 빛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¹⁹⁸⁾

‘구폐’란 조선에 번신의 예를 취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선의 멸시를 받는 외교관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對馬藩 원조가 제1의 순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쓰시마가 규슈의 토지를 얻고자 하는 뜻은 이봉운동 이래 변함이 없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외교 관계를 ‘사교(私交)’라고 규정한 것도 훗날 동래부의 횡난을 받게 된다.

Ⅲ. 근대 전환기 외교 갈등과 기유약조 체제의 붕괴

‘구폐의 해결’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세견선의 폐지가 그 첫 열쇠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쓰시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세견선은 이득이 남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쓰시마는 ‘구폐의 개혁’을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였던 것일까. 1868년 12월 19일, 대수대차사 히구치 데츠시로가 부산에 도착했다. 그는 메이지 정부의 수립을 알리는 한편, 조선이 거부할 것이 뻔한 信印사용과 대마도주의 지위를 예조참판에 맞먹는 어려운 교섭¹⁹⁹⁾을 부여받았다. 대차사 樋口는 정월 25일 왕정복고의 사실을 왜관에 알리고 막부의 표찰을 걸어 내고 있다²⁰⁰⁾. 훈도는 1월 29일 대수대차사 서계 등본을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 서계의 내용은 메이지 정부의 성립과 사절(國使) 파견을 알린 것으로, 앞으로 조선이 준 圖書를 사용하지 않고 메이지 정부의 新印을 사용하겠다는 것과, 지금까지의 외교 관계가 私交였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거절(以私害公)하면 안 된다는 내용, 그리고 勅, 皇 등의 표현을 통해 대등한 적례관계를 파기하고 일본을 상국으로 모시라는 내용이었다²⁰¹⁾. 아울러 대마도주의 지위를 올려 예조참판과 동격으로 두려는 의도도 있었다. 조선 조정은 당황하였다. 2월 29일 대차사 서계에 관해 서계를 수리하지 말라는 정부의 지시가 내려왔으며, 아울러 이런 황당한 내용을 거르지 못하고 보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질책이 따랐다. 훈도는 조정의 명령에 따라서 서계를 수리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였다.²⁰²⁾ 이로 말미암아 쓰시마의 의도는 간단히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몇몇 사건이 있으므로 소개해 보자.

1. 메이지 정부의 도장(新印)을 사용한 선박의 도항과 동래부의 대응(1869. 3.~1869. 12.)

대수대차사가 도착한 후에도 세견선은 관례대로 왜관에 입항하였다. 1869년 3월 28일, 무

198) 『事務書』 73쪽 - 95쪽

199) 대수대차사 파견에 앞서의 직달을 보면 「지금의 서계부터는 그 나라가 주조해 준 圖書를 고치고 일본 조정이 만들어 주는 新印을 사용하여 그들이 藩臣으로 우리를 대해 온 오류를 바로잡아 舊來의 國辱을 씻고 오로지 국체와 국위를 세우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200) 『관수일기』(1월25일조) 王政御一新に付 從 朝廷被仰出之御旨に依 御國元之儀は御制札御掛改相成候、就夫爰元之儀も此節 御一新之段被及御告知候付、外向之驅引も有之不日御揭示之筈に候間、此迄之御制札取除置候様可被取計候、以上。 正月 25日 樋口鐵四郎

201) 이 내용에 관해서는 『조선외교사무서』, 그리고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の研究』(전게서)에 실려 있다. 일조각 번역본『근대일선관계의 연구』 176-180에 해당되는 사료 참고.

202) 田保橋潔은 훈도가 서계를 조정에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부하였다고 훈도의 비리로 몰고 있는 주의를 요한다.

지포에 표착하였다가 1869년 4월 2일 입항한 제주표민 영래선 후쿠에마루[福榮丸]와 차기선 요시에마루[吉榮丸]의 서계와 노인(路引)에 ‘좌근위소장’이라는 관직명과 일본 정부의 도장(新印)을 찍어 입항한 사태가 발생했다. 조선 정부가 지난 2월에 불허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쓰시마 번이 강행한 것이다. 동래부는 표류민만 받아들이고 서계와 노인을 퇴거시킴으로써 접대를 거부했다. 결국 1869년 4월 22일 들어온 비선에 옛 관직과 도장을 날인한 서계와 노인을 보내옴으로써 사건은 20일 만에 종결되었다. 동래부는 이 기간에도 규정대로 입항한 세견선과 표류민선에 대해 우호적으로 접대하였다. 이후 1869년 6월 19일 왜관에 입항한 2특 송사선부터 ‘대마주태수’라는 기존의 직함과 조선이 내려준 도서를 날인한 서계와 노인을 지참하며 평소의 모습으로 회귀하였다.²⁰³⁾

2. 판적봉환과 가역파면

1869년 6월 17일, 판적봉환이 이루어지며 9월 23일 소[宗]씨 세력의 가역 파면이 확정되었다. 쓰시마 번은 조선 정부로부터는 껄스름함과 불신을, 메이지 정부로부터는 가역 파면을 받아 한일 간의 가교 역할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여기에 경제적 궁핍이 더해져 최악의 상태를 맞게 되었다. 쓰시마 상인들과 무사들은 번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고 수뇌부의 실정을 질타했다. 이때 쓰시마는 왜관의 관수에게 명하여 동래부에 대해 우호를 강조하면서 쓰시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동래부는 원칙을 유지한 정책이 성공하였다고 자평하면서 일본의 변혁에 쓰시마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쓰시마번 수뇌부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외교권 접수 선언(가역파면)을 무효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1869년 10월에는 사이토 가헤[齊藤佳兵衛]가 번의 운명을 걸고 외교권 박탈에 항의하는 상신문은 올렸으며, 결국 태정관은 가역파면을 유예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3. 명칭 문제와 동래부의 대응(1869. 12.~1870. 4.)

1869년 11월 10일, 태정관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쓰시마(이즈하라) 번의 항의를 받아들였다. 이 지령에 따라 표류민 송환도 선례에 따르게 되었고, 세견선과 무역도 장려되어 왜관은 다시금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일본 외무성에 대한 쓰시마(이즈하라) 번의 승리였다. 관수는 이 사실을 혼도에게 알리고 조선이 준 도서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쓰시마(이즈하라) 번은 다시금 메이지 정부로부터 재신임을 받으며 대조선 외교·무역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동래부의 입장에서 기존 조약 유지와 조선이 일본의 정권 교체를 받아들이는 데 큰 장애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도서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었다.

하지만 쓰시마(이즈하라) 번주는 자신의 지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1869년 12월 2일, 1·2선(3선겸대)이 왜관에 입항할 때 노인과 서계의 도서는 조선이 준 것을 사용했지만, 기존의 ‘대마태수 평의달’이란 관직명을 ‘좌근위소장 대마태수 평조신의달’로 고쳐 기록하였다. 전통적인 교린관계 속에서 보면 도서문제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혼도는 이를 적퇴시키고 동래부사를 통해 의정부와 삼군부에 보고하였다.²⁰⁴⁾ 이때 혼도는 메이

203) 『동래부기록6』에 입항 선박이 자세히 보고되고 있다. 한편, 비선의 경우는 여전히 기존의 도서와 직함을 사용한 路引을 지참하고 있어서 上送하고 있다.

204) 관수왜가 말하기를 [폐방에는 이번이 많았으며, 작년 11월에는 明治로 개년하였고, 폐주 태수도 陞資하여 서계와 路人에 좌근위소장 평조신을 칭하였습니다]고 하므로, 일책하기를 서계의 문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례에 어긋나서 받아들이지 않고 개서할 것을 관수왜 및 정관왜에게 책유하고, 아울러 서계를 고쳐오도록 책유하였습니다. 도서는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 이번에 대마도주 평의달이 보낸 서계 중에 좌근위소장이라는 것은 혹 可援之例이겠습니다만, 평자 밑에 조신 2

지 정부 성립을 보고하며 좌근위소장 직위 사용은 허락하되 평조신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상신하였다. 동래부는 의연하게 규정에 합당한 선박에 한하여 접대를 허용하였다. 접대를 받지 못한 무사들의 탄원으로 말미암아 쓰시마(이즈하라) 번주는 1870년 4월 9일 비선을 통해 공작미연한청퇴 및 기사조 1·2·3선, 이정암선, 4-17선 등의 서계와 별폭을 전부 수정하여 보내며 4개월 만에 사태를 해결하였다. 앞서 새로운 도장을 사용해 벌어진 사태가 20일 만에 해결된 것과 비교하면 쓰시마 번의 저항이 완강했음을 알 수 있다.

1870년 8월 7일에는 의정부 명으로 예조의 지시가 내려와 좌근위소장을 서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공식 관직명으로 사용된다. 이리하여 조선 정부는 메이지 정부 성립을 공식 승인하였고, 한일 간의 갈등은 쓰시마(이즈하라) 번을 매개로 수습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는 외교 일원화를 추구하는 메이지 정부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쓰시마(이즈하라) 번은 일본 외무성에 보고하는 내용과 달리 세건선 무역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일본 외무성도 쓰시마가 표면적으로 세건선 무역을 ‘황국의 치욕’이라 비판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이 되는 이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파악하고 있었다. 외무대승 하나부사는,

쓰시마 무사들은 병력이 준비되어야 변화를 줄 수 있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정부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 그대로 무역의 이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만을 도모하고 있다.²⁰⁵⁾

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외무성은 1870년 윤10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관수를 해임했다. 관수는 윤10월 5일, 일기에서 자신이 해임된 사실을 적고 앞으로의 지침을 왜관원들에게 내린다. 이 지침에서도 8송사를 보내는 것이 양국 통교의 근원이며 옛 규정을 준수하고 쓸데없이 가볍게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은 주목된다.²⁰⁶⁾

4. 관수 파면 이후의 왜관

일본 정부는 외무성을 통한 외교 창구 일원화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1870년 11월 3일, 예조에 보내는 서한과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보내는 일본 외무대승의 서계를 가지고 요시오카, 모리야마, 히로쓰 히로노부 등의 외무성 관리들이 파견되었다. 왜관은 별집을 쭉셔놓은 듯 큰 혼란에 빠졌다. 왜관 상인들은 조선 정부와 일본 외무성이 직접 교섭하게 되면 쓰시마 번의 무역권은 박탈당할 것이라며 불안해했다. 1871년 1월, 훈도는 쓰시마(이즈하라) 번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모든 일은 쓰시마(이즈하라) 번을 통해 응할 것이며 이외의 인사들과는 회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기존의 외교관계를 수호하자는 뜻이었으며, 세건선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왜관 관리들과 상인들은 평정을 되찾았다. 훈도도 더욱 효과적으로 왜관 상인들을 통제할 수 있었으며 표류민 송환 등 외교 문제도 원활히 진행되었다. 1871년 3월 동래부는 일본 외무성 관리가 정식으로 왜관에 온 전례가 없어 면접할 수 없음을 알리는 서한을 발송했다.

동래부가 쓰시마(이즈하라) 번을 통한 외교·무역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일본 외무성에 보낸 가운데 1871년 7월 일본에서는 폐번치현이 이루어졌다. 1871년 8월, 외무대승 소 요시아키라는 조선에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였고, 1872년 1월, 외무대승 소 요시아키라의 서한을 지참한

자는 일찍이 없었던 대위격이므로 임역들에게 명하여 엄히 책유하도록 하여 속히 개수 정납하도록 하였습니다. 關邊情을 (보고하기 위해) 따로 (서계의) 등본을 의정부 삼군부에 상송합니다.

205) 「尋交商量澁滯之緣由略」(『조선외교사문서6』 pp182쪽)

206) 『館守每日記』 1870년 윤10월 5일

一、御送使之儀は、兩國御通交之根元に有之、……旧章に原き、猥に輕便之處置有之間敷候。

차사(差使)가 신미1특송사선, 제주표민영래선, 비선 등을 대동하고 화륜선으로 왜관에 입항하였다.²⁰⁷⁾ 이들은 대수대차사 히구치를 귀국시켰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7인 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선과의 회담에 임하고 대마도 사족을 배제하였다. 이는 대관소에 대한 강한 불신의 표현이었고 대마도 상인들과 조선의 임역이 연대하지 못하려는 의도였다. 差使는 관례대로 접대를 받았으며, 6차에 걸친 회담 끝에 외무관원이 폐번치현과 청일수호조규의 체결을 알리는 종씨의 서한을 제출하자, 3월20일, 훈도와 동래부는 이를 받아들여 예조에 보고하고 있다²⁰⁸⁾. 막부의 멸망과 메이지 정부의 성립은 알고 있었지만, 청일수호조규의 체결 소식과 폐번치현으로 대마도주가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것은 중대한 정보였을 것이고 동래부 전체에서 논의하는 바가 되었다.

이때 왜관에서 난출(闖出,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조선 정부의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요청하였다. 차사의 동래부사 면접 요구였다. 대구에서 돌아온 훈도는 과감하게 난출을 허락하였다. 관례대로 외교를 지속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통사 최재수가 상인들을 대표하여 왜관에 들어가 1대관 카이즈[海津]를 비롯한 대관소 상인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쓰시마의 상인들은 기존 무역권을 내세워 동래부사의 차사 면접을 찬성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무역이며, 기존의 거래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 대관소 상인들을 푸대접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에 따라 동래부사는 대관소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사 면접을 포기하고 외무관리들의 귀국을 종용하였다. 그리고 동래부사와 훈도가 대죄를 청함으로 난출은 실패로 돌아가고 교섭은 중지되었다.

한편, 왜관에서 난출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일본 외무성은 초량공관 사무를 외무성 소관으로 결정하고, 세건선 폐지에 따른 비용을 쓰시마에 지급하여 왜관을 정리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명령이 떨어지자 왜관 책임자였던 요시오카는 왜관을 정리하기로 하고 1872년 6월 15일 귀국하였다. 외무성 관리들과 차사가 귀국하자 왜관에는 쓰시마 상인들만 남게 되었다. 동래부사는 난출을 단행한 왜관 관수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에 대한 접대를 3개월간 중지하고, 1대관으로 하여금 관수를 대신하도록 조치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였다. 대관소 상인들도 무역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의 주장에 동조하고 관수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5. 하나부사의 도한과 기유약조 체제 붕괴

일본 외무성은 왜관 대관소 상인들이 관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세건선 무역(조공무역)을 계속하자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부사를 파견하였다. 1872년 9월, 하나부사는 마지막 세건선인 신미조 2특송선에 표류민을 탑승시켜 화륜선 2척으로 왜관에 입항하였다. 그는 세건선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 도착 즉시 대관소 상인들을 모두 문책하여 귀국시켜 재판에 회

207) 1872년 화륜선 입항과정에 대해서는 줄고 「1872년 일본 화륜선의 왜관 입항」(『동북아역사논총49』, 2015년 9월)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208) 이 날이 6차 회담이다. 이 과정은 「應接書類」(부산 시민도서관 소장, 한국학전자도서관 제공)에 자세히 있다. 대화의 중심은 館守 후카미가 차사 사가라를 내세우고 통사 히로세와 우라세를 동석시킨 형태로 진행되었다. 요시오카, 모리야마, 히로츠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쓰시마 출신 외무 관료들을 전면에 내세워 회담을 진행시키고 있다. 당시 최고 책임자는 요시오카[吉岡弘毅]였으므로 그의 책임하에 기록되었다고 보인다. 1월18일부터 5월12일까지의 교섭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田保橋潔은 일관되게 동래부의 접대가 무례하였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으나 동래부의 접대는 규정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접대에 흠이 없어야 상대방의 무례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부했다. 그가 대관소를 폐지를 결정하자 쓰시마 상인들은 조선이 왜관을 폐쇄할 것이라고 항의하였다.

동래부는 사전 교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하나부사에 상당한 불쾌함과 당혹감을 보였다. 그러나 폐번치현으로 쓰시마 번주가 물러난 것과 청일수호조규가 맺어진 사실을 전하는 서한의 등본은 받아들인 상태였다. 동래부는 이제 일방적인 약조 파기를 문제 삼아 왜관을 폐쇄하거나 새로운 조약을 맺기 위해 외무성 관원을 접촉해야 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왜관을 폐쇄할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으며, 동래부도 중앙 정부의 명령 없이 왜관을 폐쇄할 수는 없었다. 결국 현재 상황을 중앙 정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에도 바쿠 후 멸망과 폐번치현으로 쓰시마 번이 소멸하며 사실상 기유약조는 무력화되었다. 여기에 하나부사의 대관소 폐지는 기유약조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제 기유약조 붕괴 이후 왜관의 모습과 갈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IV. 기유약조 붕괴 이후의 왜관과 외교 갈등

왜관에서 대관소가 폐지되고, 세건선이 들어오지 않고 되었으며, 표류민의 송환에도 서계가 첨부되지 않게 되면서, 왜관의 중요한 '접대'의 장소로서의 역할이 상실되었다. 기유약조 붕괴 이후의 왜관에 대해 살펴보자.

1. 기유약조 붕괴 이후의 왜관

1) 세건선 폐지와 출입국 관리

대관소가 철수한 이후 출입국 관리는 변함이 없다. 즉, 왜선이 수종(水宗)을 넘어오는 것을 발견한 황령산 봉군이 부산진과 동래부에 알리면, 두모포만호가 전선을 이끌고 나아가 인솔하여 왜관에 입항시키고, 훈도는 이들을 문정하고 路引을 예조에 上送하면서 보고한다. 이들이 떠날 때에는 부산진에서 路文을 발급하여 출발시키며 이들이 떠난 사실은 부산진과 구봉 봉군이 확인하여 보고하는 시스템은 더욱 엄정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 그것은 大船이 飛船의 路引을 지참하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1872년 11월9일, 옥포에 표류하였던 大船이 비선의 路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시초이다. 그 후 12월15(양력1월13)일 대중소선을 모두 飛船 路引으로 도항하기로 합의²⁰⁹⁾를 보았다. 그래서인가 그 이후 동래부 기록에 路引을 퇴각 시킨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동래부가 이를 합의해 준 이유는 아마도 표류민 송환과 무역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큰 변화라 말할 수 있다. 즉 기유약조의 선척 규정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한편, 왜관 앞 船艙이 거울에 파손되어 왜관의 奧義制가 동래부에 수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배소통사 박기종이 이는 임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전달하겠다고만 하고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3월11(양력4.7)일 奧義制가 왜관의 비용으로 즉 일본 비용으로 수리를 하겠다고 주장하자 3월23(양력4.19)일 동래부에서 선창 修復을 명받았다고 말하고 수리를 해 주고 있다. 일본이 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9) 모리야마의 보고. (1월13일)

한편 전쟁 가능성의 정보는 쉬지 않고 동래부에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징병령(73.1월)이 포고되었고 이는 조선이나 타이완을 상대로 전쟁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2월17, 18(양력3.15-16)일 東萊大調練이라는 대규모의 육군 훈련이 시행된다. 4월 16-17(양력5.12-13)일에는 수군 대훈련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에 대비하여 조선의 군대가 만만하지 않음을 과시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 8월에는 초량객사를 수리하여 전패를 안치할 때에 왜관의 외무 관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줌으로서 일본과의 문호는 열려있음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2) 표류민 송환의 변화

기존의 기유약조 체제에 따르면 표류민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표류민을 구호하고 지역 영주가 배를 수리하여 대마주로 보내는데 표류민에 대한 구호는 무상으로 행해졌다. 대마주에서는 이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내었는데, 대마도주가 영래차왜를 임명하여 서계를 가지고 오면 조선은 이들을 극진히 접대하고, 향접위관을 임명하여 하선다례, 하선연, 예단다례, 상선연까지 베풀었다. 표민이 파선하였을 경우는 배를 빌려서 왔는데(차기선) 『동래부사례』를 보면, 駕船則價米라 하여 대선40석, 소선30석을 지급하고 있다²¹⁰⁾.

그런데 1872년 9월 하나부사가 영암표민 9명과 제주표민 4명 계 13명의 표류민을 이끌고 오면서부터는 표민영래 서계를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조선에서는 이를 접대할 명분과 조항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훈도는

표민영래시에는 (영래)차왜가 서계를 가지고 오는 데, 이 서계를 呈納하지 않는 것은 약조에 심히 어긋난 일입니다. 차왜가 없고 서계가 없으니, 연향 예단 잡물을 마련한다는 조항도 논할 바가 없어졌습니다.²¹¹⁾

라고 보고하였다. 표류민 송환에 따른 연향과 예단 마련, 그리고 잡물 지급 조항이 무의미하게 되었음을 훈도가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동래부는 서계를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외무성은 정부의 지시라고 거절하고 결국 일본은 대가없는 표류민 송환을 지속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예로 1873년에는 표류민 송환이 6차례에 걸쳐 42명과 시체3구가 송환되었으며, 표류민 선도 4척이나 수리가 되어서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류민 송환에 대한 답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기유약조의 표류민 송환 규정이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수시로 중앙정부 특히 예조로 보고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예조에서는 표류민을 송환하면서 서계가 오지 않고 있음과 문정 내용을 계속 보고받고 있었다.

3) 무역의 변화

증기선 철수이후, 9월28일 신미조 2특송사 2호선이 공작미와 공목을 싣고 떠나가고 이후로는 세견선은 들어오지 않는다. 또한 대관소가 철수되어 공무역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다만 비선만이 꾸준히 들락날락 하게 된다. 무역은 비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비선이 작으므로 大、中船、小船을 모두 비선으로 간주하여 출입증(路引)이 발급되었다.

그렇다고 공무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 듯하다. 1872년 말에는 임신조 8송사

210) 외무성 보고서에서는 駕船料로 조선정부가 30俵, 훈도가 12俵를 따로 제공하였다고 기록하였다.

211) 『동래부계록8』 9월 20일자. 漂民領來也例有差倭齋來書契 而不爲呈納者有違約條事甚乘當是白乎矣 既無差倭又無書契則所贈宴禮單雜物磨鍊一款 自當勿論是白遣

가 진상하지 않았으므로 먼저 준(선위입급) 공목과 공작미를 제외한 공목 557동 4필 17척과 공작미 11333석5두가 남았었다.(『동래부계록』12월30) 그런데 1873년 말에는 이 공목이 114동40필17척, 공작미가 4813석5두가 남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공무역으로 공목이 442동14필이 소모되었고, 공작미가 6512석이 소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마주가 조선에 주어야 할 무역품들을 접수하고 있다. 이는 대마주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무기 수입 시도이다. 정한론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절에 무기를 사려는 조선이나 조선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일본의 태도는 매우 흥미롭다.

조선으로서는 일본으로부터 무기 구입을 의뢰함으로 72년 대마주 상인에게 무기를 구입하였던 전례를 통해 일본의 의중을 떠 보고자 하였을 터이고, 일본은 사절 파견과는 별개로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일본의 무력적 우위를 알리고 또한 우호를 과시하고자 하였을 것이라 추론된다.

1874년에 들어와서는 소통사 최재수가 20만냥을 왜관에 빌려주려는 계획이 좌절된다. 이는 공무역이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된다²¹²⁾.

2. 고종의 친정과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고종은 일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여 1873년 9월 청에서 돌아온 사절단에게 청에 있는 일본인들의 정황과 복색을 물었으며, 1873년 11월에도 일본의 정세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1874년 1월에는 경상감사를 김세호에서 유치선으로, 동래부사를 정현덕에서 박제관으로 교체하였다. 아울러 1874년 4월 7일에는 박정양을 영남좌도 암행어사로 임명하며 동래부 왜관의 동태와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특지를 내렸다. 이러한 인사는 고종이 일본의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여준다.

1874년 6월 22일, 암행어사 일행인 교리 유진학과 우라세 모스케의 대화와 1874년 8월 15일 남효원과 우라세 모스케의 대화를 보면 새로운 외교 관계가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는 남효원과 우라세 모스케의 1874년 8월 15일 대화이다.

남효원 : 제가 일찍이 도성에서 들은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당신의 말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듣기로는 귀국이 아무 이유도 없이 돌연히 우리에게 항칙을 받들라고 강요하였기에 우리도 귀국의 행함이 불량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듣고 보니 왕정복고의 연유가 명확하니 불량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갑국(甲國)과 을국(乙國)이 …해서 우리가 거절한 것도 온당한 것입니다. (중략)

남효원 : 금후 우리나라가 준 도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까.

우라세 모스케 : 하사받은 은인(銀印)을 사용할 것입니다.

남효원 : 우리가 준 도서는 우리의 신임을 의미하므로 우리가 현재 관직·성명을 주조하여 주면 어떨까요.

우라세 모스케 : 이미 천황이 하사한 인장이 있는데 어찌 따로 도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왕래하는 선박에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위 대화를 보면 우라세 모스케가 외무성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인(新印)의 사용이 허락된다면 세건선의 왕래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212) 興義制의 보고 : 이는 세건선 물품을 빌려주어서 종씨가 진상하였던 물품을 구입하려는 속셈으로, 상인들을 장악하려는 의도라 봄.

다. 그러나 왕래하는 선박(당시로서는 비선)의 노인에 도서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세건선이 중지된 것은 메이지 정부의 강력한 의지였음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의 관계는 남효원과 대화한 이후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특히 도서 문제가 매우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계에는 일본 정부의 도장을 찍고 노인에는 조선이 준 도서를 찍어 조회하기에 편하게 하자고 합의되었다. 쓰시마가 조공 혹은 감함무역의 상징이라고 선전하며 ‘일본의 치욕’이라고 도서(印) 문제를 크게 만들었지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1874년 8월 28일, 동래부 안핵사 대솔군관인 대범곡이 왜관을 방문하였다(전 통사 임삼이(林三伊)를 통해 암행어사 수행원 이죽헌(李竹軒), 이덕향(李德鄉), 대범곡(大凡谷)이 방문한 것으로 이덕향은 암행어사의 백부로 참모임). 이때 상황은 《외교사무서》9에 잘 나타나 있다.

1874년 9월 3일, 신임 훈도 현석운은 왜관의 모리야마 시게루와 회담하였다. 이날 모리야마 시게루는 양국 국교 재개의 기초안 3개조를 제시하였다.

모리야마 시게루 : 일본이 ‘황’을 칭하고 ‘척’을 칭하는 것은 세계가 인정한 것으로 서계에 이를 기재하는 것은 아무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왜 이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가.

훈도 : (웃으며) 조정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는가.

모리야마 시게루 : 우리 외무경은 참의를 겸하므로 귀국의 좌우의정에 비견된다. 그러나 외교를 전담하므로 귀국 예조판서와 등대한다. 또 대승은 참판에 비견된다.

훈도 : 외무경과 판서는 동격이다. 그러나 대승은 4위이다. 우리 참판은 정2위이다.

모리야마 시게루 : 귀국 국왕이 우리나라에 오면 몇 품인가. 옛날 쇼군이 종2위에서 종1위였고 그와 등대하였음은 어찌된 일인가. 우리 외무경은 정4위이나 청국 공친왕, 이홍장 등과 필적의 예를 취한다. 귀국은 공친왕, 이홍장 등과 필적할 사람이 누인가. 우리 관위는 훈공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귀국은 청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

훈도 : (얼굴을 붉히며 말을 하지 않음)

한일간의 갈등의 원인이 ‘황’과 ‘척’을 내세웠던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료에서도 적례(대등지례)를 기반으로 유지되었던 기존의 한일관계가 갈등을 초래한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모리야마 시게루의 폭언에도 회담은 계속되었으며 절목이 작성되었다. 그 내용은 1872년 3월에 도착한 서계를 수리하거나, 새로운 서계를 보내오면 받기로 하거나, 조선에서 통신사나 도해역관을 도쿄로 파견하여 외무성과 직접 절목을 협의하는 것이었다. 훈도와 동래부사는 이를 정부에 질의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의정과 태정대신, 예조판서와 외무경, 예조참의(동래부사)와 외무대승의 등대가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양국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의지가 보인다.

1874년 9월 19일, 현석운과 모리야마 시게루의 회담에 대한 의정부의 회하(回下)가 내려졌다. 두 번째 안 즉, 일본이 서계를 고쳐오면 이를 받겠다는 취지였다. 동래부 안핵사 대솔군관 대범곡은 1874년 9월 24일 왜관을 방문하여 금위대장 조영하의 친서를 모리야마 시게루에게 전달하였다. 그 역시 1874년 9월 25일 답서를 보냈으며, 이에 따라 훈도 현석운은 1874년 9월 28일 모리야마 시게루와 회담하였고 새로운 조약 체결의 실마리가 열렸다. 다시 왜관에 훈도가 빈번하게 입관하게 되었다.

1874년 10월 2일, 신임 동래부사 박제관은 별차 현재순을 보내어 위의 사실을 확인하는 서한을 모리야마 시게루에게 보냄으로써 동래부사와 모리야마 시게루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1874년은 고종의 친정으로 왜관에서 새로운 조약이 맺어지기 위한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해라고 할 수 있다.

3. 전쟁의 위기

1875년 2월 24일, 이사관으로 승진한 모리야마 시게루는 부산에 도착하여 작년의 합의에 따라 외무경[데라지마 무넨노리(寺島宗則)]과 외무대승(소 요시아키라)의 서계를 지참하고 동래부 이사관 영접을 요구하였다. 조선정부는 이사관 영접은 거행하되 서계는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모리야마 시게루는 연향대청 정문으로 통행하고 대례복을 착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서계 수정 또한 불가능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고는 서계를 거부한 것에 대해 조선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조선이 전쟁을 도발한 것과 같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면서 1875년 3월 30일 일본 정부에 히로쓰 히로노부와 오쿠 기세이를 송환하고 군함을 파견하여 조선을 위협해야 한다고 상신하였다. 그는 조선이 양보하고 있을 때 더욱 압박을 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일본에 유리한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았다.

1875년 4월 9일, 조선 정부는 연향을 베푸는 것이 특별한 배려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사관의 대례복 착용, 연향대청 정문 출입, 도서 개편 등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향은 구례에 따를 것을 지시하였다. 1875년 5월 9일, 훈도가 구례에 따라 연향을 선행할 것임을 통고하자 5월 18일 회답은 결렬되고 말았다. 1875년 5월 21일 태풍의 핵 속에 있었던 동래부사 황정연은 대죄하며 사직을 원하고 중앙 정부에 지휘를 요청하였다.

1875년 6월 9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유원, 김병학, 홍순목, 박규수, 김병국 등 34명의 중신들이 모여 대일관계 회복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때 다수가 일본과 전쟁을 피하자는 의견에 뜻을 모았으나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허접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렸다. 이에 따라서 조선 정부는 1875년 6월 24일 동래부에 일본을 달랠 것을 지시하고, 김계운을 당상역관으로 내려 보내 동래부의 회답 자율권을 축소시켰다. 이는 조선이 전쟁을 원치 않으며 일본에 인내하겠다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요구하는 바는 허용하지 않았다. 1875년 7월 17일, 부산에 도착한 김계운은 7월 19일에 훈도(현석운)와 별차(현제순)를 이끌고 왜관에 들어갔으나 모리야마 시게루는 회답을 거부하고 귀국하였다. 그는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1875년 8월 6일, 고종은 선후책을 논의하게 하였다. 이 와중에 동래부사 황정연은 9월 1일 대죄사직하였다. 조선 정부와 메이지 정부 사이에 긴 동래부의 어려움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후임으로 홍우창이 임명되었다. 동래부사 정현덕 이래 박제관-황정연-홍우창 등 잦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그만큼 대일외교가 어려웠으며 정치적 대립이 심한 사안이었음을 가늠케 한다.

1875년 9월 19일, 월미도 앞바다에서 운요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운요호 사건은 조선에 반일감정에 불을 지폈으며, 일본에서도 정한론을 확산시켰다. 모리야마 시게루의 보고를 받은 메이지 정부는 조선과의 전쟁을 기정사실화 하고 준비하였다. 1875년 10월 3일, 카스카[春日]함이 모리야마 시게루를 태우고 부산에 입항하였다. 10월 27일에는 해군 소장 나카무다 쿠라노스케[中牟田倉之助]가 모순[孟春]함을 이끌고 부산에 입항했다. 이때 정박해있던 카스카함은 소장기에 대해 예포 13발을 발사하였고, 모순함도 답례포를 발사하였다. 이는 조선 국법을 무시하는 처사였고 무력 과시의 도를 넘어 전쟁 도발이었다.

1875년 11월 25일, 히로쓰 히로노부가 이사관으로 승진하여 전권변리대신의 선보사(先報使)로서 왜관에 파견되어 전권변리대신의 파견을 알리는 구진서를 전달하였다. 훈도는 일본의 국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의 요구로 받아들였다. 1875년 12월

13일, 무장한 일본 해병대 58명이 설문 밖으로 나와 초량에서 조선 수비병과 충돌하였다. 분명한 도발행위였다. 이 사건으로 중경상자가 12명이 발생했다. 경상도 관찰사는 동래부사 및 각 진장과 훈도, 별차 등에게 엄감(嚴勘)을 치계(馳啓)하였다. 전쟁이나 평화나 조선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일본 외무성은 일련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동래부가 왜관을 폐쇄하지 않고 우호를 모색하는 것에 놀라워했다. 조선이 전쟁에 말려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왜관 직원들의 철수를 준비하였던 상황이었다. 조선이 먼저 전단을 열어 주기를 바랐던 강경파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교적 해법을 우선한 온건파들이 점차 힘을 얻어갔다. 조선은 군사적 열세를 자각하고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사실 메이지 정부는 당시 전쟁을 수행하기에 여러모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일본 국내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으며 특히 ‘메이지 6년의 정변’ 이후 사쓰마 지역의 정서는 무시할 수 없었다. 당시 일본열도는 내전에 가까운 분열 상태였다. 이러한 내부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메이지 정부는 조선이 일본에 적대적이며 일본을 모욕하고 있다고 선전하였고, 일본에서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도 조선침략론이 대세로 굳어졌다. 내부 분열을 외침으로 극복하자라는 견해가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구로다 기요다카(黒田清隆)가 전권변리대신으로 강화도에 파견되었다.

V. 조일수호조규의 체결과 화해

1876년, 구로다 사절이 도한하였고, 강화부는 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이 전부 소개(疏開)되고 어영대장 신헌과 구로다와의 첫 회담이 2월 11일 열렸다. 서로 전쟁을 각오한 상태에서의 회담이었다. 조선 조정은 ‘먼저 공격하지는 말 것(不先犯)’을 칙명하였다. 구로다는 124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화부에 입성하였고, 신헌은 300여명의 군사를 대동하였다. 1차 회담을 시작하여 사흘 만인 2월 14일에 합의를 이루었고, 26일에는 조일수호조규를 조인하고, 2월 27일에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꼭 보름 만에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선 정부는 일본과의 우호를 바라고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서로간의 명분이 필요하였다. 조선정부는 조일수호조규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구로다 역시 사태가 심각해져 전쟁으로 발전할 것을 두려워하며 조선이 요구한 수정 제의를 쉽게 수용하였다. 회담은 매우 우호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일수호조규에서 중시된 것은 대등한 외교 관계와 우호에 대한 약속이었을 뿐 구체적인 것은 후속 조약으로 미루었다. 따라서 강화도 조약은 중수구교(重修舊交)를 이룬 것이었고, 최악의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당시로서는 축하할 업적이었다.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을 갈등의 해소로 파악할 때, 어떠한 갈등이 해소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서계접수 거부론을 대표한 흥선대원군의 「대원위록기」²¹³⁾과 서계접수 불가피론을 주장한 박규수의 「답상대원군서」²¹⁴⁾에서 나타나는 대등지례의 성립 여부였을 것이다. 이는 전문과 제1관, 제2관에서 명확하게 해소되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는 조선이 일본에 적대적이며 경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일본의 오해였다. 이는 하나부사의 복명보고²¹⁵⁾나 요시오카의 건백서²¹⁶⁾에 의해 사실이 아니라 인식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구로다 변리대신이 강화도에 도착하였을 때 「不先犯」의 칙령이 지켜지고, 건물을 빌려주고 땀감을 아낌

213) 『龍湖閑錄』 21책, 전계 『심행일기』부록.

214) 『臞齋集』 제11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3, 전계 『심행일기』부록.

215)

216) 박은영 「요시오카 코키의 정한론 비판에 대한 일고찰」(『일본사상21』, 2011)

없이 공급하여 예로 대하였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었다. 실제로 구로다 사절은 귀국에 임하여 매우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셋째로는 조선이 직접외교를 꺼려한 이유 중에 일본의 사절이 오게 되면, 통신사가 에도에 왕래할 때에 준하는 접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경제적 및 보안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구로다 사절은 땀값과 방세, 그리고 샅꾼 비용까지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새로운 외교 방법이라고 우려를 해소하였다. 즉, 「피차 사행에 예폐를 모두 없애고, 방세를 지급하여 체류하고 식대를 지불하여 밥을 먹는다」고 경제적 우려를 해소하였다. 넷째, 변리대신이 목적으로 하는 서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정치적으로 훌륭하게 넘어간 부분도 주목하고 싶다. 만일 서계의 형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였다면 또 논의가 공전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신헌은 1867년의 신문을 언급함으로써 구로다의 당황을 유발하였고 우호를 결정한 이상 따지지 말자고 해결하고 있다. 운요호 사건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하여 미리 방문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영종도 진대를 노략한 것을 따져서 불문에 부치자고 해결하고 있다.

VI. 맺음말

본 발표는 최근의 연구에 용기를 얻고, 조일수호조규를 근대 전환기의 갈등을 해소한 조약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해 보았다. 이러한 조망은 전근대와 근대 사이의 한일관계사의 단절을 극복하여 연속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메이지 초기의 외교를 둘러싼 갈등의 시작은 조선후기의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폐단’이라고 규정한 메이지 정부의 쓰시마번과, 과거의 외교 관계를 ‘성신지교’라고 믿어 온 조선 동래부의 충돌로 시작되었고, 폐번치현 후, 외무성에 의한 일방적인 기유약조의 폐기로 더욱 갈등이 깊어졌으며, 일본이 힘에 의거하여 새로운 조약을 맺고자 시도하게 되면서 갈등은 절정에 도달한다.

그러나 일본이 꾸준히 표류민을 송환하고, 우호를 원한다는 외교적 노력을 하였고, 오랜 기간에 걸친 대화로 말미암아 서로 이해하지 못할 대상은 아니라는 인식이 또한 존재하였다. 조일수호조규의 체결은 이러한 오랜 대화의 결실이었다. 외교 활동은 중요한 것과 합의가 가능한 것들을 먼저 합의하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싸우지 않고 뒤로 넘기는 것이다. 강화도 조약에서 중요시 된 것은 대등한 외교 관계와 우호에 대한 약속이었고, 과거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었다. 이후 맺어지는 일련의 조약을 통해 근대적 외교 관계 즉 ‘조일수호조규체제’가 점차 성립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다시금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될은 물론이며 이를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실패를 역사적 교훈으로 바꾸게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끝>

<참고문헌>

- 김흥수 「강화도사건과 강화도조약」(『한일역사쟁점논집』동북아역사재단, 내부자료, 2010)
 이태진 「1876년 강화도조약의 명암」(『한국사시민강좌』36, 일조각, 2005)
 윤소영 「조일수호조규의 역사적 위치」(『한일관계사연구』18, 2003)
 현명철 「19세기 후반의 대마주와 한일관계」(국학자료원, 2003)
 현명철 「대마번 소멸과정과 한일관계사」(동북아역사논총 41호, 2013)
 田保橋潔 『근대일선관계의 연구』(김종학 역, 일조각, 1940년저, 2013년 역)
 박한민 『조일수호조규체제의 성립과 운영 연구(1876-1894)』(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년)

문화재 반환 문제로 본 한일 간 ‘화해’의 가능성

류미나(국민대학교)

들어가며

한일 간 문화재 반환 문제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한반도 출토 유물에 대한 일본으로의 유출의 정당성과 강제성에 따라 논의 자체가 달라지는 주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과 연결돼 논의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일 간 문화재 반환 문제는 본격적인 정부 간 논의가 시작된 1951년부터 지금까지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발표자는 이러한 대립이 비단 한일 간 문화재 반환 문제에만 국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 그 자체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마치기도 전에 냉전질서의 굴레 속에서 생산된 ‘강요당한 화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강요된 화해’는 한일 양국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해 수많은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²¹⁷⁾ 국교를 수립한 지 50년도 훨씬 지난 지금에까지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 관계의 기반인 ‘한일협정’과 한일회담의 논의들은 오히려 서로를 비판하는 무기로 활용됐다.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한일 양국의 충돌, 즉,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식의 일본정부와 이를 반박하는 한국정부의 주장이 그것이다.

양국 정부 간의 대립은 선동적 언론이 개입되면 서로에 대한 비판이 가속화된다. 최근에도 양국 관계를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다. 문화재 반환 문제를 특화하여 언급하자면, 2012년에 발생한 ‘대마도 불상 도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사법부의 처리와 ‘장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일본 사회와의 대립은 앞을 예견할 수 없이 오리무중이다.

발표자는 한일 간 문화재 반환 문제를 둘러싼 이와 같은 충돌의 모습만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고 언론이 이를 선동적으로 보도하고, 인터넷상에서 무절제한 양국의 상호 비판의 모습에 의문을 가지며, 이러한 현상의 기원을 파악하고 양국 내 상호인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의 현실이 어떠한 기반 위에서 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재고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여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양국의 자발적 화해의 가능성은 없는지, 혹은 이러한 ‘화해’를 위해 양국의 인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217) 요시자와 후미토시, 「한국에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의 전개」, 『한중인문학연구』 제6집, 2001; 박진희, 「한일 양국의 한일협정 반대운동과 논리」, 『기억과 전망』 18호, 2007; 유지아, 「한국과 일본에서의 한일 회담 반대운동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한일관계사연구』 Vol no 53, 2016.

1. 한일 간 문화재 반환 문제의 역사적 고찰

1)한일회담 준비 작업과 진단학회

해방 직후 일본으로의 유출 문화재를 찾기 시작한 것은 ‘진단학회’였다.

진단학회는 1945년 10월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일본으로 유출된 도서와 보물 목록(서적 212종, 미술품 및 골동품 837종)을 만들었고, 동년 12월, 미군정청에 제출했다. 이 목록은 1946년, 맥아더 사령부로 제출됐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없다.

1951년 10월, 한국 정부는 ‘구 왕실재산목록에 관한 조사’를 단행했고, 동월 24일, ‘구왕실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무부장관에게 일본이 침략했을 때 구 왕실의 재산을 약탈했다는 보고서를 냈다.²¹⁸⁾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반환 요구는 역시 한일회담을 진행하면서 이뤄졌기 때문에 특별한 조사 성과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한일회담을 염두에 둔 사전 조사의 성격임을 생각할 때, 이러한 조사 작업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 작업에 정부 측 활동만이 아닌, 재일조선인들이 협력한 사실 역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일회담이 정식으로 개최되기 전인 1950년, 한국 측은 장래의 대일배상청구를 위한 기구를 조직하고, 일본과의 협상 근거가 될 법적 논리를 검토했다. 주일대표부는 정무과 소속의 모든 직원과 ‘재동포 사회(재일 동포사회-발표자)’에서 대표 권위자 4명으로 구성된 ‘대일강화에 대처하는 준비조사위원회(가칭-자료 그대로, 이하 준비조사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이 조직에서 조사한 결과를 소책자로 만들어 한국에 보내 앞으로 있을 일본과의 대일청구권 협상을 준비하면서 청구할 목록을 소책자로 만들었다.²¹⁹⁾

상기의 소책자에는 목록 표와 더불어 대일 배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한일합방은 무효이지만, 국제질서의 유지 또는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으로 무효를 주장하지 않을 부분도 있고 이에 따른 절충론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일강화조약 체결 시의 한국은 조인 당사국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혀 있

218)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I』, 동북아역사재단, 2008. 5, 60쪽

219) 한국 외교문서 723.1JA, 자 1950, 0009~0058 :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 (1950.10)

다. 셋째, 재일재산권에서 한국의 지위는 패전국도 연합국도 아닌 중립국의 지위와 같으며 넷째, 재산권 문제는 이러한 특수국 지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 측은 한일회담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51년 9월,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정에 공헌이 있었던 법률가 유진오박사를 일본에 파견해 협상에 앞선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²²⁰⁾ 보고서의 내용 중 문화재 반환 협상과 관련해서 정리하면, 당시 미국 및 극동이사회(극동위원회-발표자)²²¹⁾의 대일방침, 즉,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취한 모든 약탈재산을 즉시 반환하라는 규정이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었던 한국에 적용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지만,²²²⁾ 그는 한일 간의 문제를 꼭 이 규정에 맞출 필요도 없고, 오히려 청일전쟁까지 소급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약탈재산의 반환을 청일전쟁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진오박사의 출장이 종료된 후 1951년 10월, 한국은 ‘구 왕실재산목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동월 24일, ‘구 왕실재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무부장관에게 일본이 침략했을 때 구 왕실의 재산을 약탈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활용된 것은 한일회담이 시작된 이후부터이다. 이러한 준비 작업으로 개최된 한일회담은 본격적인 회담을 앞두고 한국 측의 비공식적 문화재 반환 요청으로 협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된 문화재 반환 협상은 처음부터 한일 양국의 상호 불신으로 출발했다. 식민지 종주국에 대한 한국 측의 배상 요구와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본의 대화는 처음부터 엇갈린 대립각을 세웠고, 문화재 반환의 의사가 없었던 일본과의 협상은 문화재 관련 전문가 없이 외교원들 간의 논의만 약 10년이 넘게 진행됐다. 양측의 전문가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제대로 된 협상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채 문화재 반환 관련 협정은 조인됐다. 과연 왜 이런 협상이 이뤄진 것일까. 다음 절은 그에 대한 분석이다.

2)한일회담 교섭에 참가를 거부한 조선학 전문가들²²³⁾

220) 한국 외교문서 723.1JA 본 1951, 0085~0110 : 「일본출장보고서」(1951.9.10.) 이 작업을 준비하면서 재일조선인들의 구체적 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는 현재 파악되지 못했지만, 한일회담이 이들의 국적이나 지위를 논할 수 있는 장이었음과 이들의 도움으로 일본 내 약탈 재산들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221) 극동위원회란 패전한 일본을 관리하기 위해 연합국이 설치한 정책기관을 말한다.

222) 유진오의 보고서에서 극동위원회의 ‘대일정책’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한일회담 문서 중 ‘대일 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를 정리한 자료집에 의하면, 1945년 9월 22일자 ‘항복 후 미국 초기의 대일 방침’에 따라 ‘약탈한 재산은 약탈품인 것이 판명되는 한, 그 일절을 완전히 그리고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문서는 1945년 9월 6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다. 동 문서는 1945년 9월 22일, SCAPIN 제39호, 「연합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제국 및 그 국민의 재산 보호에 관한 각서」를 정리하고 있다. 유진오의 ‘대일 정책’의 기본 인식은 이 내용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문서 723.1JA, 자 1950, 0009~0058 :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1950.10)

223) 이 내용은 류미나,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관련 인물 연구-일본 측 문화재 반환 교섭 담당자

한일회담의 협상 항목 중 가장 긴 시간동안 협상을 진행한 문화재 반환 교섭은 한일협정 체결 직전인 1965년 6월 18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만큼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협상이었는데, 그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반도 출토 유물이 일본으로 유출된 것을 ‘정당한 구입’으로의 반출로 보는가의 여부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발표자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점에 다음과 같은 협상의 난점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싶다.

첫째, 이 교섭은 14년간의 교섭 기간 중 전문가들이 참석한 기간이 매우 짧아 충분한 논의가 어려웠던 점이다. 1951년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시작된 한국의 문화재 반환 요구는 1961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양측의 전문가들이 만나 논의하기 시작했는데,²²⁴⁾ 그 이전에는 외교 담당자들에 의해 진행된 교섭인 까닭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58년, 일본은 1953년에 불거진 ‘구보타 망언’²²⁵⁾을 잠재우고, 그동안 결렬된 한일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106점의 문화재를 한국에 전달했는데, 이것이 한일 정부 간 이뤄진 첫 문화재 반환이다. 이 때 일본 외무성이 전달하는 문화재 목록 속에는 ‘양산부부총’²²⁶⁾ 관련 유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 외무성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빚어진 사건으로 일본 문부성이나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뒤늦게 이를 알고 크게 반발했다. 이러한 해프닝은 한국 측에서도 유사하게 이뤄져 문화재적 가치를 모르는 한국의 외교관들이 가치가 없는 유물들을 ‘국보’로 대우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일본 측이 회담에 문화재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일본의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문부성 및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한국 측과의 교섭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문화재 반환 협상에 나섬과 동시에 문화재의 반환을 전제로 한 교섭에 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여겨 이를 거부했다. 1961년 2월 1일, ‘문화재소위원회’ 제2차 회합에서 이세키 유지로(伊関佑二郎) 주사는 한국 측이 수차례 요구한 일본인 문화재 전문가와의 만남을 주선하면서도 일본 문부성과의 충돌을 상정하고 이 만남들이 한일회담과는 관계없는 것임을 몇 차례나 강조한 바 있다.²²⁷⁾

둘째, 위와 같이 일본 측은 회담 자리에서는 공식적으로 문화재 전문가를 세우는데 주저하고 있었지만, 뒤에서는 문부성과 ‘문화재보호위원회’과의 긴밀한 연계를 작

들과 일본의 조선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한국학연구』vol63, 한국학연구소, 2017.12)과 2018년 10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224) 물론 1958년 106점의 문화재를 한국으로 반환할 때, 동경국립박물관의 고고과장 등이 참석을 하긴 했지만, 이는 문화재 반환을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닌, 반환이 확정된 문화재를 이동시키는 과정에 입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25) 구보타 망언은 1953년 제3차 한일회담에서 일본의 수석대표인 구보타 간이치로가 식민지 지배가 조선에 이득이 있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해 한일회담은 약 4년이 넘게 결렬된 바 있다.

226) 양산부부총 관련 유물은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한 대형 무덤으로 1920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처음 발굴됐다. 그 후 이 무덤에서 발굴한 유물들은 도쿄제실박물관(현재의 도쿄국립박물관)으로 반출됐으며, 한일회담 당시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다. 이 유물은 고대 한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 자료로 취급됐으며 지금도 도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27) 「第5次 日韓全面會談 豫備會談の文化財小委員會 第2次會合」1961.2.1. 북동아시아과.

동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측은 일본의 외무성만이 아닌, 그 뒤에 존재한 문부성 및 ‘문화재보호위원회’와 동시에 교섭을 진행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선행연구로 일본의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성격은 알려진 바 있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다카하시 세이치로(高橋誠一郎), 야시로 유키오(矢代幸雄), 호소카와 모리타쓰(細川護立) 등 당시 문화 예술계의 원로이자 大臣을 역임한 인물들이 소속 위원으로 있었던 정황을 볼 때, ‘문화재보호위원회’가 문부성의 하부 기관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영향력을 크게 발휘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²²⁸⁾ 더욱이 이 중에는 호소카와처럼 조선총독부의 유적 조사에 발굴비를 지원한 인물도 있었으니, ‘문화재보호위원회’가 한국으로의 문화재 반환을 거부한 것은 당연했다.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보존, 그리고 전시와 교육이란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일회담이 정치적으로 타협됨에 따라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1962년, 일본의 ‘문화재보호위원회’는 한국으로의 문화재 반환이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자, 그 선별 방식에 대해 매우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 1962년 2월 12일, 한국에서 반환받을 문화재를 선정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일본의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서무과장인 니시모리 가오루(西森馨)를 통해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한국 측이 받고 싶은 문화재 리스트를 내는 것은 자유이지만, 우리 측(‘문화재보호위원회’-발표자)은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권리 의무 관계와는 별도의 것으로, 일본 측 검토를 위한 참고로 외무성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싶다.²²⁹⁾

다시 말해, 한국 측이 제시한 선정 목록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 실질적으로 무엇을 한국에 반환하느냐는 일본 측이 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위원회’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일 뿐 아니라, 이미 1953년에 ‘(한국으로의-발표자) 반출 품목의 범위 등은 일본 측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²³⁰⁾

이에 대한 한국 측 반응은 자세한 기록이 없어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이 목록이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일본 측과 대화한 내용에 근거²³¹⁾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은 한일 간 외교문제이기도 하지만, ‘문화재보호위원회’의 협의 없이 외무성만의 독단으로는 교섭이 진행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일회담에서의 문화재 반환 교섭은 단순히 한일 간 외교차원의 문제가 아닌, 식민지 지배의 실체와 그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의 차를 그대로 드러낸 장이라고 할

228) 류미나, 「한일회담 외교문서」로 본 한일간 문화재 반환 교섭, 『일본역사연구』30집, 2009.12.

229) 「(極秘)日韓會談文化財小委員會に關する件」1962.2.12. 북동아시아과.

230) 「世襲的文化財に關して」1953.2.17. 西기록

231) 「日韓會談文化財小委員會主事非公式會談記錄」1962.2.1. 북동아시아과.

수 있다.

한국 측은 교섭 중 반환받고 싶은 문화재들의 유출 경로와 그것이 반출된 것이 불법이었음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회담의 출발이 한국전쟁 중이었고,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지 약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진행된 교섭이었음을 상정할 때, 이는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민지 지배를 통해 문화재 관련 전문가 양성에 조선인은 배제되어 있었던 바, 한국 측이 문화재들의 유출 경로나 불법 반출을 증명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런데 일본 역시 일본 내 조선의 문화재가 어느 정도 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따라서 외무성은 자연스럽게 조선 관련 연구자들의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회담 표면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회담의 진행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2. 한일회담에 대한 일본 내 학계의 동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협상은 문화재란 특수한 대상을 취급하는 까닭에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한 교섭이었다.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과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의 조언자로 활약한 인물 중, 대표적인 연구자는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와 다가와 고조(田川孝三), 그리고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인데, 이들의 연구 활동은 조선을 기반으로 해 조선 학계에서는 최고의 실력들을 갖췄다.

이들은 한국에서 유출된 문화재에 대해 ‘정당한’ 구입으로 판단했고, 그것은 증거 자료들로 입증됐다. 예를 들어 조선의 고서 전문가이자 역사가인 스에마쓰 야스카즈는 한국이 주장하는 ‘약탈된 문화재’란 인식에 대해, ‘데라우치문고’를 한국으로 반환하면서 조선인이 데라우치 총독에게 헌상한 도서임을 증명하는 편지들을 동봉해, 이 문고의 도서들이 약탈품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²³²⁾ 스에마쓰와 함께 자문 역할을 한 다가와 고조 역시 한반도에서 반출한 ‘데라우치문고’의 도서들이 약탈이 아닌 증거를 찾기 위해 직접 야마구치를 방문해 조사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약탈’의 입증이 가능한 것이라면 한국으로 반환해도 좋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는 한국으로의 문화재 반환을 저지하거나 혹은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들은 한국 측 문화재 전문가들의 활동에 협력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다가와 고조의 경우, 한국 측 문화재 반환 교섭자인 이흥직에게 ‘데라우치문고’의 방문 절차를 안내했고, 그에 필요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²³³⁾ 이흥직 역시 당시를 기록한 회상록에서 “일본 학계에 구지(舊知)가 많은 관계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언급했다.²³⁴⁾

232) 「文化財協議會」1965.3.16. 북동아시아과.

233) 「李弘植(日韓會談文化財代表)山口女子短大の寺内本および千葉市の小倉コレクション視察希望について」1965.5.27. 북동아시아과.

234) 이흥직『한 史家の 流薫』通文館, 1972, 132쪽

하지만, 스에마쓰가 ‘데라우치문고’에 대해 “당시 이 정도의 도서 수집은 데라우치 총독만이 아닌 많은 사람이 행한 일”²³⁵⁾이라고 발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조선에서 문화재나 고서적 등을 수집하고 이를 일본으로 반출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 밖으로의 문화재 유출이 단속되기는 했지만, 학술적 조사 등으로 조선의 문화재들이 일본으로 반출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식미지기 조선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결국, 스에마쓰의 주장대로 한일회담 결과로 한국에 반환된 ‘데라우치문고’는 관인(官印)이 찍힌 것으로 제한됐고, 나머지는 1995년에 반환됐다. 이 때 마지막 문화재 반환 리스트를 검토한 것 역시 스에마쓰였다.²³⁶⁾

일본 외무성의 자문을 하면서 한국 측으로의 문화재 반환 요구에 거부감을 강력하게 나타낸 인물은 우메하라이다. 그는 한일회담에서 문화재 반환을 언급하는 것 자체에 크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새롭게 시작한 일한 양국 간의 국교 조약의 체결에 있어, 말도 안 되는 (한국정부에 의한-발표자)일본 내 반도 유품의 반환 요구가 당초 일본 측 관계자(일본 외무성-발표자)의 안일한 일부 출토품의 반환(1958년의 106점 반환-발표자)으로 문제가 됐고, 끝내 조사(조선총독부 주도의 유적조사-발표자) 그 자체의 비난마저 그 땅에서의(조선에서의-발표자) 정책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²³⁷⁾

즉,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이 주장하는 문화재 반환은 인정할 수 없으며, 외무성의 실수로 1958년에 106점을 반환한 것은 당초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우메하라는 교토제국대학 출신이며, ‘일본 근대 고고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의 제자이다. 그는 1918년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고적조사사업을 담당했는데, 이 때 그를 지도한 학자는 나이토 토라지로(内藤虎次郎), 기다 사다키치(喜田貞吉), 이마니시 류(今西龍) 등이었다. 그리고 근대 일본역사학의 공로자인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는 우메하라와 함께 조선 내 유적 발굴 조사를 했다.

이러한 경력의 소유자인 우메하라는 한일 간의 문화재 반환 문제를 ‘말도 안 되는’ 일로 취급한 것은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문화재 발굴 사업에 대해 ‘善’이란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연구자로서 조선의 문화재를 ‘보호’한다고 생각해 자긍심을 가졌다.

이는 우메하라만의 생각이 아니다. 이미 이러한 인식이 일본학계에 만연해 있었고,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문화재 발굴 사업 등이 ‘조선의 문화재를 보호했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측의 문화재 반환 요구가 일본 학계를 당혹케 할 수 있었다.

235) 「寺内文庫本の韓国への寄贈に関する末松博士の意見」1965.3.20. 북동아시아과.

236) 『学習院大学東洋文化研究所調査研究報告』第56号, 学習院大学東洋文化研究所, 2012.3.1.

237) 梅原末治「日韓併合の期間に行われた半島の古蹟調査と保存事業にたずさわった一考古学徒の回想録」『朝鮮學報』第五十一輯, 朝鮮學會, 1969, 148쪽.

지금 여기에 반도에서의 과거 문화연구와 보존과의 실재를 떠올려, 곤란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널리 식자를 통해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동시에 반도의 사람들에게 이 점만은 영구히 기억할 것을 부탁하고 싶다. (중략)고의로 선전이나 악평으로 일본의 반도통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이 이미 이러한 바와 같으니 문화 사업을 위해 바친 긴 세월의 노력과 그 공적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한마디 끼어들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²³⁸⁾

위의 발언은 1951년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의 것으로, 그는 1923년 조선총독부에 부임하여 고적조사사업을 관리하고 1925년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의 수사관으로 활동했으며, 1926년에는 경성제국대학의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후지타의 발언 시기가 조선이 해방을 맞이하고 약 6년이 지난 시기였음을 고려할 때, 식민지기 조선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진행된 문화재 발굴 활동이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다. 즉, 후지타의 말처럼 조선에서의 문화재 발굴 활동들은 조선의 문화재를 ‘보호’한 것이고, ‘긴 세월의 노력과 그 공적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한마디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1960년대의 우메하라의 입을 통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조선 문화재의 보호’란 믿음은 조선인이나 조선의 역사를 배제하고 있음은 물론, 근대 국민국가에서의 역사학이나 고고학의 역할을 오히려 저평가하는 일일 것이다. 학문적 견지에서 벌인 조선에서의 문화재 발굴이 조선인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됐는지, 또는 일본인들의 문화재 ‘보호’ 의식이 일본제국주의 속에서 어떻게 이용됐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활동의 결과가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한 사람의 조선인 문화재 전문가가 양성되지 않았고, 여전히 조선총독부의 자료로 한일회담을 준비한 한국 측의 상황을 한일회담 당시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기반에서 진행된 한일회담에서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양국의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메하라와 스에마쓰가 한일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자신들이 소장했던 문화재들을 기증했다는 점이다. 우메하라의 경우, 1962년 9월 3일, 주한미국공보원을 통해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고고학 자료를 서울대학교와 하버드연구원, 그리고 게이오대학에 기증했다. 이는 당시 우메하라가 록펠러 재단의 원조를 받아 한반도의 고고학 연구에 착수했고, 자신이 소장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²³⁹⁾ 또한 스에마쓰는 1966년 6월, 역시 자신이 소장한 ‘서화담집’과 ‘입학도설’, 그리고 ‘전등신화구해(剪燈新話口解)’를 주일대사관을 통해 서울대학교박물관에 기증했다.²⁴⁰⁾

이들이 한일회담 당시 발언한 내용과 기증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들의 연구 활동이나 조선의 문화재 애호 의식 속에 조선인과의 연관성을 어느

238) 藤田亮策「朝鮮古文化財の保存」『朝鮮學報』제1집, 조선학회, 1951년, 246쪽

239) 「우리의 考古學 資料 기증」, 경향신문, 1962.9.3.

240) 「花潭先生集 등 古書 기증」, 동아일보 1966.6.4.

정도 평가해야 할지는 의문스럽다.

3. 한일회담에 대한 한국 내 인식

1)한일회담과 국사교육의 강화

한일회담에 대한 한국 학계의 인식은 어떠했을까.

거칠게 말하자면, ‘일본의 문화적 · 역사적 내습(來襲)’으로 본 흔적이 매우 강하다. 이는 한일협정이 체결된 후 일본과의 교류가 시작되면 해방 후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위협이 된다는 의식이 저변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김용섭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일제 치하에서 식민사학을 청산하는 문제는 사상의 문제이자 선학의 학문을 비판하는 문제였으므로 최소한의 학계의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런 일이 추진되기까지의 세월이 필요하게 되었다.

1960년대를 기다려야 했던 것은 그 이유이다. 그런 가운데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전에도 언급한 한일회담의 재개이다. 한일회담이 재개되고 한일 간 국교조약이 체결되는 변화가 생기면서 한국사학과 학계에 일본제국주의 망령의 과거사를 상기시키고, 이들의 새로운 내습에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²⁴¹⁾

상기의 인용문을 볼 때,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은 식민지기 조선에서의 식민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발전했는데, 한일회담으로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면 다시 한 번 일본의 학문적 ‘내습’이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읽을 수 있다.

김용섭의 발언을 뒷받침하듯, 1960년대를 전후로 한 한국 내 역사학계의 움직임은 일본의 그림자를 지우기라도 하듯, 일본식 명칭을 변경하거나 한국사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예를 들어 1959년에는 국립박물관에서 일본식 명칭을 모두 다른 용어로 대체했고,²⁴²⁾ 1962년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됐으며, 동년 동아일보에서는 ‘국보 순례’란 시리즈물이 게재되기 시작했다. ‘국보 순례’는 한국 내 국보나 그 외 보물, 유적지 등을 사진으로 소개하면서 그의 역사와 전승된 이야기를 게재한 것으로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목적을 가졌다. 이 ‘국보 순례’는 1962년 11월 14일부터 게재해 다음 해인 1963년 5월 15일에 마쳤다.

그런데 이 시기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도굴이 끊이지 않았고, 여전히 해외로의 문화재 반출이나 재벌가들의 문화재 은닉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상황에

241) 김용섭, 『김용섭 회고록-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해방 세대 역사 연구자의 역사 강의』, 지식산업사, 2011.3.

242) 「倭色·煩雜한 말 一掃 古蹟 등의 명칭 변경」, 동아일보 1959.6.3.

서 한일회담으로 인한 일본과의 교류는 식민사학의 극복을 과제로 안은 한국 역사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자아낼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된다.

한일협정이 체결된 다음 해인 1967년, 한국에서는 학술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사 연구회’ 창립됐다. 이 연구회에서는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와 분리가 논의됐고, 1969년 3월 서울대학교에서는 문리대학교 사학과에서 국사학과를 분리했다.

이상의 활동은 당연히 박정희 정권 내 국내적 요인도 있었겠지만, 한일 간 국교정상화에 따른 역사학계의 변화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며, 또다시 일본과 마주하게 될 시대적 변화에 국사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결과물로도 볼 수 있다.

2) 일본인 관광과 끊이지 않는 문화재의 도굴 문제

한일협정으로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 되자 ‘옛 고향’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조선에서 나고 자란 일본인들을 상대로 관광산업이 급증하여 1965년에는 한국 내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인의 비율이 15%에 지나지 않았지만, 70년에는 30%, 73년에는 70%에 이르렀다.²⁴³⁾ 그리고 이들 일본인 관광객 중 남성의 비율은 70%에 달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의 일본인들, 특히 일본 남성들의 한국 관광은 ‘기생 관광’이란 사회적 문제를 생산했다. 1973년 12월에는 ‘일본인 남성들의 기생 관광을 반대한다’는 일본인 주부들의 김포공항 데모 사건²⁴⁴⁾까지 일어날 정도였으니 그 병폐가 어떠한 지는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그런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증가하자 ‘유적지의 관광화’가 가속화되면서 문화재 보호에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예를 들면 1969년 12월 17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충무공의 유물과 창덕궁의 보물을 훔쳐 일본인에게 건네려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으며,²⁴⁵⁾ 창경궁에는 음식점이 허가돼 시민들의 비판을 받는 일도 생겼다.²⁴⁶⁾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재 보호라는 의식이 저조했고, 일본인과의 교류가 시작되자 식민지기 조선에서 자행됐던 도굴과 밀반출과 같은 행위가 빈번했음을 볼 수 있다.

발표자는 과거 논문에서 이 문제에 원인이 식민지기 조선에서 조선인을 배제한 문화재 관리 시스템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²⁴⁷⁾ 조선인의 참여부로서만 활동했고, 문화재의 발굴이나 그 외 연구, 수리, 보존, 전시 등의 모든 운영에서 배제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근무한 아리미쓰(有光)는 해방 직후, 미군정에 명령으로 46년까지 한반도에서 조선인을 위한 박물관 교육을 담당했다. 그는 한반도 내 유물을 다룰 수 있는 조선인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음을 보고했고, 이를 문제로 여긴 미군정청에 의해 조선에서의 교육을 담당하게 됐다.²⁴⁸⁾

243) 김진탁, 「한국 관광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과 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관광학연구』5권, 1982.

244) 「日 婦女 20여명 空港서 데모 ‘日本 男性의 기생 觀光 반대」, 동아일보, 1973.12.26.

245) 「한심한 文化財 管理 상황」, 동아일보 1969.12.17.

246) 「퇴색 水晶宮 방치 美觀 해쳐」, 동아일보 1978.5.10.

247) 류미나, 「일본의 문화재 반환으로 본 식민지 지배의 잔상과 청산의 허상」, 『일본역사연구』32집, 2010.12

따라서 조선인의 손으로 한반도의 유물이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미군정이 시작됐을 때부터였음을 상기할 때, 1970년대에 한국인의 의해 이뤄진 도굴이나 밀반출과 같은 사건은 당시 문화재에 대한 보호 인식이 저조한 한국 사회의 현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248) 有光敎一, 『朝鮮學事始め』, 靑丘文化社, 1997, 189~190쪽.

결론을 대신하며

- ‘시민이 만드는 일한회담 ·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활동

이상, 한일회담을 전후로 한 한국과 일본의 상황과 문화재 반환 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한일 간 문화재 반환 문제가 어떠한 기반 위에 발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다. 이러한 상황만을 생각한다면, 양국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화해’의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평행선을 달리는 양국의 입장이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발표자는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시민이 만드는 일한회담 ·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2005년 8월 26일, 노무현정권에 의해 한일회담 관련 한국 측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같은 날 일본에서는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과 변호사들이 모여 ‘일본정부에 대한 일한회담 관련 문서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조선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게 하며,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의한 한국·조선인 피해자 및 유족에의 사죄와 보상을 실현시킨다’는 취지 아래 ‘일한시민이 만드는 일한회담·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결성됐다.²⁴⁹⁾

이들은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연구회, 그리고 회원 모집을 통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교문서 공개를 요구했고, 소송과 재판을 이어갔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2006년 8월, 제4차 일한회담 회의록이 부분적으로 공개됐고, 지금까지 약 10만 장이 넘는 외교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모임은 2016년 12월 23일에 활동을 종료했지만, 이후에도 공개된 외교문서들의 아카이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임은 정부나 기업, 그 외 어떤 곳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시민들의 모임이다. 발표자는 정부 간의 협상이나 충돌은 ‘국익’이란 굴레를 벗을 수 없으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활동은 충분히 양국의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임에서 확신하고 있다.

이 모임의 주요한 협력자이자 아카이브 시스템의 운영을 맡아온 이양수(李洋秀)씨는 문화재 반환 문제의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일회담으로 체결된 ‘한일협정’ 중 문화재와 관련된 협정에는 청구권협정에 명기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없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한일 간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²⁵⁰⁾

그러나 발상의 전환은 일본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역시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현재 한일 간의 문화재 반환 문제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 주로 무엇을 ‘반환’받았는가, 혹은 받을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일본에 있는 한반도 출토의 문화재들이 모두 ‘약탈당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조선 각지를 돌

249) 日韓市民でつくる「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

<http://www.f8.wx301.smilestart.ne.jp/kai/kihonhosin.html>, 2019년 5월 31일 검색

250) 이양수, 「『発想の転換』紛争から友好へ」毎日新聞, 2016.7.11.

며 땅을 파고 유물을 발굴한 일본인들의 모습을 강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그 기억 속에는 조선인들에 의해 일어난 수많은 도굴과 조선인 스스로 일본인에게 문화재를 매매하거나 혹은 상납한 흔적들이 지워져 있다. 이 문제 역시 한 일 간 문화재 반환 문제를 다루는데 피할 수 없는 연구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도난 문화재들의 원산지 이관이 이전보다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매우 유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양수씨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도난 문화재들의 원산지 이관을 명시한 1970년의 ‘유네스코 조약’에 한일 양국 모두 30년 넘게 조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화재 반환 문제가 자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해’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대마도 불상’ 사건과 같이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다면, 결코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만약 북한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비록 한국이 협상의 당사자가 되진 못할지라도 한일협정에서 불리하게 체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상호 공감 가능한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